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2-01

전라북도 수산업 · 어촌 지원조직 활용방안 연구

나정호 조원지 정호중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2-01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지원조직 활용방안

나정호 조원지 정호중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책임	나정호	연구위원	연구총괄, 제5장
공동연구	조원지	부연구위원	제1장 2절 일부, 3장 2절 일부, 4장 3절 일부
	정호중	전문연구원	제1장 2절 일부, 2장(1절, 2절) 일부

자문위원	김동주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형섭	군산대학교	교수, 전북씨그랜트센터장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어항연구실장
	박은옥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철	부경대학교	교수
	이서구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해양개발팀장
	이은미	전라북도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산업혁신본부장
	채동렬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최지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역균형·관광연구실장

연구관리 코드 : 21JU25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직 활용방안을 제안하여 어촌 활성화와 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데 있음.
 - 행정조직 연계 가능성과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유관기관 연대·협력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발전을 도모함.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연계, 협력 효과를 바탕으로 지역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력 제고 기대

1. 수산업·어촌발전 선행연구

- **(수산업·어촌 발전정책 지속성 유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규정에 따라 국가기간 산업인 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어촌사회 지속성 강화 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 **(전북형 수산업·어촌 발전모델 구상 필요)**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에 따라 지역 특화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한 수산업 발전 기반 조성 필요
- **(농촌사회 현안문제 해결방안 활용)** 인구감소, 어업인력 고령화, 열악한 인프라, 생활 서비스 제공 한계 등 어촌사회 현안문제 해결방안 모색에 농촌사회 선행연구 시사점 활용
-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주체의 연계성 강화, 정책성과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음.

2.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정책사업 성과와 과제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정책사업 성과

- (수산업·어촌발전정책사업 만족도 양호)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정책사업 수혜자 만족도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음.
- (수산업·어촌발전정책사업 이행체계 고도화) 전라북도 소관부서 조직개편으로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수산업·어촌 발전 정책사업 추진 체계를 고도화함.
- (수산업·어촌발전 신규정책사업 발굴과 추진 한계)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 활용사업을 제안하거나 정부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자원 투입에 한계가 있음.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정책사업 과제

- (전북형 수산업·어촌 발전사업 구상 필요) 전라북도 지역 특화자원 발굴과 국가사업화 전략 수립 필요
 - 전라북도의 수산업·어촌 발전 정책사업은 기존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신규사업 발굴·추진으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함.
 - 전라북도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사업의 하향식(top-down) 구조와 조화로운 상향식(bottom-up) 제안사업 구상 지원 방안 모색
- (광범위한 수산업·어촌 발전 사업에 따른 지자체 한계 극복) 현 체계에서 지역 해양수산 현안의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거나, 추진 가능한 실험적인 정책사업을 발굴·제안할 필요성이 있음.
 - 지자체에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규정에 따른 정책사업 담당자를 배정하는데 조직 규모와 행정구조의 경직성에 따른 한계가 있음.
 -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전라북도에서 이행하지 못하지만 필요한 정책사업에 대한 추진전략 수립

- **(행정조직과 지원조직 협력방안 모색)** 행정업무 수요에 대응하여 단계적으로 전문인력을 확충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병행해야 함.
 - 단기적 수산업·어촌 발전 사업추진과 행정조직 비탄력성을 극복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활용, 관련 조직 간 협력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조직은 설립목적에 따른 분명한 사업범위와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한 정책사업 목적달성과 사업 간 연계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전라북도 어촌 활성화 추진동력 육성)** 어촌뉴딜 300사업 등으로 조성된 어촌 거점 인프라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 주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어촌 거주인구, 수산업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귀어·귀촌 희망자를 적극 유치하고, 귀어·귀촌자가 지역 사회에 빠르게 융화되도록 지원
 - 전라북도 어촌지역에 유입된 청년, 도시생활인, 은퇴자 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어촌 활력에 기여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3. 사례연구 시사점

■ 안정성·지속성과 창의적 시도

- **(공공참여에 따른 지속성 강화)**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본 수산업·어촌 및 타 분야의 활력 제고를 위한 구심점은 공공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 참여가 뒷받침됨.
- **(법·제도적 완비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동력 확보)** 지역 산업 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완비되면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민간의 전문성과 사업화 역량)**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영역의 지원 토대에 민간의 전문성과 사업화 역량이 결합되어 시너지 발생 기대

- (지속가능성 담보→ 다양한 창의적 시도) 공공영역 지원 기반에 민간의 창의적 시도가 지속되어 궁극적인 지역 활력 목표 달성 가능
- (민·관 협력체계로 창의성과 지속성 결합) 전문성과 창의성을 보유한 민간과 공공영역의 결합은 상호보완 효과를 유도

■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자립화

- (지역사회 자원 활용) 공간적 개념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화 모델과 확산 과정에 지역사회 농림어업, 문화, 예술, 역사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
- (지역인재양성과 전문가 활용) 로컬벤처 운영을 위한 전문가 확보,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단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 특성화 산업·문화 조성) 외부에서 유입되는 로컬벤처, 문화가 지역사회와 융화되어 특성화 산업 체계,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음.

■ 지역자원을 활용한 로컬벤처 지원

- (로컬크리에이터 작업공간과 예산 지원) 로컬크리에이터가 필요로 하는 작업공간, 예산 등 지원제도를 통해서 로컬벤처 사업화 유인
- (다양한 정책사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다양한 정부부처, 지자체 지원사업을 적절히 활용하여 로컬벤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함.
- (로컬벤처 공급망 설계) 로컬벤처의 특성화와 자립을 위해 지역자원 활용, 지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로 공급망 설계 필요
- (지역자원을 활용한 준비 지원) 지역 이해, 지역 주민과 융화, 사업화 성공모델 등 로컬벤처 사업화를 위한 지역공동체의 지원이 성공적 안착을 유도함.

■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상향식 제안

- (지역 수산업·어촌 현안대응 참여) 지역 수산업자, 어촌 주민이 지역 현안대응에 참여하도록 지원함.
- (상향식 정책제안과 추진 참여) 지역자원과 여건을 고려한 상향식 제안과 직접 추진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

■ 네트워크 역량 강화

- (다양한 주체 연계 네트워크) 농산어촌, 지방소도시 공간적 개방과 다양한 전문 분야 집단의 네트워크가 창의적인 시너지를 유발할 수 있음.
- (고유사업과 연계·협력)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성원 간 고유사업에 집중하되, 사업 간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 유도
-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공동가치 제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결성된 공동체 내부 결속력 제고와 함께 유사한 목적의 타 지역 공동체 간 협력 유도

4.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조직 추진과제 제안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전담지원조직 필요성

- (수산업·어촌발전 관련 조직 업무한계)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을 위한 기존 지원 조직은 관련 법 규정에 의거 명확한 업무범위가 설정되어 있음.
- (전라북도 수산업자·어촌주민 지원)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수산업자와 어촌주민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수산업과 어촌공간 전문성 활용방안 검토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행정조직 지원) 광범위한 영역의 확정된 수산업·어촌발전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영역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함.

- (전북형 수산업·어촌발전 모델 구상)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브랜드 사업을 통해 지역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거버넌스 체계 구축) 수산업·어촌발전 정책사업 만족도를 향상하고 수산업자와 어촌주민 역량 결집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 (수산업·어촌발전 정책사업 이행체계 고도화) 관련법에서 규정한 수산업·어촌발전 신규사업과 행정조직의 비탄력적 특성을 보완하여 이행체계 고도화
- (전북형 수산업·어촌발전 신규사업)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현안 대응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차별화된 전북형 신규사업 발굴 필요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전담지원조직 유형 검토

- 이 연구에서는 공공주도형, 민간위탁형, 민·관협력형 등 각 운영형태별 특성과 주요 사례, 장점과 단점, 단점 극복방안 등을 살펴보았음.
- 전문가 자문의견을 종합한 연구진의 제안은 민·관협력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됨.
- 일부 전문가는 현재 운영 중인 지원조직 운영 활성화와 공간 관점의 연계·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전담지원조직 설립 여부를 결정하자는 견해를 제시함.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조직 추진과제 제안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조직 운영목표는 전라북도 여건에 적합한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 지속성 제고와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함.
- (추진전략 1)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발전기반 조성전략
 - ①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 ②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수립
 - ③ 전북형 수산업·어촌발전 사업 추진

○ (추진전략 2) 전라북도 수산업 발전 지원전략

- ① 전라북도 수산식품 제품·조리법 개발
- ② 친환경·스마트 양식기술 교육·훈련 지원
- ③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경영컨설팅 지원단 운영

○ (추진전략 3) 전라북도 어촌 활성화 지원전략

- ① 전라북도 어촌생활학교 운영
- ② 전라북도 해양교육문화종합센터 운영
- ③ 씨푸드 테마거리 조성·어촌맛지도 제작

차 례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제2절 선행연구 6

제2장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현황과 과제

제1절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현황 19
제2절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활성화 추진사업 성과 34
제3절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활성화 과제 44

제3장 사례연구

제1절 수산업·어촌 활성화 조직운영사례 63
제2절 유사분야 사례 74
제3절 사례연구 시사점 88

제4장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조직 활용방안

제1절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전담지원조직 필요성 검토 97

제2절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전담지원조직 활용방향 111

제3절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조직 추진과제 114

제5장 정책제언

제1절 연구요약 137

제2절 정책제언 144

참고문헌 151

표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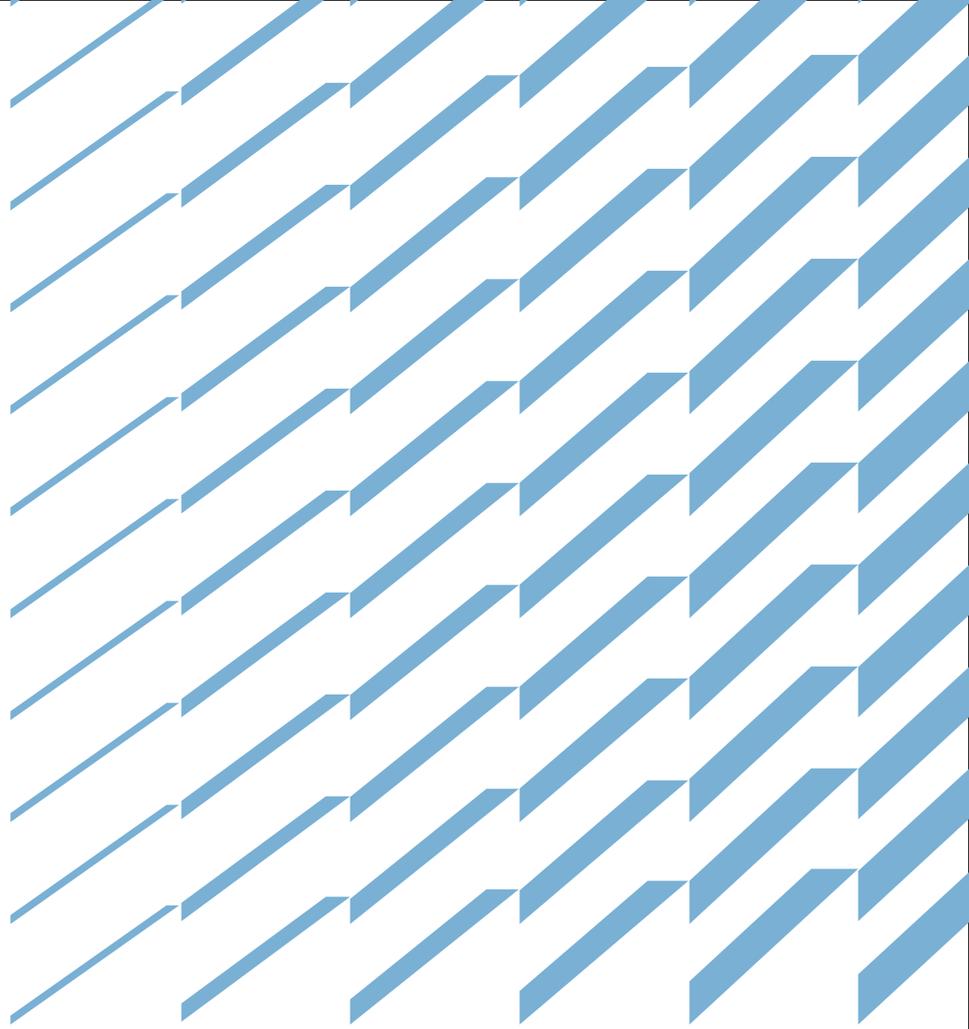
LIST OF TABLES

[표 1-1] 수산업·어촌 관련 선행연구 검토	8
[표 1-2]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경쟁력 제고 관련 선행연구 검토	11
[표 1-3] 귀농어·귀어촌 및 농어촌 현안문제 관련 선행연구 검토	14
[표 2-1] 전라북도 어가·수산업 종사자 인구 현황	20
[표 2-2] 전라북도 어항현황(2020년)	21
[표 2-3] 전라북도 어업별 수산물 생산현황	21
[표 2-4] 전라북도 품종별 수산물 생산현황	22
[표 2-5] 전라북도 어업법인 현황(2020년 7월 기준)	22
[표 2-6] 전라북도 수산물 가공업체 현황(2019년)	23
[표 2-7] 전라북도 내수면 양식장 현황(2019년)	25
[표 2-8] 전라북도 내수면어업 생산현황(2019년)	25
[표 2-9] 전라북도 어촌체험마을 현황	26
[표 2-10] 우리나라 귀어인 통계	28
[표 2-11] 전라북도 귀어·귀촌인 현황	28
[표 2-12] 농산어촌인구 추이	29
[표 2-13] 농산어촌 고령인구비율 변화	30
[표 2-14] 전라북도 어촌뉴딜300사업 선정현황	31
[표 2-15] 전라북도 1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경과	32
[표 2-16] 전라북도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경과	33
[표 2-17] 전라북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분야 사업추진현황	33
[표 4-1]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조직 추진과제 종합	133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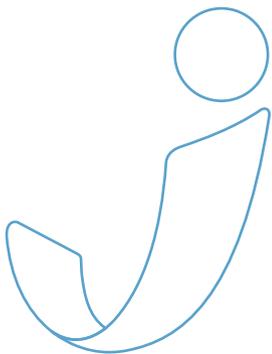
[그림 2-1]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활성화 정책사업 성과	43
[그림 2-2] 전라북도 어촌특화지원센터 주요전략과 세부사업	47
[그림 2-3] 전라북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단계별 지원사업	49
[그림 2-4]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활성화 과제	60
[그림 3-1]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역할과 협력체계	79
[그림 4-1]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전담지원조직 필요성	100
[그림 4-2]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전담지원조직 유형 검토	108
[그림 4-3]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전담지원조직 활용방향 구상	113
[그림 5-1]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전담지원조직 추진과제 기대효과	147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수산업·어촌발전정책 지속성) 정부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제정함.
 - 수산업·어촌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1조).
 - “수산업”은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이며, “어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고로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함(같은 법 제2조).

- 국가기간산업으로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수산업이 이루어지는 어촌은 어촌 활성화와 수산업 발전의 공간으로 중요성이 높음.
 -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기반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관련 법 제3장, 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부 계획은 관련 법 제4장 어촌지역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규정하고 있음.
 - 가족어가 경영안정, 수산업 종사자 육성(제15조), 후계수산경영인 육성(제16조), 전업수산인 육성(제17조), 여성수산인 육성(제18조), 수산업 조합법인과 회사법인 육성(제19조), 벤처수산업 육성(제20조), 귀어업인 육성(제21조), 수산업 단체 육성(제22조), 수산업 생산기반 정비(제23조),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과 기계화, 시설현대화(제24조), 친환경 수산업 촉진(제25조), 어업경영체 경영안정과 구조개선 지원(제26~27조), 수산업 재해예방과 복구(제28조), 수산업 유통구조 개선(제29조), 수산업 관련 연구·기술개발(제30조), 지식재산권 보호(제31조),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제32조), 전담기관 운영(제33조) 등의 사항이 규정됨.
 - 수산자원·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제34조), 어촌 자연환경과 경관 보전(제35조), 전통어로문화계승(제36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연구·홍보(제37조),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제38조), 어촌지역산업 진흥과 개발(제39조), 도시와 어촌 교류 활성화(제40조), 수산업 및 어촌지역 정보화 촉진(제41조) 등의 사항이 규정됨.

○ (수산업·어촌발전을 위한 전라북도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와 협력하여 수산업·어촌 종합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국가와 지자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 종합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제4조 제1항).
- 수산인과 어촌주민은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의 실질적 주체로서 고품질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생산자 단체는 수산물 수급 안정과 유통개선, 경영 효율화, 공익기능 제고 등을 추진해야 함(제4조 제2항, 제3항).
 - 소비자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에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제4조 제4항).

○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물 조직개편 방향성에 부합한 다양한 수산업·어촌 발전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조직 활용 필요(나정호 외, 2021)

-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물 조직개편으로 수산정책분야의 전문성 제고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수산업·어촌 분야 세분화, 행정인력보강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 행정조직 세분화, 인력 보강 등이 추진되지만 단기적으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한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력 제고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지역 해양수산 자원을 활용한 특화전략을 수립하여 한정적인 행정조직과 인적자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함.
 - 광범위한 수산업·어촌발전 정책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임시조직, 지원조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현실적 한계 대응전략) 관련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업·어촌 종합정책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음.

-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에서 “수산업 육성”, “수산과학기술 육성”, “어촌주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등의 정책사업을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도록 규정됨(「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 제25조, 제26조, 제27조).
-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의 범위가 넓으므로 지자체 단독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지자체 자원 특성에 따른 행정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음(나정호 외, 2021).

-
-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직 활용방안을 제안하여 어촌 활성화와 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데 있음.
 - **(행정조직 연계 가능성)** 구체적으로 전라북도 수산정책과가 다양한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 정책 사업을 구상·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유관기관 연계·협력)** 전라북도 어촌특화지원센터, 전라북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전북씨그랜트센터,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고유기능을 강화하고 협업을 유도하여 현장 적용 가능성과 지속성을 높이고자 함.
-
- **(기대효과)**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연계, 협력 효과 제고를 바탕으로 지역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위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 농산어촌 과소화 예방 효과 기대, 농생명 수도를 지향하는 전라북도의 특화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제2절 선행연구

1.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경쟁력 제고

-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으로 「해양수산업발전기본법」,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등 관련법에 육성근거를 두고 있음.
 - 국내 해양수산업 여건과 글로벌 트렌드에 적합한 해양수산업 정책을 제안하는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 지원정책 연구가 추진됨.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3조에 규정된 전담기관 관련하여 수산업과 어촌 정책사업을 총괄하는 전담기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됨(김대영 외, 2016).
 -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를 위해 개별 사업을 통합관리하여 연계효과를 높이고, 농업분야의 “농림수산물 품교육문화정보원” 사례를 벤치마킹함.
 - 현재 통합전담기관은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정부 주도로 전담기관을 설치하더라도, 지역의 원활한 사업 관리를 위한 지자체 주도 기관 필요성 검토
- 수산업과 어촌 환경변화와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는 미래 수산업·어촌 정책방향 연구결과 수산업과 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강화하고, 현안문제 해결과 적극적인 4차산업혁명시대 대응이 필요함(김대영 외, 2017).
 - 전통적인 수산업의 국가기간산업지위가 위축되고 있으며 어촌지역의 고령화, 인구감소로 어촌활력 저하 문제해결이 시급함.
 - 본원적 기능 외에 수산업과 어촌의 다원적 기능 발굴과 강화를 통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 창출 필요
- 수산업·어촌 분야에 사회적 경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사회적 경제 도입 제약요인 해결이 필요함(류정곤 외, 2019).
 - 사회적 자본과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함.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 SOC 확충과 정비, 사회적 수산업 활성화 정책 등이 대표적인 수산업·어촌 사회적 경제 도입 사례로 제시됨.

-
- 어촌의 사회적 경제 환경변화에 따라 중요해진 어촌공동체의 활력제고를 위한 장단기 전략을 연구함(김대영 외, 2018).
 - 단기적으로 기존 어촌계를 중심으로 어촌공동체 활력제고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바다마을 공동체”로 확장된 어촌공동체 발전모델을 제안함.
 - 중장기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는 바다마을 공동체 형태로 어촌공동체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사업 필요성을 주장함.

 - 농업농촌 분야의 활발한 공익적 가치 발굴과 평가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의 개념을 제시함(류정곤 외, 2017).
 - 수산업·어촌분야에서 6개 영역 14가지의 공익적 가치를 발굴하였고, 구체적인 공익적 가치 측정방법을 제시하였음.
 - 수산업·어촌의 본원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수산업·어촌 지원정책을 유도함.

 - 어촌뉴딜 300사업 이후 새로운 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기 위하여 스마트 어촌 구축방안을 연구함(박상우 외, 2019).
 - 인구감소, 고령화, 안전재해, 삶의 질 등 어촌지역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촌뉴딜 300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첨단기술이 다양한 영역에 접목되는 상황에 맞추어 어촌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스마트 어촌 기반구축과 확산방안을 제안함.

 - 어촌사회의 지역소멸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촌사회 정책연구를 추진함(박상우 외, 2018).
 - 인구감소,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등 어촌마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촌주민과 도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함.
 - 어촌의 지역소멸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제도, 일자리 플랫폼, 커뮤니티 기능 강화, 소멸위험지역 활력 제고 등 대응전략을 제시함.

○ 다문화가정이 어촌공동체 구성원이자 어촌 발전 참여자로 융합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제안함(이승우 외, 2016).

- 다문화가정 구성원은 출신 지역의 지식과 경험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음.
- 법·제도 개선, 거버넌스, 관계부처 협력 등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지원사업을 제안하고, 어촌공동체에서 이질감을 극복하고 융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표 1-1] 수산업·어촌 관련 선행연구 검토

구분	세부내용		
	연구개요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	과제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운영 방안 연구자: 김대영·안지은(2016) 연구목적: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근거한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방안 제시	문헌조사 사례조사 전문기자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수산업·어촌 정책 수요 확대에 따른 전담기관 필요 제기 • 농업분야 전담기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운영사례 • 수산업·어촌사업을 총괄하는 “통합전담기관” 신설 필요
2	과제명: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연구자: 김대영·류정곤·박상우 외(2017) 연구목적: 수산업·어촌 환경변화, 메가트렌드에 부합하는 정책방향, 과제 도출	문헌조사 사례조사 수요조사 현장조사 전문기자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변화,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미래 수산업·어촌 정책방향 제시 • 수산업의 산업지위 위축과 어촌 고령화 활력 저하 문제 • 현안문제 해결과 신보호주의, 수산인력확보, 4차산업혁명 등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전환 필요 • 수산업·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강화할 필요성 강조
3	과제명: 수산업·어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자: 류정곤·박상우·고동훈 외(2019) 연구목적: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 경제 도입 가능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 제시	문헌조사 현장조사 전문기자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자본과 정책변화로 수산업·어촌 사회적 경제 도입 가능 • 정책사례: 생활SOC확충·정비, 사회적수산업 활성화정책 등 • 사회적경제 도입 제약요인 해결과 활성화 전략 제시
4	과제명: 어촌환경 변화에 따른 어촌공동체 발전방안 연구자: 김대영·박상우·이현동 외(2018) 연구목적: 어촌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어촌공동체 발전방안 제시	문헌조사 사례조사 설문조사 현장조사 전문기자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계 등 기존 어촌공동체 활력제고를 단계적으로 추진 • 중장기적으로 바다마을공동체로 어촌공동체 발전 제안 • 어촌공동체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 제안

구분	세부내용		
	연구개요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5	<p>과제명: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연구</p> <p>연구자: 류정곤·엄선희·박상우 외(2017)</p> <p>연구목적: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개념정립과 공익적 가치 보전방안 제시</p>	<p>문헌조사</p> <p>사례조사</p> <p>설문조사</p> <p>계량분석</p> <p>현장조사</p> <p>워크숍</p> <p>전문기자문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개념 제시 (6개분야 14개 기능)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평가 방법 제시 및 일부 가치추정 수산업·어촌의 본원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연계하는 것이 핵심임.
6	<p>과제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어촌 구축방안 연구</p> <p>연구자: 박상우·황재희·윤영준 외(2019)</p> <p>연구목적: 어촌뉴딜 이후 새로운 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모색</p>	<p>문헌조사</p> <p>현장조사</p> <p>통계분석</p> <p>워크숍</p> <p>AHP분석</p> <p>전문기자문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감소, 고령화, 안전재해, 삶의 질 등 어촌지역 문제 심화 AHP분석결과 어촌 사회문제 스마트 솔루션 우선순위 제시 스마트 어촌 기반구축과 확산·촉진방안 제시
7	<p>과제명: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 연구</p> <p>연구자: 박상우·류정곤·황재희 외(2018)</p> <p>연구목적: 어촌사회 지역소멸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모색</p>	<p>문헌조사</p> <p>설문조사</p> <p>현장조사</p> <p>인구추계모형</p> <p>공간통계분석</p> <p>전문기자문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감소,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등 열악한 환경의 어촌마을 어촌주민과 도시거주민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제시함. 법·제도적 대응, 어촌형 일자리 플랫폼, 커뮤니티 강화, 소멸위험지역활력제고 등 전략 제시
8	<p>과제명: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p> <p>연구자: 이승우·고민규·윤영준(2016)</p> <p>연구목적: 어촌공동체 구성원이자 어촌 발전 참여자로서 다문화가정 정책방향 도출</p>	<p>문헌조사</p> <p>현장조사</p> <p>설문조사</p> <p>집단면접조사</p> <p>전문기자문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정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과 다양한 사업 발굴 법·제도 개선, 거버넌스 및 관계부처 협력 등 정책방향 제시

자료: 연구자 작성

- 전라북도의 수산업·어촌 발전 연구는 지역연구원과 지자체 용역과제로 많이 수행되었으며, 대부분 지역특성화 전략 발굴과 추진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춤.
- 2020년 7월 전라북도 조직개편 결과 새만금해양수산물국이 설치되었고 기존 해양수산정책과가 담당하는 업무가 수산정책과, 해양항만과로 세분화됨에 따른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함(나정호 외, 2021).
 -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에 규정된 수산업, 수산기술연구개발, 어촌소득증대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전략과 한정된 행정자원 보완방안을 제시함.

- 행정조직의 전문성 강화, 지역 특성화 강화, 지역 주민과 수산인의 참여 강화 등을 통하여 행정조직 경직성을 탈피하고, 지원조직의 활용 필요성을 검토함.
- 전라북도 해양수산 여건에 맞는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해양수산 중장기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함(이승우 외, 2017).
- 전라북도 해양수산 자원여건과 경쟁력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정책방향과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 지역 특성화 정책사업을 제시함.
 - 64개 제안사업의 분야별 핵심사업 로드맵과 정책추진 타당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전라북도 해양수산 발전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에 기여함.
- 전라북도 수산식품산업 발전전략을 제안하여 어가소득향상, 수산식품 브랜드화에 기여하는 연구를 추진함(나정호 외, 2019).
- 수산식품산업동향 분석결과와 벤치마킹 사례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할 수 있는 전라북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 전략을 제시함.
 - 전라북도 수산식품산업의 특성화, 지속성 강화를 위하여 수산식품산업 인프라 조성, 수산식품연구개발, 소비활성화를 지원하는 22개의 정책사업을 제안함.
- 내수면어업에 강점이 있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내수면어업육성과 내수면어종을 활용한 6차 산업화 계획을 수립함(마창모 외, 2019).
- 전국적으로 내수면어업 경쟁력이 높은 전라북도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전라북도에 강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특성화 전략을 구상·제안함.
 - 전라북도 내수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체질개선, 유통체계 개선 등 선결과제와 해결방안,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함.
- 어촌공간을 수산업 전진기지, 어촌관광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융·복합의 혁신 거점으로서 가치를 창출하는 발전전략을 제안함(나정호 외, 2018).
- 어촌공간 활용에 대한 어촌주민과 수산인, 관광객 등의 인식개선 활동 필요성을 강조하고 마을, 어업공간, 어장 등 어촌의 공간적 범위 확장 트렌드에 대응함.

- 어촌공동체 거버넌스 구성과 어촌의 다원적 기능 제고가 필요하며, 도민의 어촌 공간 활성화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 전라북도 여건에 적합한 해양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함(나정호 외, 2017).

- 해양산업 개념에 부합한 지역산업 여건을 조사하고 수산식품산업, 해운항만물류산업, 해양레저관광산업, 미래해양산업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상함.
- 전라북도 특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기존 시설 활성화 전략, 인프라 조성전략, 연구개발 및 지원전략 등을 제시함.

○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의 특성화 전략으로 내수면 갑각류 연구기관 발전전략을 구상함(이창원 외, 2018).

- 내수면산업 기반이 조성된 지역 여건에 맞추어 내수면 갑각류 양식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차별화 역량을 강화함.
- 전라북도 여건에 적합한 내수면 갑각류를 발굴하고,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함.

[표 1-2]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경쟁력 제고 관련 선행연구 검토

구분	세부내용		
	연구개요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	과제명: 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연구자: 나정호·하의현·정호중(2021) 연구목적: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조직개편에 따른 경쟁력 제고방안 모색	문헌조사 사례조사 면접조사 델파이조사 전문기자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 수산기술연구개발, 어촌소득 증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개편 추진 • 지역특화전략을 설정하고 한정된 조직, 인적자원 보완 필요 • 행정조직 경직성 탈피를 위한 임시조직, 지원조직 활용 검토 • 전문성, 특성화, 참여 강화 등 구체적 추진전략을 제시함.

구분	세부내용		
	연구개요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2	<p>과제명: 전라북도 해양수산물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p> <p>연구자: 이승우·한광석 외(2017)</p> <p>연구목적: 전라북도 해양수산물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p>	<p>문헌조사</p> <p>통계조사</p> <p>현장조사</p> <p>설문·면접조사</p> <p>SWOT분석</p> <p>전문가자문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해양수산 자원여건과 경쟁력 분석 정책방향과 트렌드에 부합한 지역 특성화 정책사업 제안 핵심사업별 로드맵과 정책타당성 분석 결과 제시
3	<p>과제명: 전라북도 수산식품산업 발전방안 연구</p> <p>연구자: 나정호·조승현 외(2019)</p> <p>연구목적: 전라북도 수산식품산업 발전전략을 제안하여 어가소득향상, 수산식품브랜드화 기여</p>	<p>문헌조사</p> <p>통계조사</p> <p>사례조사</p> <p>면접조사</p> <p>SWOT분석</p> <p>전문가자문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식품산업동향과 전라북도 여건 분석 결과 제시 전라북도 지역특성화를 위한 특화전략 제안 전라북도 수산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제시
4	<p>과제명: 전라북도 내수면 어업육성 및 6차 산업화 계획 수립 용역</p> <p>연구자: 마창모·이상철 외(2019)</p> <p>연구목적: 전라북도 내수면 어업육성과 6차 산업화 계획 구상</p>	<p>문헌조사</p> <p>통계조사</p> <p>현장조사</p> <p>설문·면접조사</p> <p>SWOT분석</p> <p>전문가자문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내수면어업 실태조사 결과 제시 내수면어업에 강점이 있는 전라북도 특성화 전략 제시 내수면어업 체질개선, 유통체계 개선 등 지속성 제고 필요
5	<p>과제명: 전라북도 어촌공간 활용방안 연구</p> <p>연구자: 나정호·오병록·고연경(2018)</p> <p>연구목적: 수산업 지속가능 성장기반인 어촌공간을 가치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전략 모색</p>	<p>문헌조사</p> <p>통계조사</p> <p>현장·사례조사</p> <p>면접조사</p> <p>SWOT분석</p> <p>전문가자문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 어촌관광 공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간범위 확장 필요 어촌공간 활용에 대한 의식 개선 활동 제안 공동체 거버넌스 구성과 어촌의 다원적 기능 제고 필요
6	<p>과제명: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방안 연구</p> <p>연구자: 나정호·오병록 외(2017)</p> <p>연구목적: 전라북도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방안 제시</p>	<p>문헌조사</p> <p>통계조사</p> <p>현장·사례조사</p> <p>SWOT분석</p> <p>전문가자문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산업 개념에 부합한 지역 산업 여건 조사 전라북도 여건에 맞는 해양산업의 선택과 집중 제시 산업별 육성방안을 인프라, 활성화, 연구개발 등으로 구분함.
7	<p>과제명: 민물고기시험장 내수면 갑각류 특성화 기 관전략 연구</p> <p>연구자: 이창원·이종천 외(2018)</p> <p>연구목적: 내수면 갑각류 중심의 특성화 연구기관 발전전략 수립</p>	<p>문헌조사</p> <p>통계조사</p> <p>현장·사례조사</p> <p>면접조사</p> <p>전문가자문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의 특성화 전략으로 내수면 갑각류 연구역량 제고 필요 지역 여건에 적합한 내수면 갑각류 제안 및 육성전략 구상 내수면 갑각류 전문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 제시

자료: 연구자 작성

2. 귀농어·귀어촌 현안문제 해결

- 살기좋은 농산어촌 조성 정책에 따라 귀농어업, 귀농어촌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제안함.
 - 전라북도는 농생명 수도를 지향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 유치와 안정적 정착, 농업농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가 추진됨.
 - 어촌사회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규정된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의 벤치마킹 요인을 발굴하기 위한 문헌을 검토함.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플랫폼 필요성과 구축·운영 방안을 제시함(조원지 외, 2020).
 - 귀농귀촌 희망자는 거주공간과 농업을 위한 기술교육, 훈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희망자 개인 선호도 차이에 기인한 일방향 정보전달 체계에 따른 한계가 있음.
 -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맞춤형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귀농귀촌 정보플랫폼 구축방안과 확장성을 높이는 운영전략을 제시함.

- 농촌사회에서 필요한 생활역량 강화와 주민 소통을 위한 생활기술 교육 플랫폼 운영 전략을 구상함(조원지·이병훈, 2021).
 - 실제 농촌생활에는 다양한 분야의 역량이 필요함에 따라 생활역량 개념을 정립하고, 역량강화 지원 필요성을 제시함.
 - 농촌사회 구성에 따른 다양한 공간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전담조직 운영이 필요함.

- 공동체 가치 실현과 전라북도 농촌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방안을 연구함(조원지 외, 2020).
 - 사회적농업은 지역공동체의 취약계층 돌봄, 일자리 제공, 농업교육 등 농촌사회 통합에 기여하며, 사회적농업의 실행공간으로서 사회적농장이 중요함.
 - 개인농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농업의 자립성에 한계가 있으며, 지역사회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농업 실행전략 이행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전라북도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함(조원지 외, 2021).

- 여성농업인은 가정생활과 농업활동 병행에 따른 심리적·체력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생산자의 보조적 역할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 여성농업인이 농촌사회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문화 조성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전담 부서 구성을 제안함.

[표 1-3] 귀농어·귀어촌 및 농어촌 현안문제 관련 선행연구 검토

구분	세부내용		
	연구개요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	과제명: 전북 귀농귀촌 정보플랫폼 구축방안 연구자: 조원지·서환석 외(2020) 연구목적: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플랫폼 구축·운영 방안 제안	문헌조사 통계분석 사례조사 SWOT분석 전문가 자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적합한 정보 접근성 제고에 긍정적 효과 • 정보플랫폼 구축과 확장을 위한 운영전략 제시
2	과제명: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 운영방안 연구자: 조원지·이병훈(2021) 연구목적: 농촌사회에서 필요한 생활역량 강화와 주민 소통을 위한 생활기술 교육 플랫폼 운영전략 구성	문헌조사 통계분석 사례조사 SWOT분석 전문가 자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양성을 위한 귀농귀촌 교육의 한계 극복 필요 • 농촌생활에 필요한 역량과 육성에 대한 단계적 접근 • 다양한 공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운영을 전담할 인력과 조직 필요성 강조
3	과제명: 전라북도 사회적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자: 조원지·정호중·이병훈(2020) 연구목적: 공동체 가치 실현과 전북 농촌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문헌조사 통계분석 사례조사 면접조사 전문가 자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농장은 지역공동체의 취약계층 지원 목적으로 운영 • 사회적농업은 취약계층 돌봄, 일자리, 교육 등을 제공,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기회 제공 •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킹을 통한 사회적농업 실천 필요
4	과제명: 전북 여성농업인정책 개선방안 연구자: 조원지·나정호·박로운(2021) 연구목적: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삶의 질 제고방안과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 제안	문헌조사 통계분석 면접조사, FGI 전문가 자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은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낮은 지위로 인식 • 가정생활, 농업 병행에 따른 심리적, 체력적 어려움을 경험 • 남성중심적 농업·농촌문화의 변화가 필요함. • 여성농업인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 강화 필요

자료: 연구자 작성

3.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연구 차별성

1) 선행연구 시사점

(1) 수산업·어촌발전 정책 지속성 유지

-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기간산업인 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어촌사회 지속성 강화 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어촌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촌뉴딜 300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생활인프라가 개선되고 있으며, 생활인프라를 활용한 어촌활력 제고 방안이 연구되고 있음.
- 수산업·어촌의 다원적 기능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익적 가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산직불제, 지역단위 어민수당 등으로 수산업·어촌 가치 증대가 확산될 것으로 판단됨.

(2) 전북형 수산업·어촌 발전모델 구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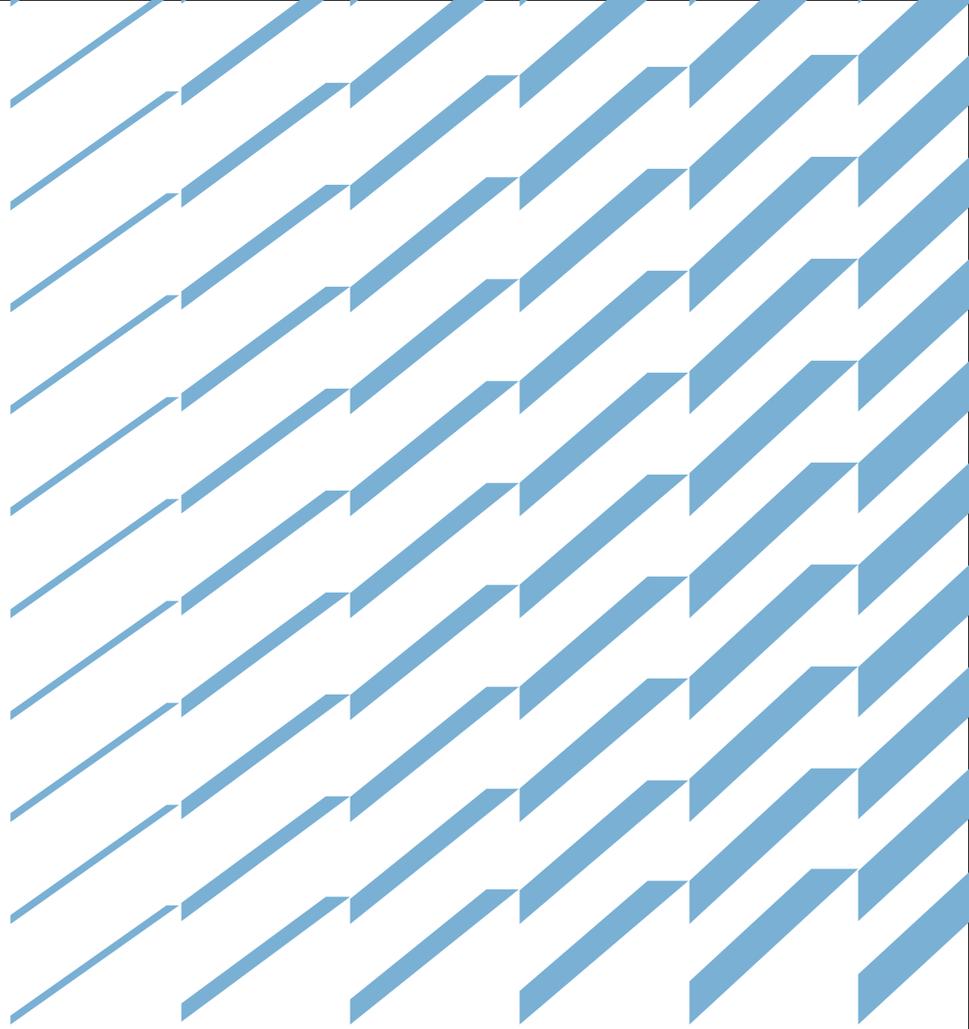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상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 전담 통합조직이 설치·운영되어도 전국 수산업·어촌의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전라북도 여건에 맞는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 사업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전북형 수산업·어촌 발전모델 구상이 필요함.
- 바다 중심 수산업 뿐 아니라 내륙어촌의 내수면어업, 반농반어 형태의 어가 특성과 농업농촌 지원이 많은 전라북도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조직, 사업의 융·복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에 따라 지역 특화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수산업 발전 기반 조성 필요

(3) 농촌사회 현안문제 해결방안 활용

- 어촌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가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유사한 환경과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농촌사회 현안해결 선행연구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인구감소, 어업인력 고령화, 열악한 인프라, 생활서비스 제공 한계 등 어촌사회 현안문제 해결방안 모색에 농촌사회 선행연구 시사점 활용
- 어촌사회의 현안문제는 대부분 마을단위의 농촌사회에서도 공감하는 현안으로 다양한 연구결과와 추진사업 결과의 모니터링 필요
- 어촌사회 생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플랫폼 개발,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 경제 도입, 여성어업인 지원정책 등 다양한 정책개발에 반영할 수 있음.

2) 연구 차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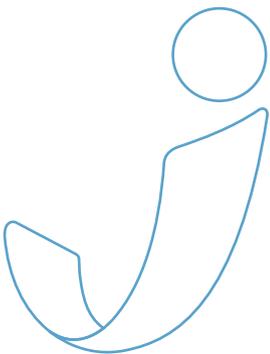
- 이 연구는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추진주체 간 연계성 강화, 정책성과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선행연구에서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된 정책사업과 어촌사회 현안문제 해결방안 등이 다양하게 모색되었음.
 - 제안된 다양한 정책사업이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여건과 정책 이해도가 높은 실행주체를 양성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국가조직과 전라북도의 광역·기초지자체 및 지원조직, 마을공동체 조직 등 원활한 협력을 유도하여 시너지 창출 방안을 모색함.
 - 2021년에 수행된 전라북도 해양수산 조직경쟁력 강화방안에서 단기적 한계극복방안으로 제안된 마을 중심의 지원조직의 연계성을 검토함.
 - 통합지원조직 설립 필요성 검토를 위해서 전라북도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사업과 조직 간 연계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함.



제 2 장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현황과 과제

1.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현황
2.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활성화 추진사업 성과
3.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활성화 과제



제2장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현황과 과제

제1절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현황

1. 전라북도 수산업 현황

- 전라북도 어가와 수산업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3,342호(6.17%), 7,148명(5.84%)의 수산업 종사자가 있음.
 - 수치로는 해면어업 종사자가 많으나, 전국 분포를 살펴보면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인구가 전국 내수면어업 종사자의 12%를 차지함.
 - 시·군별로는 부안군(1,882호, 3,858명), 군산시(784호, 1,649명), 고창군(381호, 860명), 김제시(62호, 156명) 순으로 어가와 수산업 종사자가 있음.

- 전라북도 어촌계는 총 65개(어촌계원 6,892명)이며, 내수면 어업계는 총 70개(어업계원 1,950명)임.
 - 어촌계는 군산시 21개소(2,508명), 김제시 12개소(971명), 고창군 13개소(716명), 부안군 19개소(2,697명)임.
 - 내수면 어업계는 총 70개(1,950명)로 진안군 23개소, 부안군 17개소, 김제시 16개소, 고창군 4개소, 임실군 3개소, 군산시와 완주군 각 2개소, 익산시, 남원시, 장수군 각 1개소임.

- 전라북도에는 총 33개의 수산인 단체가 있으며, 내수면어업과 관련한 18개의 전국 내수면어업인 단체 중 5개 단체의 사무소가 전라북도에 있음.
 - 수산인 단체는 해수면, 내수면 등 업종에 따른 현안 논의와 어업인 간 친목도모, 협력유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함.
 - 내수면어업 생산에 강점이 있어서 전국 18개 어종별 내수면어업단체 중 5개 단체 사무소가 전라북도에 입지하고 있음.

[표 2-1] 전라북도 어가·수산업 종사자 인구 현황

(단위: 호, 명)

시군별	계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어가	인구	어가	인구	어가	인구
전 국	54,021	122,301	50,909	113,898	3,112	8,403
대 비	6.17%	5.84%	5.79%	5.38%	12.56%	12.20%
전라북도	3,342	7,148	2,951	6,123	391	1,025
전주시	13	31	3	8	10	23
군산시	784	1,649	757	1,579	27	70
익산시	24	65	1	3	23	62
정읍시	28	81	6	19	22	62
남원시	45	121	1	5	44	116
김제시	62	156	28	59	34	97
완주군	42	122	-	-	42	122
진안군	28	57	-	-	28	57
무주군	15	31	-	-	15	31
장수군	2	5	-	-	2	5
임실군	37	92	-	-	37	92
순창군	9	20	-	-	9	20
고창군	371	860	313	703	58	157
부안군	1,882	3,858	1,842	3,747	40	111

주: 해면(어가, 인구)은 2015 어업총조사의 시·군별 비율을 적용한 2019년 기준/ 내수면(어가, 인구)은 2015 어업총조사 결과

자료: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제공자료(2021)

○ 수산업의 중요 기지인 어항은 전라북도에 총 33개가 있으며, 국가어항 7개소, 지방어항 10개소, 어촌정주어항 16개소임.

- 국가어항은 군산 4개소(연도, 여청도, 말도, 개야도), 고창 1개소(구시포), 부안 2개소(격포, 위도) 등 총 7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어촌어항법」 제16조에 따라 군산 신시도항과 신치항이 어촌정주어항으로 2018년에 신규 지정되었음.
- 비응항은 「항만법」 제21조에 의거한 군산무역항의 어항구로 지정되었고, 상왕등도항은 같은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임.
- 새만금개발사업에 따라 지방어항 5개소(군산 하제, 김제 심포, 부안 돈지·계화·하리), 소규모항포구 6개소(군산 오봉·어은, 김제 거전, 부안 문포·해창·불등)가 매립간척지구내 지정해제되었음.
- 현재 소규모항포구(비법정어항) 9개소가 운영 중이며,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어촌뉴딜 300사업의 주된 대상임.

[표 2-2] 전라북도 어항현황(2020년)

구분	개소	시·군별	어항명	매립간척지구내 (지정해제)
계	33	군산(19)	국가 4, 지방 4, 어촌정주 11	
		고창(2)	국가 1, 지방 1	
		부안(12)	국가 2, 지방 5, 어촌정주 5	
국가어항 (해양수산부)	7	군산(4)	연도, 어청도, 말도, 개야도	
		고창(1)	구시포	
		부안(2)	격포, 위도	
지방어항 (전라북도)	10	군산(4)	선유3구, 비안도, 무녀2구, 방축도	하제
		김제(0)		심포
		고창(1)	동호	
		부안(5)	곰소, 식도, 공항, 송포, 성천	돈지, 계화, 하리
어촌정주어항 (시·군)	16	군산(11)	야미도, 죽도, 선유1구, 선유2구, 무녀1구, 장자도, 관리도, 명도, 두리도, 신시도, 신치	
		부안(5)	도청, 모항, 왕포, 벌금, 대리	
소규모항포구 (시·군) * 비법정 어항	9	군산(0)		오봉, 어은
		김제(0)		거전
		고창(1)	죽도	
		부안(8)	하왕등도, 치도, 진리, 전막, 정금, 거륵, 죽막, 작당	문포, 해창, 불등

자료: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 2019년 기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약 2.5%를 전라북도에서 생산하였으며, 일반해면(2.7%), 천해양식(2.2%), 내수면어업(20.0%) 순의 비중을 차지함.

[표 2-3] 전라북도 어업별 수산물 생산현황

(단위: 톤)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어업별	구분						
계	전북	54,082	43,763	63,575	79,206	77,826	82,664
	전국	2,635,771	2,759,246	2,802,822	3,278,986	3,296,473	3,321,825
	대비	2.1%	1.6%	2.3%	2.4%	2.4%	2.5%
일반 해면	전북	21,675	20,975	22,090	20,121	22,894	24,565
	전국	1,059,169	1,058,319	929,814	926,941	1,011,536	914,570
	대비	2.1%	2.0%	2.4%	2.2%	2.3%	2.7%
천해 양식	전북	26,530	16,325	34,542	51,263	47,835	51,052
	전국	1,546,826	1,667,872	1,837,608	2,315,775	2,249,616	2,371,999
	대비	1.7%	1.0%	1.9%	2.2%	2.1%	2.2%
내수면 어업	전북	5,877	6,463	6,943	7,822	7,096	7,047
	전국	29,776	33,055	35,400	36,270	35,326	35,255
	대비	19.7%	19.6%	19.6%	21.6%	20.1%	20.0%

자료: 통계청

- 전라북도 수산물 생산은 2019년 기준 총 82,664톤, 3,180억원이며 생산량 기준으로 해조류, 패류, 어류 순이며, 생산금액 기준으로 어류, 패류, 갑각류, 해조류 순으로 많이 생산되고 있음.

[표 2-4] 전라북도 품종별 수산물 생산현황

(단위: 톤, 백만원)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어종별	구분						
계	물량	54,082	43,762	63,576	79,206	77,826	82,664
	금액	184,941	184,676	228,139	272,415	289,936	318,081
어 류	물량	20,720	18,550	17,331	18,554	19,182	17,762
	금액	120,011	123,971	124,584	141,015	145,854	145,467
갑각류	물량	2,955	3,001	2,854	3,880	5,260	5,732
	금액	26,453	22,366	25,817	29,017	45,329	55,477
패 류	물량	4,939	7,009	17,698	11,459	18,315	23,484
	금액	11,374	15,073	37,913	29,624	47,799	64,042
연 체 동 물	물량	1,133	2,495	2,059	2,422	1,987	2,465
	금액	7,859	9,472	11,557	18,643	18,190	21,485
해조류	물량	24,264	12,636	23,557	42,829	32,831	32,985
	금액	16,913	11,277	25,958	51,916	28,086	26,709
기 타 수산물	물량	71	71	77	65	250	236
	금액	2,331	2,517	2,310	2,200	4,677	4,901

자료: 통계청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른 어업법인은 총 520개소(전국 9.6%), 영어조합법인 423개소(전국 9.8%), 어업회사법인 96개소(전국 10.0%)가 운영 중임.

[표 2-5] 전라북도 어업법인 현황(2020년 7월 기준)

(단위: 개소)

	합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소계	살아있는 등기	파산	해산	소계	살아있는 등기	파산	해산	해산 간주	화생 절차
전국	5,423	4,464	4,328	2	134	959	912	1	3	42	1
전북	520	423	416		8	96	92			4	

주: 전라북도 수산정책과에서 법원행정처로부터 회신받은 등기 전산정보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함.

자료: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 수산물 가공업체는 172개 업체(전국 3.2%)가 현재 운영 중이며, 부안군(85개소), 군산시·정읍시(각 22개소), 전주시(15개소), 고창군(13개소) 순임.

- 염식품 가공업체와 해조제품, 냉동수산물 가공업체 중심으로 수산물 가공업체가 운영되고 있음.
- 전라북도 수산물 가공업체는 전국 대비 상대적 열세가 분명하므로, 지역 특산물 중심으로 수산물 가공 특화전략이 필요함.

[표 2-6] 전라북도 수산물 가공업체 현황(2019년)

(단위: 개소)

항 목	전국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장수	임실	고창	부안
합 계	5,441	172	15	22	2	22	5	4	2	2	13	85
냉동품 (원형동결)	1,868	28	10	1	0	14	0	0	0	0	0	3
냉동품 (처리동결)	497	26	0	13	0	6	0	0	2	0	4	1
통조림품	38	0	0	0	0	0	0	0	0	0	0	0
연제품	107	1	0	0	0	0	0	1	0	0	0	0
소건품	334	0	0	0	0	0	0	0	0	0	0	0
염건품	221	2	0	0	0	0	0	0	0	0	2	0
자건품	75	1	0	1	0	0	0	0	0	0	0	0
해조제품	564	11	0	0	0	0	3	0	0	0	2	6
한천	2	0	0	0	0	0	0	0	0	0	0	0
조미가공품	615	9	1	5	1	0	0	0	0	0	0	2
어유분	21	0	0	0	0	0	0	0	0	0	0	0
염장품	94	0	0	0	0	0	0	0	0	0	0	0
염식품	633	75	0	2	0	0	0	0	0	0	0	73
수산피혁품	1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371	19	4	0	1	2	2	3	0	2	5	0

자료: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 수산식품산업과 관련성이 있는 거점으로 익산시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음.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운영주체이며,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식품패키징 지원, 식품품질 안전센터, 식품기능성평가지원, 파일럿플랜트, 식품벤처센터, 소스산업화센터, HMR기술지원센터 등 입주기업과 희망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2021년 농식품원료중계공급센터가 준공되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원료 신선도 및 안전성 제고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으로 농식품에 특화되어 있지만 식품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수산식품 산업 육성 관점에서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군산시에서 새만금 2공구 부지에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0).
- 전라북도 수산가공업은 전형적인 소규모 산지가공 형태를 보이며, 생산량이 많은 물김은 지역 거점생산 시설의 부재로 타 권역으로 원료가 반출되는 현상이 있음.
 - 지역 수산가공업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자금, 운영, 판매, 기술, 인력, 규범, 수출 등 다양한 영역의 한계점과 요구사항을 반영함.
 - 어업, 양식업, 가공업 등 지역 수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 권역의 수산물 수출가공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 수산물의 소비 활성화,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전국 내수면 양식장은 2019년 기준 총 2,704개소(832ha)이며, 전라북도는 총 726개소(268ha)로 전국에서 양식장 면적이 가장 넓음.
- 내수면 양식장 면적은 메기(70.5ha), 뱀장어(52.5ha), 향어(36.4ha), 미꾸라지(32.5ha) 순이며, 생산량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군별 내수면 양식장 규모는 고창군(79ha), 부안군(52.3ha), 김제시(40.2ha), 정읍시(33.8ha), 익산시(25.7ha), 완주군(16.3ha) 순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2019년 기준 전국 2위 규모(20.0%, 7,047톤)이며, 생산금액은 1,025억 원으로 전국 생산금액의 21.2%임.
- 내수면 양식장 면적에 비례하여 생산량이 많으며, 동자개, 메기, 미꾸라지, 금붕어, 붕어, 비단잉어, 잉어, 향어 생산량은 전국 1위임.
 - 내수면 품종별 생산량은 뱀장어(2,492톤), 메기(2,033톤), 향어(1,200톤), 미꾸라지(441톤), 동자개(157톤) 순임.

[표 2-7] 전라북도 내수면 양식장 현황(2019년)

(단위: 건, ha)

구분	계		항어		메기		미꾸라지		동자개		뱀장어		기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726	268	95	36.4	158	70.5	98	32.5	41	12	137	52.5	197	64.1
전주	9	3.7	5	3.5	1	0.2							3	0.01
군산	13	3.6			2	0.8	2	1	3	0.5	2	0.5	4	0.8
익산	48	25.7	1	0.1	17	8.9	1	0.4	4	1.5	8	6.5	17	8.3
정읍	93	33.8	13	5.4	41	16.1	15	4.9	7	2.4	6	2	11	3
남원	24	5.6					14	3.6	2	0.3	2	1	6	0.7
김제	119	40.2	17	6.4	55	21.8	1	0.7	9	4.3	5	0.8	32	6.2
완주	55	16.3	42	12.4	4	1.2	1	0.2			3	1.2	5	1.3
진안	8	0.4			2	0.05	1	0.1					5	0.2
무주	6	0.7			3	0.6							3	0.1
장수	8	0.7			3	0.5							5	0.2
임실	22	3.1			4	0.9			5	0.8	2	0.3	11	1.1
순창	11	2.9					2	0.4			8	2.3	1	0.2
고창	197	79	6	1.1	13	6.8	21	5.4	2	1	90	29.5	65	35.2
부안	113	52.3	11	7.5	13	12.6	40	15.8	9	1.2	11	8.4	29	6.8

자료: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표 2-8] 전라북도 내수면어업 생산현황(2019년)

(단위: 톤)

구분	품종명	순위	전북	전국	비율(%)	
합계		②	7,047	35,255	20%	
양식어업	소계	②	6,649	22,016	30.2%	
	가물치	③	10	170	5.9%	
	동자개	①	157	273	57.5%	
	메기	①	2,025	4,116	49.2%	
	미꾸라지	①	439	628	69.9%	
	뱀장어	②	2,490	10,885	22.9%	
	금붕어	①	21	30	70.0%	
	붕어	①	97	207	46.9%	
	비단잉어	①	13	37	35.2%	
	잉어	①	39	61	64.0%	
	항어	①	1,200	1,523	78.8%	
	송어	⑥	37	3,285	1.2%	
	기타	③	121	801	15.1%	
	패류	우렁이등	⑦	129	5,379	2.4%
갑각류	새우등	⑤	2	19	10.6%	
기타	자라등	②	41	145	28.3%	
어로어업	어류, 갑각류, 패류, 기타	붕어등	⑨	226	7,696	3.0%

자료: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2. 전라북도 어촌 현황

- 전라북도 어촌마을은 군산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등 4개 시·군에 총 46개 마을이 있음(전라북도 수산정책과, 2021).
 - 군산시에는 총 개야도, 연도, 어청도, 야미도, 신시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방축도, 말도, 명도, 비안도 등 13개의 어촌마을이 있음.
 - 김제시는 심포마을, 명동마을, 거전마을, 안하마을 등 총 4개의 어촌마을이 있음.
 - 고창군에는 장호, 구시포, 자룡, 동호, 광승, 두어, 만돌, 하전, 월산, 사포, 반월, 상포, 고잔, 죽도 등 총 15개의 어촌마을이 있음.
 - 부안군은 곰소 1~5구, 왕포·작당, 격상·격하·죽막, 궁항, 두포, 모항, 송포, 성천, 진리·파장금, 벌금·정금, 치도, 대리·전막·거륜, 식도, 상왕등도·하왕등도 등 총 14개의 어촌마을이 있음.

- 해양수산부의 어업외 소득 증대를 통한 어민소득증대 지원정책으로 추진되는 어촌체험마을은 총 7개소가 운영 중임.
 - 전국 106개 어촌체험마을 중 7개소(6.6%)로 절대적인 체험마을 규모는 작지만 해양수산부의 우수 체험마을 수상 실적을 보유함.
 - 장자도 마을[대상(2008), 우수(2007)], 하전마을[최우수(2006), 장려(2017)], 만돌마을[최우수(2009)], 신시도마을[최우수상(2015), 2014년 장려상(2014)], 장호마을[은상(2016), 2015년 장려(2015)], 모항마을[동상(2016)] 등 수상
 - 장자도, 신시도, 장호마을 등은 2년 연속 수상하여, 전년도 수상성과보다 발전된 운영성과를 인정받았으며, 하전마을은 2002년 지정, 최우수(2006), 장려(2017) 수상 등 지정부터 지금까지 어촌체험마을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 중임.

[표 2-9] 전라북도 어촌체험마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마을명	위 치	사업비	사 업 내 용	어촌체험 휴양마을 지정
계	7개소	군산(3), 고창(3), 부안(1)	4,225		
2002년	하전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970-1	500	종합안내소 : 504㎡ 주차장 : 1,800㎡ 야외수영장 : 30㎡ 갯벌체험장 : 1개소	2014년

구분	마을명	위치	사업비	사업내용	어촌체험 휴양마을 지정
2003년	만돌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960-27	500	종합안내소 : 316㎡ 갯벌체험장 : 1개소 주차장 : 4,000㎡	2014년
2004년	모항	부안군 변산면 모항길 107	500	종합안내소 : 515㎡ 갯벌체험장 : 1개소 주차장·소공원 : 각 1개소	2017년
2005년	장자도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115	500	종합안내소 : 222㎡ 갯벌체험장 : 1개소 관광체험어장 : 400㎡	미지정
2010년	선유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74-2	725	종합안내센터 : 222㎡ 바다낚시체험장 : 1개소 갯벌체험장 : 1개소 자전거 하이킹코스	2019년
	장호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 1156-3	500	종합안내센터 : 356㎡ 바다낚시체험장 : 1개소 ※고창군 자체(군비) 사업	2014년
2012년	신시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000	종합안내센터 : 1식 바다낚시체험장 : 1식, 갯벌체험장 : 1식	2015년

자료: 전라북도 수산정책과(2021)

- 통계청의 귀어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총 959명이 귀어하였으며 이 중 전라북도 귀어한 사람은 총 86명(8.97%)임.
 - 귀어인구는 2019년 기준 전라남도(372명, 38.8%), 충청남도(253명, 26.4%), 경상남도(113명, 11.8%), 전라북도(86명, 9.0%) 순임.
- 전라북도 시·군별 귀어귀촌인을 집계한 결과 2019년 기준 귀어인은 86명이며 귀촌인은 13,477명으로 집계됨.
 - 시·군별 귀어인은 2019년 기준 부안군(42명), 고창군(24명), 군산시(15명), 김제시(4명), 남원시(1명) 순으로 집계됨.
 - 귀촌은 농업과 어업을 포함한 통계치이며, 귀촌인이 모두 농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표 2-10] 우리나라 귀어인 통계

(단위: 명)

행정구역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 국	690	978	1,073	1,005	991	986	959
부산광역시	1	5	-	1	-	△	△
인천광역시	33	62	58	66	66	65	51
울산광역시	1	3	6	1	1	△	△
경기도	7	21	19	19	16	20	19
강원도	15	24	14	13	8	19	21
충청북도	3	11	6	3	5	△	△
충청남도	234	317	389	338	379	301	253
전라북도	103	87	98	80	91	105	86
전라남도	193	287	358	358	300	338	372
경상북도	22	37	24	23	25	27	25
경상남도	59	103	91	83	93	88	113
제주특별자치도	19	21	10	20	7	17	16

주: 2018년부터 3명 미만 개인정보 보호적용(△)

자료: 통계청

[표 2-11] 전라북도 귀어·귀촌인 현황

(단위: 명)

시·군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귀어	귀촌	계	귀어	귀촌	계	귀어	귀촌	계	귀어	귀촌	계	귀어	귀촌
계	47,251	269	46,982	15,752	80	15,672	15,218	91	15,127	14,705	105	14,600	13,563	86	13,477
전주시	-	-	-	-	-	-	-	-	-	-	-	-	-	-	-
군산시	3,692	49	3,643	1,320	16	1,304	1,103	14	1,089	1,252	21	1,231	1,179	15	1,164
익산시	4,983	2	4,981	1,608	2	1,606	1,718	-	1,718	1,611	1	1,610	1,524	-	1,524
정읍시	3,189	2	3,187	1,101	-	1,101	1,036	1	1,035	940	1	939	977	-	977
남원시	2,439	2	2,437	797	1	796	799	1	798	856	-	856	861	1	860
김제시	3,446	10	3,436	1,090	4	1,086	1,143	1	1,142	1,154	-	1,154	1,043	4	1,039
완주군	11,494	5	11,489	3,702	3	3,699	3,333	2	3,331	3,055	-	3,055	2,845	-	2,845
진안군	2,226	-	2,226	710	-	710	830	-	830	798	-	798	714	-	714
무주군	1,625	-	1,625	516	-	516	544	-	544	594	-	594	531	-	531
장수군	1,637	1	1,636	532	-	532	575	1	574	498	-	498	547	-	547
임실군	2,515	1	2,514	814	-	814	892	1	891	839	-	839	770	-	770
순창군	2,131	-	2,131	712	-	712	707	-	707	752	-	752	556	-	556
고창군	3,850	74	3,776	1,386	21	1,365	1,213	23	1,190	1,199	25	1,174	966	24	942
부안군	4,024	123	3,901	1,464	33	1,431	1,325	47	1,278	1,157	57	1,100	1,050	42	1,008

주: 귀촌 인구는 농업과 어촌이 포함된 통계치임.

자료: 전라북도 수산정책과(2021)

- 통계청의 농가, 어가, 임가를 합산하여 전국과 전라북도의 농산어촌 인구를 파악하고, 5년 주기 변화 추이를 파악함.
 - 2010년 농산어촌인구는 3,487,803명, 2015년 인구는 2,914,936명, 2020년 인구 2,643,934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농산어촌인구는 2010년 317,985명, 2015명 260,737명, 2020년 227,842명으로 역시 감소세를 보임.

- 수산업·어촌 활성화 여건 파악을 위하여 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조로 한정하면 전국 97,062명, 전라북도 4,727명임.
 - 어가인구조로 한정하면 2010년 기준 전국 171,191명에서 2015년 128,352명(42,839명 감소), 2020년 97,062명(31,290명 감소) 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전라북도는 2010년 6,771명, 2015명 6,434명, 2020년 4,727명으로 전국 단위와 동일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표 2-12] 농산어촌인구 추이

(단위: 명)

구분	2010	2015	2020
전국	3,487,803	2,914,936	2,643,934
전국(어가)	171,191	128,352	97,062
전라북도	317,986	260,737	227,842
전라북도(어가)	6,771	6,434	4,727

출처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각년도)

- 농산어촌 고령인구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인구총조사의 읍·면 거주자 현황을 조사하였음.
 - 고령인구비율은 65세 인구조로 측정하고 농산어촌은 대부분 읍·면 소재지이므로 관련 인구총조사 결과를 활용
 - 통상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을 기준으로 7%(고령화사회), 14%(고령사회), 20%(초고령사회)로 판단함.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15년 13.1%, 2020년 16.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2020년 기준 초고령사회로 판단됨.

- 전국 2015년 고령화사회에서 2020년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전라북도는 2015년 고령사회, 2020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함.
- 농산어촌의 고령화정도는 2015년 고령사회, 2020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전라북도는 2015년 (29.9%) 초고령사회에 진입함(2020년 기준 33.0%).

[표 2-13] 농산어촌 고령인구비율 변화

구분		2015년	2020년
전국	전체	13.1%	16.4%
	읍·면	16.5%	23.0%
전라북도	전체	17.8%	21.4%
	읍·면	29.9%	33.0%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각년도), 통계청, 인구총조사(각년도)

3.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여건 개선사업

1) 어촌뉴딜 300사업

- 전라북도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 22개소의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되어 단계적으로 어촌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있음.
- 어촌뉴딜 300사업은 우리나라 어촌·어항 300개소의 기반시설 현대화, 지역 어촌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차별화 등 어촌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됨.
- 지역 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콘텐츠 차별화에 따라 어업외 수익원을 창출하고, 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표 2-14] 전라북도 어촌뉴딜300사업 선정현황

연도	선정지역		어촌뉴딜 300 사업내용
2019	무녀2구항	군산	방파제·어항 보강, 어구보관 창고
	명도항	군산	안전시설 설치, 명품 바닷길 조성
	동호항	고창	포구 정비, 수산물동굴장터 설치
	대리항	부안	접안시설 보강, 해안도로경관정비
	식도항	부안	안전시설, 어민회관, 풍류로드
2020	장자도항	군산	물양장, 어항시설, 선착장
	선유1구항	군산	물양장, 광장, 어항시설개선
	비안도항	군산	방파제, 물양장, 전망대
	죽도항	고창	선착장, 인도교, 전망대, 공원
	광승항	고창	선착장, 포구정비, 체험장
	곰소항	부안	물양장, 방파제, 젓갈거리
	별금항	부안	물양장, 방파제, 전망데크
	모항	부안	물양장, 방파제, 마실길, 식당
깊은금항	부안	물양장, 방파제, 안전시설, 회관	
2021	두리도	군산	방파제 연장, 작업장, 경관정비 등
	서래포구	군산	호안정비, 물양장조성, 어촌박물관 등
	고리포	고창	부잔교, 방파제, 어구창고, 해안길 등
	왕포·작당	부안	방파제 연장, 어구보관창고, 체험장 등
	치도	부안	방파제, 물양장, 치도 공원조성 등
2022	이미도항	군산	선양장, 다목적 인양기, 방파제, 어민복지회관 등
	상포포구	고창	탄소중립 식물원, 족욕체험장, 갯벌소공원, 야영장, 자전거쉼터 등
	송포항	부안	방파제 연장·증고, 안전부잔교 설치, 해녀해남복합센터 조성 등
합계	22개		

자료: 전라북도 수산정책과(2021)

2)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지역 주민소득 증대, 생활여건 개선, 어촌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인구유지와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함.
 - 근거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어촌·어항법」,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서개발촉진법」,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수도법」 등으로 관계 법령 소관부처가 다양함.
 - 어촌 소득기반, 체험관광사업, 경관개선을 위한 사유시설 정비 등 다양한 공간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수익자 혜택이 있는 경우 자부담 기준을 설정함.
- 어촌여건개선을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과거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고, 20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분야로 분리되어 추진됨.
 - 1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1994~2004)은 고창권, 변산권, 위도권, 고창권 2차, 옥도권, 염섬권, 선유권 등 7개 권역 총 42개 어촌계 기반시설을 정비함.
 -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2007~2017)은 고창, 군산, 부안 등 3개 권역 총 19개 어촌계 기반시설을 정비함.

[표 2-15] 전라북도 1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경과

연도	권역별	어촌계수	어촌계명
1994	고창권	9개	용기, 하전, 만월, 해리, 선운, 상포, 장호, 광승, 죽도
1995	변산권	4개	격포, 도청, 대항, 운호
1997	위도권	6개	진리, 벌금, 치도, 대리, 식도, 왕등도
	고창II	10개	반월, 하전, 구시포, 장호, 광승, 해리, 만월, 용기, 선운, 후포
1998	옥도권	3개	개야, 연도, 어청도
2001	염섬권	5개	말도, 명도, 방축도, 관리도, 비안도
2004	선유권	5개	선유도, 장자도, 무녀도, 신시도, 야미도
합계	7개 권역	42개	

자료: 전라북도 수산정책과(2021)

[표 2-16] 전라북도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경과

연도	권역별	어촌계수	어촌계명
2007	고창 (남부권역)	8	구시포, 장호, 자룡, 광승, 동호, 만월, 하전, 용기
2010	군산 (선유권역)	5	선유도, 신시도, 장자도, 야미도, 무녀도
2013	부안 (위도권역)	6	진리, 벌금, 대리, 치도, 식도, 왕등도
합계	3개권역	19개	

자료: 전라북도 수산정책과(2021)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분야 분리에 따라 권역단위 거점개발과 마을단위 특화개발 유형으로 지역 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은 광범위한 범위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사업지역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100억 원 규모로 국고, 지방비(도, 시·군), 자부담으로 구성됨.
-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은 해당 마을 여건에 맞추어 20억 원~33억 원 규모로 국고, 지방비(도, 시·군), 자부담으로 구성됨.

[표 2-17] 전라북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분야 사업추진현황

연도	사업유형	마을명(시군)	사업내용
2018	권역단위 거점개발	심원면 만들 (고창군)	마을생태숲, 만들문화방, 특산물판매 및 로컬푸드 체험장 등
2018	마을단위 특화개발	위도면 대리·전막 (부안군)	융복합관광체험센터, 진입로정비, 경관개선 등
2019	권역단위 거점개발	변산면 격포항 (부안군)	SEA FOOD 거리, 시의거리, 입구경관개선, 권역 가로환경·쉼터 정비 등
2019	마을단위 특화개발	심원면 용기 (고창군)	특산물판매 및 로컬푸드 체험장, 갯벌생태·낙시공원조성, 경관개선 등
2019	마을단위 특화개발	변산면 유유 (부안군)	참봉테마거리, 유유자적 휴마당, 여락문화관, 건강의 집, 배움터 등
2020	권역단위 거점개발	심원면 공산 (고창군)	활피마을문학관, 국화종자원, 빈집공유, 국화공원, 아가장군전설길 등
합계	권역단위 거점개발 3개소, 마을단위 특화개발 3개소		

제2절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활성화 추진사업 성과

1. 수산업 발전 지원사업

1) 수산업 인프라 조성·관리

-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작업 공간 조성·관리가 중요하며, 어항 조성, 수산업 작업설비, 시설 설치 등을 추진함.
 -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건설과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물양장 조성·관리 등 수산업 인프라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수산업 작업지원을 위한 설비시설 설치·관리사업으로 어촌계 작업장 환경정비,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등을 추진함.
 - 수산장비 구입이 어려운 어가에게 장비를 임대하여 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점검 등을 지원함.
- 수산자원 보호, 어장관리, 불법어업관리 등 수산업 질서를 유지하고 각종 해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업지도선을 운영함.
 -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소방, 구명, 항해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함.
 -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어선인양과 소형어선 안전관리비용을 지원하여 어업 안전사고를 예방함.

2) 수산업 연계산업 활성화 지원

(1) 수산업 활성화

- 해조류, 천일염, 패류 등 전라북도 특화 수산물 생산자를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조성함.
 - 해조류 생산에 필수적인 물김 세척수 정수, 김 활성화처리제, 김양식어가 물김포대 구입 등 생산여가를 지원함.

- 천일염 포장재, 천일염 명품화 시설 확충 등 천일염 생산 활성화를 지원하며, 패류생산 증대와 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양식어장 해양환경을 개선하여 패류어장 생산성 증대를 지원함.
 - 부가가치가 높은 전라북도 수산물 수출전략품종 육성을 위한 서식장 조성, 우량종자 방류, 종자생산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수산인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어업생산성·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업인 신문보급을 지원하고, 풍어제 등 어업문화를 보전함.
- ‘한국수산경제신문’, ‘수산신문’ 등 어업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지를 어촌계, 수산업경영체, 자율관리공동체 등에 보급함.
 - 어업인의 안전조업과 풍어를 기원하는 어촌 전통문화를 보전하기 위해 해양 안전조업 풍어제를 지원함.
- 수산업 노동인력부족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화 장비 지원,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수산업 발전 지원
- 수산물 가공공장, 제빙기, 진공포장기 등 보관·처리시설과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수산물 생산 이후 체계적인 유통단계 관리
 - 해상크레인, 패각분쇄기, 김 채취기, 양식물 선별기 등 자동화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수산업 노동인력부족과 고령화에 대응함.
- 수산인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어선·어선원 보험료 지원,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사업 등 어업 위험관리제도 운영
- 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등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안정적인 양식 수산물 생산 활동을 지원함.
 - 어선·어선원 보험료,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하여 어업재해로부터 어선과 어선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보장함.

(2)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 수산물 안전과 위생 강화를 위하여 수산물 기자재 교체를 지원하여 수산물 위생과 안전성 제고 효과를 도모함.
 - 젓갈용기, 어상자, 톤백마대, 젓갈용기 등 천일염 생산 기자재를 교체하여 수산물의 위생 수준의 향상을 도모함.
 - 이물질 유입과 오염 가능성이 높은 목재 어상자를 플라스틱으로 교체하여 이물질 혼입을 예방, 수산물 안전성을 높임.
 - 수산물가공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위생, 안전성 제고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수산물 소비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지역 수산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광역지자체 통합·공동브랜드 ‘해가람’을 활용하여 전라북도 수산물 인지도 제고, 공동마케팅 등 수산식품 소비촉진 지원
 - 전라북도 수산물의 소비증대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상파 광고방송 송출, 포장재 지원, 홍보물 보급 등 공동마케팅 활동 추진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드라이브 스루 비대면 수산물 판매를 비롯하여 지역 수산식품의 소비확대를 위한 주말 반짝 장터, 소비 지원 등 마케팅 활동을 지원함.

- 전라북도 수산인, 수산식품기업의 국내·외 수산식품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여 수산식품 판로개척, 수출 활성화를 지원함.
 - 국내·외 수산식품박람회에서 다양한 판매계약이 체결되므로 수산식품 판로확대, 수출증대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
 - 수산식품박람회 참여에 발생하는 부스임차비, 장치비, 기본비품 임차비, 운송통관비, 통역비 등을 지원하여 국내·외 판로확대를 지원함.

3) 내수면산업 경쟁력 강화

- 전라북도 내수면산업의 발전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한 내수면 생산시설, 설비 등 기반

조성을 지원함.

- 친환경 미꾸리 양식시설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미꾸리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강화에 기여함.
-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식수산물 질병예방과 품질 제고, 생산성 향상과 소독제, 수질정화제 등을 지원하여 양식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함.
- 수조, 침전조, 하우시설 등 노후시설의 보수를 지원하는 내수면 양식어가의 시설 현대화로 내수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 스마트양식장관리시스템 도입, 지하수 개발 지원 등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응하는 예방시스템을 구축함.

- 양식장과 모바일기기를 연결하여 양식장 정전 발생시 자동 통보되는 정전알림 스마트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류폐사 위험에 대비함.
- 폭염, 한파 등 기상이변에 대응하여 전북도내 양식장에 관정시설을 설치하여 위험대비, 양식장 생산성 향상, 피해 최소화에 기여함.

○ 생태계 교란어종을 수매하여 토산어종의 서식공간을 확보하고, 어도 개보수를 통하여 수산자원 조성효과 극대화,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

- 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붉은 귀 거북 등 생태계 교란어종으로 지정된 위해어종을 수매하여 내수면 토산어종의 서식공간을 확보함.
- 「내수면어업법」 제19조에 따른 내수면 어도 개보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수산자원 조성효과를 높임.

○ 내수면양식 청년 창업어가를 지원하여 내수면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을 유도함.

- 청년 창업어가에게 초기 자본을 일부 지원, 내수면 양식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일자리 창출, 어업인 소득증대 효과를 도모함.
- 발전기, 펌프, 수차, 천막, 사료 급이기, 배합기 등 양식장 조성에 필수적인 기자재와 지하수 개발 등을 지원함.

4) 수산업 지속 가능성 제고 지원

- 어업공동체 육성, 수산생물 서식장 조성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수산인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자율관리어업육성 주체인 어업공동체를 육성하여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기반을 조성함.
 - 연안 수역에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인 수산업 생산력 향상을 도모함.
 - 인공어초 설치와 어초어장의 관리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폐기물 제거 등 어초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함.

- 친환경 수산용품 보급을 지원하여 연안어장의 환경보호와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 수산업 경비 절감을 지원함.
 - 양식어장에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여 연안어장의 환경을 보호하고 내구성 향상으로 어업인 경비 절감 혜택을 부여함.
 - 양식·종묘생산어가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유도하여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친환경에너지절감장치를 보급하여 어업경영실적 개선에 기여함.
 - 생분해성 어구와 어망을 보급하고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여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환경오염과 수산피해를 줄임.

- 전라북도 연안어업실태조사, 바다목장과 해중림 조성, 수산종자 매입방류와 방류효과조사, 수산업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하여 수산업의 미래 세대 양성, 지속가능한 발전체계를 구축함.
 - 분야별 어업인 현황, 조업실태, 경영 상태와 감척희망 등 전라북도 연안어업 실태조사를 토대로 연안어업의 구조개선, 효율적 지원방안을 모색함.
 - 바다목장과 해중림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운영 중인 바다목장과 해중림을 관리하여 현재와 미래의 수산업 발전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
 - 바닷고기, 민물고기 등 우량 수산종자를 매입하여 방류하고, 방류효과를 조사하여 효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함.
 -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산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전라북도 수산업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높임.

2. 어촌 활성화 지원사업

1) 어촌 정주여건 개선

- 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은 열악한 인프라 개선사업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인프라 개선사업은 어촌뉴딜 300사업,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하여 정주여건과 어촌 접근성 개선, 어업외 소득창출 기반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
 -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라북도 어민수당을 지급함.

- 어촌·어항 인프라 개선을 위한 생활SOC 지원사업은 대표적으로 어촌뉴딜 300사업과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있음.
 - 어촌뉴딜 300사업은 2019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어촌·어항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 전라북도는 총 22개 어촌·어항이 어촌뉴딜 300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어 체계적인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하고,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어업외 소득증대와 거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함.

-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따른 어촌공간 유지, 과소화 예방을 위한 직불제 지원과 어민수당 지급 등 경제적 지원·보완 사업을 추진함.
 - 생산성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도서지역 이탈방지, 어촌의 다원적 기능 보존, 수산업 존속을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추진
 - 지자체 차원에서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지속적인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전라북도 어민수당을 지급함.

2) 어촌 활성화 지원

- 어촌 활성화는 기존 어민 또는 지역주민 어업소득증대사업과 관광객, 방문객 대상의 어촌체험마을 운영을 통한 어업의 소득증대사업이 추진됨.
 - 지역 어민과 주민의 어업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인 어촌특화지원센터와 귀어·귀촌인의 정착과 지역 융합을 지원하는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함.
 - 전라북도 어촌체험마을의 특색 있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어업의 소득창출과 방문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함.

- 현재 전라북도 어촌체험마을은 총 7개소가 운영 중이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촌체험마을 기반조성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함.
 - 어촌체험마을 종합안내소, 갯벌체험장, 체험장비, 안전장비 등 어촌체험마을 관광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함.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여 어촌 특성에 맞는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체험마을 운영 활성화, 안정적 유지에 기여함.

-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창업·경영컨설팅, 연구개발 지원, 판매·유통·홍보지원 등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지원 전담기구인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함.
 - 전라북도 어촌특화지원센터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위탁운영체제로 어촌특화 창업, 컨설팅, 제품개발, 제품판매, 홍보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귀어귀촌 활성화 대응, 어촌마을 과소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민 어촌유치와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함.
 - 전라북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군산시수협 위탁운영)를 운영하여 단계별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어촌 활력증진과 귀어·귀촌 활성화에 기여함.
 - 우수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착자금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어촌 노동력 부족, 고령화 문제에 대응함.

3.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활성화 추진사업 성과

- **(수산업·어촌발전정책사업 만족도 양호)**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활성화 정책사업은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인과 어촌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함.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활성화 정책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만족도는 지역 수산인 대표그룹인 “삼락농정포럼 수산분과위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임.
 - 수산업·어촌 발전 정책사업에 반영된 경우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에 용이하지만, 신규 사업의 발굴, 채택, 반영 과정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인식함.

- **(수산업·어촌발전정책사업 이행체계 고도화)** 정부 관계부처 대응력 제고를 통한 전라북도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성과 개선
 -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은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물 수산정책과가 소관부서임.
 - 기존 농축수산물국 해양수산정책과가 2020년 7월 새만금해양수산물 수산정책과, 해양항만과로 분과되면서 정책업무의 전문성 제고 기반을 마련함.

-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물 조직개편을 통하여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체계를 고도화함.**
 -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은 대부분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추진되며 하향식(Top-down)으로 추진됨.
 - 현재 전라북도 수산정책과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담하여, 수산업·어촌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

- **전라북도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은 2021년 기준 총 80건이며, 소관부서는 수산정책과임.**
 - 정부정책사업은 지자체(광역, 기초)가 상호 협력하여 처리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정책사업 특성에 따라 국고보고사업(25건), 균특보조사업(3건), 균특이양사업(15건), 지자체 자체사업(37건) 등으로 구분됨.

- 총 80건의 정책사업(어업지도선 운영 제외)을 수산정책과 4개 팀에서 분담하여, 1인당 약 5.3건의 정책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총 80건의 정책사업(어업지도선 운영 제외)을 수산정책과 4개 팀 주무관 인원으로 나눈 것으로 과장, 팀장 등 업무총괄 담당인력은 제외함.
- 업무별 투입 자원의 양이 다르므로, 사업수 대비 공무원 인원수로 산정하였으며, 2021년 12월 기준 인력을 적용함.

○ 1인당 담당하는 정책사업의 수는 평균 5.3건이며, 1인당 근무시간(월 22일, 일 8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사업당 49.8일(398.5시간)을 투입할 수 있음.

-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현황조사와 여건분석, 대상자 선정, 전문가 자문(평가), 이행, 사후관리, 성과평가 등을 추진해야 하며, 다양한 관계자의 협조를 구해야 함.

- 사업당 약 50일 가량을 투입할 수 있으므로, 사업목적에 맞추어 성실히 추진하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정책사업별 추진인력의 제한이 있다보니 국책사업, 국가예산사업, 신규시책 발굴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특성화 사업 제안에 한계가 있음.

- 추진이 확정된 정책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사업 발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타 지역 수산업·어촌 활성화 정책사업과 유사성이 높아짐.

- 실제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상향식 정책사업을 제안할 경우 담당 업무시간 외에 별도의 시간을 내서 관련 제안서, 계획서 등을 작성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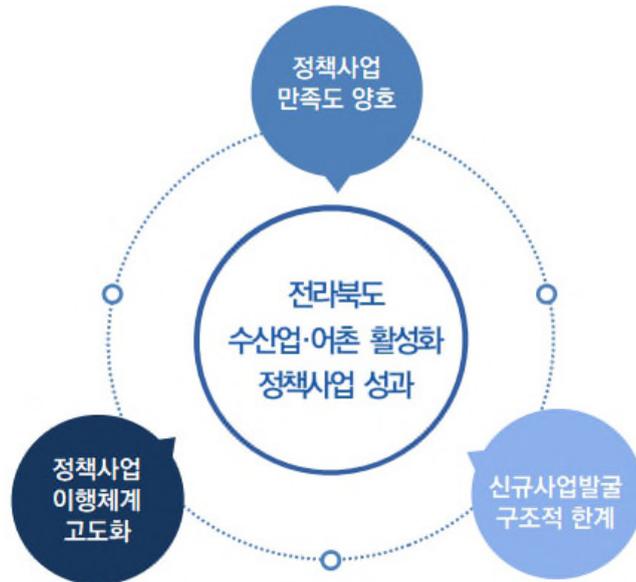
○ **(수산업·어촌발전 신규정책사업 발굴과 추진 한계)**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 활용사업을 제안하거나 정부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자원 투입에 한계가 있음.

- 전라북도 수산자원을 활용하는 지역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거나, 정부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현황파악, 여건조사, 전문가 자문, 평가, 계획서 작성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함.

- 단기적으로 사업제안의 채택 여부에 따라 성과평가에 반영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채택되지 않더라도 정책제안서 작성과정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여건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수산인과 어촌 거주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관계 시·군 공무원이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 공감함.
 - 수산인과 어촌 거주자도 각자의 생업이 있으므로 공동체 활성화에 몰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지역 현안해결형 정책사업을 구상하면 연간 1인당 평균 5.3건의 정책사업을 담당하는 여건에서 신규 업무가 추가되어 질적 성과 제고에 한계가 있음.
 - 현 상황에 신규 사업을 제안하여 채택될 경우 수산업·어촌발전정책사업 업무가 추가되어 결과적으로 업무 가중 현상이 발생됨.
 - 현실적으로 현안해결형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함.



[그림 2-1]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활성화 정책사업 성과

제3절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활성화 과제

1. 수산업·어촌발전 정책사업 범위

1) 수산업 발전 기반과 환경 조성 사업 범위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정책사업 범위를 살펴보고, 현행 지역 행정조직 구조상 효율적 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 관련 법 제3장 수산업 발전기반 및 환경조성 사업은 수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수산업 종사자 육성 등으로 구성됨.
 - **(수산업 발전 기반 조성)** 친환경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업 생산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수산업 생산기반 정비, 보강, 보전(수산업 생산기반 정비),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계화, 시설현대화 추진, 수산업과 어촌의 환경보전 기능 증대, 안전한 수산물 생산, 소비 촉진 기반 조성(친환경 수산업 촉진)
 - **(수산업종사자 육성)** 가족어가의 경영안정, 수산업 종사자 육성, 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전업수산업인 육성, 여성수산업인 육성, 수산업 관련 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등 회사법인 육성, 벤처수산업 육성, 귀어업인 육성, 수산업 단체 육성
- 수산업 발전기반 조성 중 수산업 실태조사 및 DB 구축을 통하여 현황 분석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 어업경영체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어업경영체 경영안전 및 구조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구축
 -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 DB 구축을 통해 현재 수산업·어촌 실태를 파악하고 현안문제 발굴 및 효율적인 해결방안 모색 가능
 - 기타 수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산업 재해 예방·복구,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수산업 관련 연구·기술개발의 촉진, 지식재산권 보호 등 추진
- 수산업·어촌 발전 전담기관의 지정·운동을 도모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재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한국수산업어촌공단으로 확대 개편되어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2) 어촌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 정책사업 범위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장에서 규정하는 정책사업 범위를 살펴보고, 현행 지역 행정조직 구조상 효율적 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 어촌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업기지로서의 어촌 역할을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서비스 보완, 교류 활성화 등을 추진하도록 함.
 -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계승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을 추진함.
 - 어촌 생활인프라 개선을 통하여 어촌 지역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어촌지역산업 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구체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의 수산업·어촌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
 - 수산업과 어촌지역의 정보화를 추진하여 수산업과 어촌 현황정보를 파악하고, 현안문제 해결의 객관적 자료로 활용함.
 - 어촌관광, 어촌체험, 수산업 관련 자연학습, 휴양자원 개발 등 어촌 특유의 자원을 개발하고, 도시민의 어촌생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하여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추진

2.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활성화 지원조직 운영현황

1) 전라북도 어촌특화지원센터

(1) 운영특성

-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어촌 6차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어업의 소득증대를 지원하는 현장밀착형 전담기구임.
 - 어촌특화지원센터는 공공기관, 대학, 언론사 등 지역별 특화발전에 적합한 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음.
 - 어가인구 감소, 심각한 고령화 문제, 6차 산업화 한계, 어촌지역 간 네트워크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문 기구를 운영함.
 - 업무범위는 어촌특화발전을 위한 창업·컨설팅, 연구개발, 관리, 어촌특화사업제품 육성, 정책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제28조의 2).

- 전라북도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 6차산업화를 통한 새로운 희망어촌 창조”를 비전으로 설정함.
 - ‘지역 어민의 소득증대, 어촌의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어부지리 프로젝트”로 명명함.
 - 어촌특화 자원발굴을 위한 어촌특화 역량강화, 자원조사, DB구축, 선도마을 컨설팅 및 사후관리 추진
 - 6차 산업화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 6차 산업화 컨설팅, 특화제품 홍보 지원 및 내수면 활성화 지원사업 이행
 -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홈페이지 구축, 어촌특화네트워크 구축, 어촌마을 특화판매장터 운영 등을 추진함.

- 현재 전라북도 어촌특화지원센터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의거 매년 위탁운영계약 체결
 - 센터장 포함 총 7명(정규직 5명, 계약직 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최초 위탁운영 이후 매년 어촌마을 특화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지원사업 추진
 - 창업컨설팅, 연구개발, 사후관리, 역량강화 지원 등으로 업무영역을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이행하고 있음.



자료: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홈페이지(접속일: 2021. 12. 9.)

[그림 2-2] 전라북도 어촌특화지원센터 주요전략과 세부사업

(2) 운영성과

○ **(어촌특화발전지원의 전문성과 안정성)**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에 근거한 어촌특화발전지원업무의 안정성과 위탁운영기관의 전문성이 결합됨.

- 창업 및 컨설팅, 연구개발, 사후관리, 육성 및 지원 등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제28조의 2에 근거한 어촌특화 필요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 법률에 근거한 어촌특화발전사업은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으며, 3년 이상 지속 운영을 통한 위탁운영기관의 전문성 제고에 따른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

○ **(지역어촌특화 최우수사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개최한 2021년 어촌특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임실군 섬진강 다슬기마을이 최우수상을 수상함.

- 지역 수산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산식품생산,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전 폭적 지원 성과에 따른 결과로 판단됨.
- 임실군 섬진강 다슬기 마을에서 생산되는 다슬기를 활용하여 마을 활력 증대, 일자리 창출, 귀어·귀촌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어촌특화상품 제품개발)** 2021년 전라북도 대표 어촌특화상품으로 섬진강 다슬기 강된장과 군산 선유삼합, 부안 격포 회오리 삼합 등을 개발함.
 - 섬진강다슬기 된장소스 개발은 시제품 개발, 식품의 기능성 평가를 토대로 라면, 녹차 등 제안하고, 부산물 활용 방안 등 제품화 제안
 - 어촌 먹거리 개발의 일환으로 군산 선유도와 부안 격포를 대상으로 조리기술 전수교육, 현장코칭, 시식회 등을 통한 지역삼합 개발

- **(수산업·어촌 전반에 걸친 사업 추진 한계)** 어촌특화자원을 활용한 어촌특화발전 지원 근거에 따라 수산업·어촌 발전 전반에 걸친 사업에는 한계가 있음.
 - 마을 인적자원 역량강화, 수산자원의 6차 산업화를 통하여 어촌 활력을 제고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광범위한 영역의 수산업·어촌 발전 사업에 한계가 있음.
 - 전라북도 어촌특화발전사례를 창출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 특성화 동력 확보 한계

2) 전라북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1) 운영특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함.
 - 귀어·귀촌 희망자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하도록 함.
 - 귀어·귀촌희망자에 대한 상담, 안내, 정보제공, 교육 등 사전 단계와 실질적인 어업기술지도, 어촌적응 교육사업 등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함.

- 전라북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는 군산시 수협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귀어·귀촌인이 새로운 어촌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정착을 지원함.
 - 귀어귀촌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은 대표적으로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등이 있음.

- 귀어귀촌은 어촌 출신 도시거주자가 타 어촌 지역으로 귀어(J-턴), 고향 어촌으로 귀어(U-턴), 도시에서 태어나 살다가 어촌지역으로 귀어(I-턴)하는 유형으로 구분함.
-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어업교육 및 어업창업 컨설팅, 주거환경 정보제공 등 실질적 귀어·귀촌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

○ “열린공간의 어촌”, “눈높이 맞춤형 교육”, “어촌정착 환경조성”, “미래 삶 터전의 어촌” 등 4가지 추진목표를 설정함.

- 다양한 귀어귀촌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구축, 홍보 활성화, 현장방문 등을 추진하며 도시거주자가 집중되는 장소에서 귀어귀촌 상담을 추진함.
- 눈높이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귀어귀촌 희망자의 역량에 맞춘 단계별 교육과정과 휴양, 레저 등 어업외 소득창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 어촌정착을 위한 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업창업 컨설팅, 어촌 희망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 관련 정보제공, 어촌 멘토링 제도를 활용함.
- 미래 삶 터전의 전라북도 어촌을 가꾸기 위하여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고 귀촌하고 싶은 희망의 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역량강화, 인식제고 사업을 추진함.



자료: 전라북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접속일: 2021. 12. 9.)

[그림 2-3] 전라북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단계별 지원사업

(2) 운영성과

- **(전라북도 귀어·귀촌인 증대)** 전라북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수요자 맞춤형 교육, 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귀어·귀촌인 증대 효과
 - 도시지역의 주요 거점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새우 양식장 5일 체험, 양식장, 어선 운행 등 현장교육 등을 추진함.
 - 귀어·귀촌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보교환,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요리강습 등 동아리 모임을 지원하여 귀촌 후 정착 지원 효과 제고
 - 귀어·귀촌 상담실적은 2019년 162명, 2020년 265명, 2021년 397명 등 종합지원센터 설립과 전담 인력 배치로 귀어·귀촌희망자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 귀어·귀촌 교육실적은 2019년 221명, 2020년 94명, 2021년 210명으로 코로나19로 급감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연간 200명 이상 실제 교육·체험에 참여함.

- **(맞춤형 홍보·상담 역량강화)** 귀어·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상담등을 전담하는 인력 운영을 통한 역량 강화 효과가 있음.
 -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홈페이지 운영, 교육 전용 인프라 구축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고품질의 맞춤형 교육·상담 가능
 - 해양수산 분야의 박람회, 엑스포 등 귀어·귀촌 희망자가 많이 참여하는 행사 중심으로 상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계획했던 성과를 달성함.
 - 서울역에 홍보부스(임대기간: 2021. 11. ~ 2026. 11.)를 운영하여 귀어·귀촌에 관심 있는 다양한 지역의 도시민 상담, 안내, 홍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

- **(귀어·귀촌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구상)** 귀어·귀촌의 목적에 따라 주력 업무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요자 맞춤형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 귀어·귀촌 희망자 요구에 맞추어 귀어·귀촌 종합교육, 어촌 및 양식장 5일 체험, 양식장 현장체험, 어선 몰아보기 등 현장 중심의 교육 만족도가 높음.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와 시간을 내기 힘든 도시민의 여건을 고려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기초 이론교육 프로그램 개발

- (귀어·귀촌 후 정착지원 성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어·귀촌 후 어업 역량 강화와 마을 정착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
 - 귀어·귀촌자의 마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동아리 모임을 지원하여 귀촌자 간 원활한 정보공유, 소통의 기회를 제공함.
 - 귀어인 대상 마을 어촌계의 화합을 유도하고, 귀어인 소유 어선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

- (귀어·귀촌 지원정책 성과와 한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정책사업의 안정성과 위탁운영기관의 전문성을 통해 소기의 목적 달성에 유리하지만 귀어·귀촌 영역에 한정됨.
 - 귀어·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교육, 정착 후속 지원 등 새로운 어촌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는 전문성과 사업 안정성이 높음.
 - 이 사업의 근거법은 귀어·귀촌자를 대상으로 한정하므로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력 제고에 기여하지만 궁극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의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음.

3) 전라북도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전라북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1) 운영특성

- 전라북도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전라북도 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기관미션으로 설립된 전라북도 출연기관임.
 - “바이오·식품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북도 바이오·식품산업의 중장기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미래지향 선도사업 발굴, 지역 농어민 지원 등을 추진함.
 - 전라북도 지역 특화 자원의 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과 제품생산을 지원, 제품 성분 검사와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함.

- “기대가 현실이 되는 농생명·바이오 전문기관”의 슬로건에 부합하도록 ‘전문성과 혁신’, ‘공정성과 투명성’, ‘소통과 협력’을 핵심가치로 설정함.

- “농생명·바이오산업 미래가치 선도”, “기업혁신 생태계 조성”, “사회적 가치 기반 경영체계 구축” 등 3대 목표를 수립하고 각 목표별 3개의 전략과제를 설정함.

- 농생명·바이오산업 미래가치 선도: 1) 혁신기술 중심형 연구개발, 2) 4차 산업 기반 정책연구 활성화, 3) 기술사업화 등 기술혁신 확대지원
- 기업혁신 생태계 조성: 1) 기업혁신 성장지원, 2) 글로벌 경쟁력 강화, 3) 일자리창출지원혁신
- 사회적 가치 기반 경영체계 구축: 1) 사회적 가치 구현 강화, 2) 지속성장 경영체계 운영, 3) 디지털기반 조직역량 확대

○ 수산물을 활용한 제품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 연구개발센터, 디자인센터, 첨단바이오식품센터, 물류센터 등을 운영함.

- 농산물을 활용하여 사업화, 창업, R&D, 기술지원, 생산분석지원, 인력양성, 마케팅지원, 기술거래 등 산업 전반의 육성을 지원함.

-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수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 건강식품 등을 개발해야 하는데, 현재 지자체 출연기관으로서 농산물을 활용한 기능을 수행함.

○ 해양수산부의 일자리 정책사업인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공모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전라북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업무를 담당함.

-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2021년 해양수산부 신규시책사업으로 부산, 제주, 경북, 강원, 전남, 충남 등 6개 지역에서 운영되었음.

- 2022년부터 전라북도 해양수산 기업과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 초기 기업과 예비 창업자 성장단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

○ 전라북도 해양수산분야의 창업, 성장, 고도화 등 성장 사이클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수산업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창업단계 기업은 창업아카데미와 사업화 지원을 추진하고, 성장단계 기업은 신제품 개발, 인증지원, 통합 마케팅 등을 지원함.

- 고도화 단계의 기업은 해양수산 해외시장개척 수출거점 그리드 구축, 사업 고도화와 예비취업자 연계지원, 일자리 박람회 등 개최를 통하여 수산업 저변 확대에 기여함.

(2) 운영성과

- **(공공기관 안정성과 전문성)** 전라북도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안정성, 지속성을 가지고 바이오융합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설비 등 확보
 - 농생명 산업 발전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인력과 설비를 보유하여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전라북도 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수산업,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에 제한적 참여가 가능한 상황임.
 - 수산업,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경우 기존 기관이 보유한 전문연구설비, 시설 등을 활용하여 가시적인 성과 달성에 유리하다고 판단됨.
 - 농생명, 바이오산업 육성 목적이 분명하므로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영역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전라북도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운영성과)** 지역 바이오 자원을 토대로 식품, 의약품 등 개발에 특화되어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구축하여 소기의 성과 달성
 - 농업 바이오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 의약품 개발에 특화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 수산자원을 활용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
 - 향후 수산 바이오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과 의약품 개발을 통하여 미래 수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음.

- **(전라북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기대효과)** 해양수산분야 벤처창업 일자리 지원 사업을 비롯한 일자리, 창업, 기업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유함.
 - 해양수산벤처창업 일자리지원사업, 전북식품산업고용성장패키지지원사업, 바이오인력양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의 성공적 운영 가능성 보유
 - 유사한 일자리, 창업 지원사업 성과를 토대로 지역 해양수산기업 취업연계, 기업지원 실적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 2021년 12월 '전라북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로 확정되어 실제 운영이 2022년부터이므로 운영 성과는 없음.

4) 전북씨그랜트센터

(1) 운영특성

- 전북씨그랜트센터는 현재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며, 지역 해양 환경에 따른 현안문제 해결방안 연구성과를 공유함.
 - 1966년 미국 씨그랜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2000년도부터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KSGP, Korea Sea Grant Program)을 운영함.
 - “전북씨그랜트센터”는 2017년도에 신규 지정되었으며, 현재 총 8개 권역에서 해양수산업 현안문제를 발굴하고, 문제의 해결방안 연구 및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지역민에 환원하는 대민지원 활동을 수행함.

- 지역 해양환경 특성에 따른 현안문제와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연구성과를 어민, 어촌 거주자에게 공유하여 수산업 지속가능성을 높임.
 - 전라북도는 1990년대 시작된 새만금개발사업으로 해양환경 변화, 수산세력 약화 등을 경험하고 있음.
 - 새만금사업에 따른 환경변화와 기후변화 등에 따라 독특하게 발생하는 지역 해양수산 현안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
 - 2017년부터 현재까지 현안연구로 “인공 기질을 이용한 바지락 자연채묘 장치개발(단기, 2017. 10.~2018. 12.)”과 “곰소만 갯벌 대체 양식품종 개발을 위한 꼬막 양성 시험(장기, 2017. 10.~2021. 12.)” 연구를 추진함.

- 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안문제 연구결과와 연구성과에 대한 공청회, 기술교육 등 대민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수산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운영성과

- **(정부예산 안정성과 씨그랜트센터 전문성)** 지역별 씨그랜트센터 운영은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있으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를 담당함.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 혁신과 산업생태계 육성자' 역할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안정적 운영 가능성이 높으며, R&D 전문성을 갖춘.
 - 전북씨그랜트센터는 지역 해양수산 현안에 대한 이해가 높고, 해양수산분야 전문성을 갖춘 지역 전문가가 다수 투입되어 전문적인 성과 달성 가능

- **(해양수산 연구개발 성과 축적)** 지역 해양수산 현안 해결을 위한 R&D 사업 특성에 맞추어 해양수산 연구개발 성과를 축적하고 있음.
 - 전북씨그랜트센터의 지역 해양수산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R&D 연구는 “바지락 자연채묘 장치 개발”과 “곰소만 갯벌 대체 양식품종 개발” 등이 있음.
 - 바지락 채묘장치 개발과 갯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신규 양식 품종 개발은 지역 수산인 생산성 제고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 해양수산 미래연구세대를 양성하는 대학원생 주도과제를 연간 5건씩 이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지역 해양수산관계자, 어민과 공유하고 있음.

- **(전라북도 해양수산 전문가 그룹 활용)** 연구사업과 교육·대민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한 지역 해양수산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다양한 자문 가능
 - 지역 해양수산 현안대응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북씨그랜트센터 중심의 지역 해양수산 전문가 그룹이 형성됨.
 - 도외 해양수산 전문가는 전북씨그랜트센터와 정기적 교류를 통해 지역 현안 인식을 높여가고, 상호 협력을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전북씨그랜트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된 지역 해양수산 전문가 그룹은 다양한 해양수산 현안 이슈 대응의 자문 활동을 통해 수산업·어촌 활성화에 기여함.

3.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활성화 과제

1) 지역균형발전관점 전복형 수산업·어촌 발전사업 구상 필요

-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를 추진하는 현행 법체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해양수산업발전기본법」 등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은 대부분 국가와 지자체 협력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국가와 지자체 협력 구조가 많은 현실은 전국 수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라북도 여건은 정책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전라북도 내수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 특화자원 발굴 및 국가사업화 전략 수립 필요
 - 대부분 모든 지자체에서 유사한 수산업·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예산지원규모는 어민 수(수혜자), 수산업·어촌 인프라와 비례하는 형태를 보임.
 - 이러한 추세는 수산업·어촌 활성화 사업의 유사성을 높이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어민 수, 인프라 등)에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음.

- 전라북도의 수산업·어촌 발전 정책사업은 기존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신규사업 발굴·추진으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함.
 -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수산업·어촌 발전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추진목적 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도화할 수 있음.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독특하고 창의적인 신규 사업을 제안하여 지역 해양수산 브랜드 정책으로 발전시킴.

- 전라북도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사업의 하향식 구조와 조화로운 상향식 제안사업 구상 지원 방안 모색
 -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시·군 관계 부서의 행정담당인력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응전략 모색 필요

-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 목표에 부합하고, 기존 사업과 조화로운 연계가 가능하며, 지역의 독특한 자원과 환경을 활용하려면 지역 현안문제의 해결방안 모색에서 시작해야 하며, 이는 수산업과 어촌 전문가, 지역 전문가의 참여가 요구됨.

2) 광범위한 수산업·어촌 발전 사업에 따른 지자체 한계 극복

- 현 체계에서 지역 해양수산 현안의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거나, 전라북도 에서 추진 가능한 실험적인 정책사업을 발굴·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전라북도 수산정책 관련하여 연간 1인당 5.3개의 정책사업을 담당하여 특성화 자원 발굴과 신규사업 제안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 대응해야 함.
 - 대부분 수산업·어촌 현안 인식은 어민과 거주자가 체감하고 있으므로 민간과 행정의 연결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에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규정에 따른 모든 정책사업 담당자를 배정하기에는 조직 규모와 행정구조의 경직성에 따른 한계가 있음.
 - 현재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를 위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지원과 미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적절히 분배되어 있음.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수산업 발전기반 조성과 어촌 활성화 사업은 광범위한 영역으로 규정함.
 - 위에서 언급한 광범위한 영역의 정책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인적자원과 예산이 필요하며, 지자체 여건을 고려할 때 수산정책 분야만을 고려한 자원 보강은 기대하기 힘들.
-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전라북도에서 이행하지 못하지만 필요한 정책사업에 대한 추진전략 수립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한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별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법률 규정에 따른 지역 수산업·어촌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유사한 목적의 정책사업 추진을 연계하는 역할 검토

3)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업과 관련 지원조직 협력방안 모색

- 중장기적 행정업무 수요에 대응하여 단계적으로 전문인력을 확충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함.
 - 전라북도는 2020년 7월 수산정책과 해양항만 분야의 이질적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음.
 - 조직개편 과정에서 수산업·어촌 정책분야에 대한 세분화, 전문화가 이루어져 수요자 만족도 제고의 기회가 마련되었지만, 행정인력 확보의 비탄력성 한계가 있음.

- 단기적 수산업·어촌 발전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조직 비탄력성을 극복하기 위한 중간 지원조직 활용과 관련 조직 간 협력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수산업·어촌 발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관련 조직의 전문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 맞춤형 현안해결 및 발전 전략 수립 필요
 - 현재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조직은 어촌특화지원센터,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등이 있으며, 법·제도 규정에 따른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조직은 설립목적에 따른 분명한 사업범위와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수산업·어촌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발전이지만, 법·제도적인 설립근거에 따른 각 기관별 사업범위와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현재 수산업·어촌발전지원조직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한 정책사업 중 중요성과 긴급성이 높은 사업 지원을 위해 운영 중임.
 - 따라서 전담 분야와 사업이 배정된 수산업·어촌발전지원조직별 운영방식, 추진과정 등을 거시적인 목표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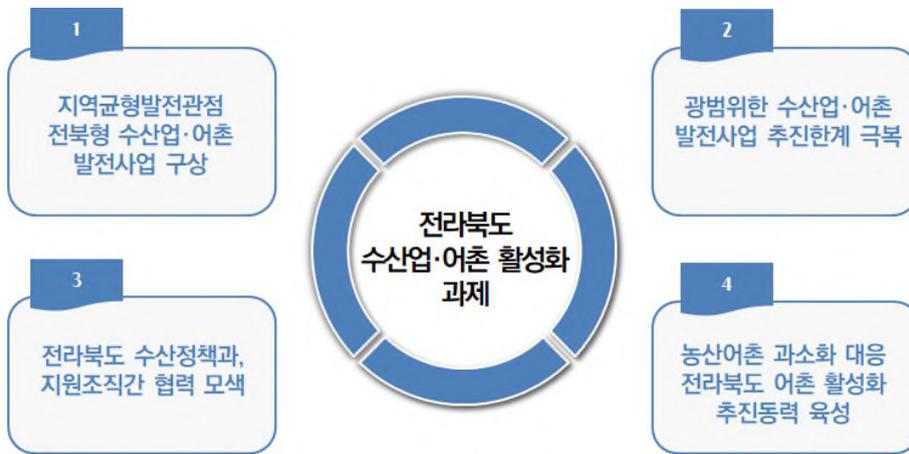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한 정책사업 목적달성과 사업 간 연계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관련법에서 규정한 신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규 지원조직을 지원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책사업간 융·복합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 기존 운영 중인 지원조직 운영 활성화와 어촌공간 관점에서 지원조직 간 연계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음.
 - 예컨대, 'A 어촌마을' 자원의 특화발전을 위한 6차 산업화와 귀어·귀촌 희망자를 지원하는 정책사업은 추진방식(대상, 지원방법, 성과지표, 효과 등)에 차이가 있음.
 - 귀어·귀촌 희망자가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A 어촌마을' 수산업 발전, 과소화 대응, 지역사회 활력증대, 어촌특화 6차 산업화를 통한 귀어·귀촌인 소득 증대 등 정책사업 효과의 융·복합을 유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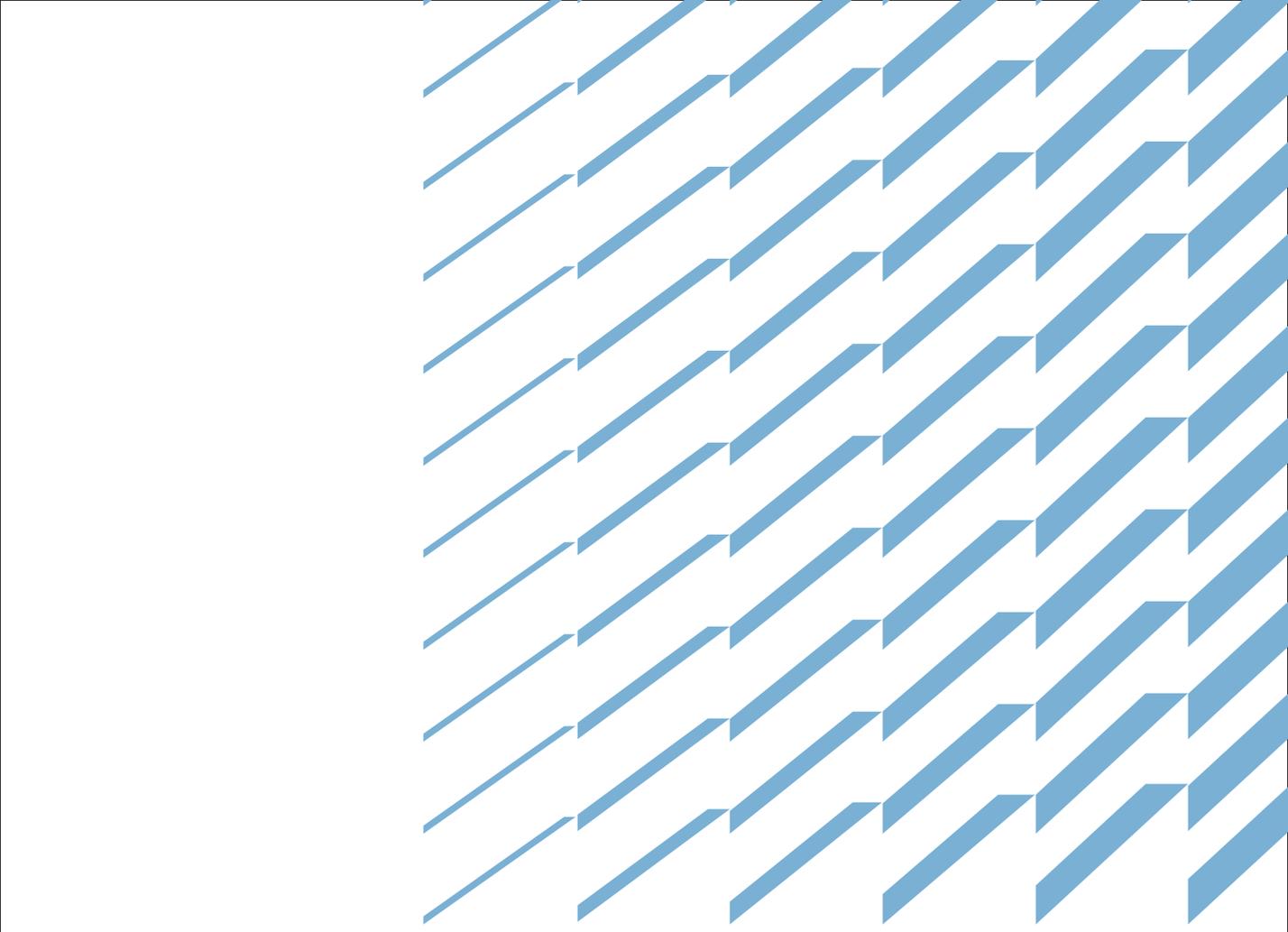
4) 농산어촌 과소화에 대응하는 전라북도 어촌 활성화 추진동력 육성

- 어촌뉴딜 300사업,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성과로 조성된 어촌 거점 인프라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 주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정과제 “살기좋은 농산어촌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농산어촌 정주여건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개선사업이 추진됨.
 - 어촌 과소화, 수산업 인력 고령화 등의 문제는 전라북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으므로, 근본적인 대응전략 모색이 필요함.
- 어촌 거주인구, 수산업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귀어·귀촌 희망자를 적극 유치하고, 귀어·귀촌자가 지역 사회에 빠르게 융화되도록 지원함.
 - 귀어·귀촌자의 준비단계와 정착초기 단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지만, 이후 지역 사회에 융화되는 것은 개인별, 상황별 차이가 있음.
 - 귀어·귀촌자를 지원하는 멘토, 지역주민도 각자 생업에 종사해야 하므로, 제한적 예산지원, 자발적 선의를 기대하는 방식보다 근본적인 지원체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 어촌지역에 유입된 청년, 도시생활인, 은퇴자 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어촌 활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수산업에 종사하고 싶지는 않지만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며, 청년, 도시생활인, 은퇴자 등 다양한 여건과 환경에 따라 귀촌의 목적이 다름.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한 수산업·어촌발전을 위한 인력이 아니므로 현행 법·제도에서는 이러한 귀촌 희망자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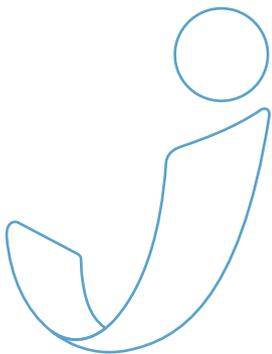
[그림 2-4]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활성화 과제



제 3 장

사례연구

1. 수산업·어촌 활성화 조직운영사례
2. 유사분야 사례
3. 사례연구 시사점



제 3 장 사례연구

제1절 수산업·어촌 활성화 조직운영사례

1. 람사르고창갯벌센터

1) 사례개요

- 람사르고창갯벌센터는 고창갯벌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주민과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갯벌생태교육, 지역주민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됨.
- 현재 운영주체는 고창군 해양수산과이며, 고창갯벌생태환경 보전과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음.

2) 운영특성

- **(국가예산지원과 고창군 직영운영)** 람사르고창갯벌센터는 해양수산부의 예산으로 건립되었고, 고창군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음.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건립에 국가예산 지원이 있었으며, 센터운영은 고창군 해양수산과 예산이 투입됨.
 - 초기 갯벌센터는 전시실, 갯벌도서관, 관리사무실, 회의실·교육실, 전망대, 직원휴게실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이용객 증가에 따라 회의실, 교육실 등을 증설함.
- **(람사르고창갯벌센터의 목적지향성)** 람사르고창갯벌센터는 설립목적에 맞추어 고창갯벌 보전·관리, 생태환경 모니터링, 지역주민 협력사업 등을 추진함.
 - 람사르고창갯벌센터는 고창갯벌 보전·관리, 고창갯벌 연구와 모니터링, 지역주민과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갯벌 생태 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 고창갯벌을 테마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주민 협력 사업, 고창갯벌 보전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추진함.

○ **(세계프리미엄갯벌생태지구 인접시설 연계활용)** 랍사르고창갯벌센터는 세계프리미엄갯벌생태지구에 위치하고 두어마을 복합센터, 갯벌식물원, 캠핑장 등 다양한 체험시설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이 가능함.

- 랍사르고창갯벌센터 방문시 갯벌센터의 교육·체험프로그램, 갯벌탐방로(생태안내인 동행), 어린이 놀이터, 물놀이장, 농구·족구장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갯벌식물원은 생태안내인과 갯벌전기투어버스에 탑승하여 다양한 갯벌염생식물, 갯벌생물 등을 관찰할 수 있음.

3) 벤치마킹 시사점

○ **(공공운영에 따른 안정성 강화)** 공공운영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운영 초기단계의 방문객, 체험인원 등 정량적인 성과지표보다 중장기 비전에 맞추어 다양한 갯벌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함.

- 랍사르고창갯벌센터장은 고창군 해양수산물과 소속 공무원이며, 센터 운영에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수반되고 있음.
- **(갯벌생태안내인)**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안내, 갯벌환경보전 등을 담당하는 활동가인 '갯벌생태안내인'은 소정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됨.

○ 랍사르고창갯벌센터는 공공영역에서 기획·운영하여 안정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는 장점이 있음.

- 정책사업 성과평가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결정되기는 하지만 공공운영의 계획성, 업무추진의 공정성과 예산지원에 따른 안정성이 높음.
-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갯벌생태안내인도 초기에는 활동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자체 역량강화, 센터 운영 활성화로 업무증대에 따라 현재 인건비를 지급받게 됨.

○ **(지역전문가·활동가 양성)** 고창갯벌 인근마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은 지역자원과 역사 등에 대한 해박한 경험을 보유하여 특성화 전략 구상에 적합함.

-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본역량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상향식 사업 발굴에 강점이 있음.
- 지역자연환경, 주중·야간시간대의 분위기 등 단기 방문한 전문가가 인식하기 힘든 변수에 대한 이해가 높음.
- 실제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수요자 반응을 반영한 높은 만족도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센터운영 활성화 예측시나리오)** 람사르고창갯벌센터를 건립할 때 예상했던 목표달성, 활성화, 침체 등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는 예측시나리오를 수립함.

- 국가예산으로 인프라를 조성할 때에는 크게 조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람사르고창갯벌센터는 고창군 입지와 관광, 방문객 규모를 고려하여 최적의 규모를 설정함.
- 배정된 국가예산으로 가능한 범위를 고려하고 확장을 대비한 공간 설계로 이용객 증가에 따른 회의실, 교육실 등 증설이 가능하게 함.
- 국가예산 확보과정에서 제안한 기대효과에 그치지 않고 미래 운영 활성화 시나리오와 침체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전략을 준비함.
- 기대보다 반응이 좋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교육실, 회의실 등을 대규모로 조성하지 않았고, 활성화에 따른 확장가능성을 고려하는 전략 활용

○ **(명확한 목적과 확산전략)** 초기단계에는 명확한 목적을 설정하여 사업범위를 한정하고, 사업추진 활성화에 따라 유사한 영역으로 확장하는 전략 수립

- 초기단계에 람사르고창갯벌센터의 명확한 설립목적에 따라 고창갯벌의 생태안내, 체험 등에 초점을 맞추었음.
- 전시실, 교육실, 관리사무실 등 기본적인 시설이 조성된 상태에서 임시 개관하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갯벌생태교육, 체험 등을 진행함.
-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체험 공간을 증대하여 늘어난 방문객 수요에 대응함.

2. 전라남도 섬 발전지원센터

1) 사례개요

- 전라남도 브랜드 시책 “가고 싶은 섬 가꾸기”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으로 2018년 11월 ‘전라남도 섬 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함.
- 섬 주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담당하며, 섬 가꾸기 현장지원, 마을공동체 사업 컨설팅, 주민 역량강화 등을 추진함.

2) 운영특성

- **(공공지원+민간참여)**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에서 전문위원을 선발하여 공공성을 높이고, 창의적인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됨.
 - 전라남도 지자체 예산 지원으로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고, 전문위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전라남도 섬·어촌주민과 창의적인 민간 전문가, 활동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섬 발전지원센터는 전문위원과 민간직원으로 구성됨.
- **(신규 대상지의 체계적 발굴·개발)** 전라남도의 브랜드 시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프로젝트는 우선순위, 개발가능성, 주민참여의사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를 발굴·개발하고 있음.
 - 2021년 현재 “가고 싶은 섬 가꾸기” 프로젝트는 총 20개의 섬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about 전남의 섬”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섬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어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고, 아름다운 섬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인프라+소프트웨어)** 대표적인 조건불리지역인 섬은 정주여건과 접근성을 제고하는 인프라 개선과 주민역량 강화, 삶의 질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춤.

- 어촌 정주여건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0사업”과 병행할 수 있어서 전라남도 전략적 판단에 따라 활용성 제고
- 섬 인프라 개선방향에 대한 주민 간 갈등 해결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을 섬 관광 해설사로 양성, 가고 싶은 섬 사업 추진주체, 섬 코디네이터로 양성할 수 있도록 주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음.

3) 벤치마킹 시사점

- **(민·관복합형 지원센터 운영)** 전라남도 섬 발전지원센터는 민관복합형태로 공공의 예산과 인력 지원에 민간 전문가 참여방식으로 운영됨.
 - 섬 발전지원센터의 전문위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섬 활성화에 대한 집중적 업무수행으로 전문성을 갖춘.
 - 다양한 창의성과 도전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섬 발전지원센터의 구성원으로 모집하여 공공조직의 한계를 보완함.
- **(섬 활력제고를 위한 연계전략)** 전라남도의 자산인 아름다운 해양자원과 섬을 아름답게 가꾸는 목적달성에 관련된 다양한 주체 참여
 - 기본적으로 전라남도 섬 발전지원센터는 전라남도 광역 지자체의 사업이지만 어촌뉴딜 30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유사한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기대
 - 일례로 지역에 귀촌한 청년이 전남 섬 발전지원센터에 채용된 사례는 귀촌인을 섬·어촌 활력제고에 참여하도록 한 선순환 모델임.
- **(지역주민역량강화로 혁신주체 양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다양한 어촌 활력제고 사업 추진주체로 양성함.
 - 어촌 지역 과소화,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함.
 - 주민대학을 통해서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섬 관광 해설사, 섬 크리에이터로 양성하여 귀촌자, 방문자 등과 어촌 활력 제고 추진

3. 일본 지역수산업재생협의회¹⁾

1) 사례개요

- 수산업·어촌 활성화를 위하여 어업협동조합,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형태의 “지역 수산업재생협의회”를 조직하여 ‘바닷가 활력 재생계획’을 수립함.
- ‘바닷가 활력 재생계획’은 일본의 수산업·어촌 현안문제를 지역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어촌 주민의 수입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한 현안해결과 공동사업, 협력 사업 등으로 구성함(김대영 외, 2016).

2) 운영특성

- **(수산업·어촌 지역현안 인식)** 일본정부는 수산업을 중심으로 어촌 활력 제고를 도모 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어촌공동체 중심의 현안 해결 추진
 - 일본 어촌도 어획량 감소, 어업비용 증가 등 어업소득 정체, 어촌 과소화, 고령화 등 활력 저하 문제를 경험함.
 - 수산업 관련 현안은 지역마다 다르며, 현안 해결을 위한 해법 또한 지역 상황에 맞추어 검토할 필요성 인식
 - 지역 어업협동조합, 어업인 단체 등 어촌공동체가 주도하여 수산업 관련 지역현안 인식과 적합한 해결 방안을 모색함.
- **(민·관 합동 지역수산업재생협의회 구성)** 일본의 지역수산업재생협의회는 지자체와 지역 어업협동조합, 어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바닷가활력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된 사업추진을 담당함.
 - 정부에서 지역여건에 적합한 ‘바닷가 활력 재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선진지 조사, 지역수산업재생협의회 활동 경비 등을 지원함.

1) 일본 지역수산업재생협의회와 바닷가활력재생계획 추진사례는 “김대영 외. (2016). 어촌환경 변화에 따른 어촌공동체 발전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참고하였음.

- 지역수산업재생협의회가 수립한 '바닷가 활력 재생계획'을 정부에서 승인하면, 해당 계획을 추진하는 역할 담당

○ **(수산업·어촌 소득증대: 상향식 제안)** 바닷가 활력 재생계획은 지역 수산업·어촌 소득 증대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역 여건, 특화 어업에 적합한 수입 향상, 비용 절감 방안과 5년 후 목표 향상 계획을 제안함.

- 지역수산업재생협의회가 수립·제안하는 '바닷가 활력 재생계획'은 어가 수입향상과 비용절감을 통한 어촌 활력 제고사업으로 한정됨.
- 단위 사업당 약 500만원 한도이므로 수산업·어촌 현장에서 인식하는 문제의 실험적인 해결시도를 추진해볼 수 있음.
- 수산업·어촌 수입향상 방안: 자원관리를 통한 생산량 증대(어획량 증대, 신규어업 개척), 수산물 가격 향상과 고부가가치화(품질 향상, 위생관리), 시장출하지원(상품개발, 출하확대, 소비확대 등)
- 수산업·어촌 비용절감 방안: 에너지 절감 활동, 에너지 절감 장비 도입, 협업화에 의한 경영 합리화 등

3) 벤치마킹 시사점

○ **(지역 수산업·어촌 현안해결 참여)** 지역 어업협동조합, 어업인 단체 등이 참여하여 현안해결형 계획 수립을 지원함.

-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부의 수산업·어촌 활성화 정책 방향이 중요하지만, 수산업·어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안 해결이 수산인에게 절실함.
- 지역 수산업·어촌 현안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형 정책사업의 추진에 따른 현장 체감도가 높지 않을 수 있음.

○ **(상향식 정책수립과 직접 집행)** 지역 수산업·어촌 현안을 인식하는 주체가 직접 해결 방안 모색과 추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산업·어촌 가치 제고

- **(정책적 효과)** 지역 수산인, 어촌 주민의 현안 해결과 소득 증대를 위한 창의적인 시책 발굴과 추진을 지원하여 수산업·어촌 정책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제고

- **(적극성 제고)** 지역 수산업·어촌 현안 인식과 해결방안 구상과 추진에 직접 참여하여 현상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수산인, 어촌 주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가능
- **(창의적 시도)** 단위 사업당 예산이 약 500만원 수준으로 전통적인 수산업·어촌 활성화 방안과 다소 차이가 있는 다양한 창의적인 시도를 장려하여 어촌 활력 제고

○ **(민·관 합동 체계, 창의성+안정성)** 지역수산업재생협의회는 지역 어촌 공동체와 지자체가 참여하고, 정부가 인정한 민·관 협력체 형태로 운영됨.

- 수산업에 참여하거나 어촌에 거주하는 어촌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현안문제를 정의하고, 관련 현황분석,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안하여 현장 만족도가 높은 대안 도출이 가능함.
- 정부, 지자체의 참여로 공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담보되어 지역 어촌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제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지속성 담보→ 다양한 시도)** 공공영역의 참여로 높아진 지속성은 다양한 제안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일회성 프로젝트는 어촌 공동체의 대표가 시범사업 몇 가지를 제안, 시도해보고 성과를 평가한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하므로 지역 공동체의 소극적 참여 문제가 있음.
- 일본 지역수산업재생협의회는 지속성이 담보되는 민·관 협력체계이므로 지역 공동체의 우선순위 평가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음.
- 이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다음 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지역 어촌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4. 유럽 지역수산공동체와 FARNET²⁾

1) 사례개요

- 유럽의 어촌정책 패러다임은 공급중심정책에서 산업기반정책 추진을 거쳐 2014년부터 사람 중심의 ‘공간기반정책’ 체계를 갖춘.
 - 공간기반정책은 지역수산공동체(FLAG, fishing local action group)와 유럽해양수산기금이 설립한 중간조직 FARNET(the European Fisheries Areas Network)을 중심으로 설계·추진되고 있음(김대영 외, 2016).
 - 어촌공간기반정책은 지역 수산인, 어촌주민이 지역수산공동체(FLAG)에 사업을 제안, 공모하고, 선정된 사업의 구체화, 추진방식 컨설팅 등을 추진함.
 - FARNET은 공동체 주도 어촌개발 성공을 위하여 지식, 경험 등 노하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럽 전역의 전문기관, 전문가 등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수산공동체를 지원함.

2) 운영특성

- **(명확한 목표설정과 다양한 관점 수용)** 수산업·어촌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명확한 목표 설정에 다양한 지역수산공동체의 의견을 결합함.
 - **(명확한 목표설정)** FARNET은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 ‘다양한 어촌산업 발굴’, ‘사회·문화·환경 인프라 조성’, ‘거버넌스 관리체계 강화’ 등 유럽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목적과 사업범위를 한정함.
 - **(구성원의 다양성)** 지역수산공동체는 지역 수산인, 어촌 주민 뿐 아니라 변호사, 컨설턴트, NGO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의 접근 체계를 구축함.
 - 명확한 목표와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로 총 21개 국가, 178개 지방정부, 312개 지역수산공동체가 11,316개의 지역어촌 개발사업을 추진함.

- **(지역수산공동체 주도의 지역개발)** 지역어촌 소득증대, 어촌사회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역수산공동체(FLAG) 주도로 제안함.

2) 유럽 지역수산공동체(FLAG)와 FARNET 사례는 “김대영 외. (2016). 어촌환경 변화에 따른 어촌공동체 발전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참고하였음.

- **(지역여건에 적합한 어촌개발 사업 발굴)**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 정체성을 높일 수 있는 어촌개발 사업을 지역수산공동체가 제안함.
 - **(사업 구체화, 성과 개선을 위한 전문집단 지원)** 지역수산공동체가 제안한 사업은 정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어촌지역 개발사업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하여 FARNET에서 전문가 파견, 컨설팅 등을 지원함.
- **(다양한 공동체 조직과 네트워크 역량)** 유럽 전 지역에 총 312개의 지역수산공동체는 각 지역정체성을 높이는 어촌개발사업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수산업·어촌의 가치를 제고함.
- 지역수산공동체와 다른 공동체 간 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어촌이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유도함.
 - FARNET은 유럽 지역수산공동체간 정보공유, 기술지원 등 공동체 협력을 유도하고 소외된 공동체와 성공한 공동체를 연결하여 유럽 전역의 수산업·어촌 활력 제고에 이바지함.
- **(공동체 역량강화와 지역어촌 지속성 제고)** 지역어촌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첨단기술, 혁신, 기업가 정신 등 습득을 통한 지역수산공동체의 역량강화와 지역어촌의 지속성 제고 효과를 기대함.
- **(지역수산공동체 구성원 역량강화)** 지역정체성을 높이는 어촌개발사업 구상과 추진 과정을 위해 전문가 집단을 파견하여 사업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등을 병행함.
 - **(지역어촌 지속성 제고)** 지역수산공동체의 적극적인 어촌개발사업 추진 결과 어촌지역이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하면 수산업·어촌 활력 제고와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며, 지역정체성에 부합한 미래 수산인력양성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함.

3) 벤치마킹 시사점

- **(지역수산공동체 역량강화)** 지역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집단의 지원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체 역량 강화 유도
- 대개 어업, 양식업 등 수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지역수산공동체 구성원이 법률, 건축, 경영, 경제 등 다양한 관점이 요구되는 어촌개발 사업을 주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지역어촌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수산공동체의 참여가 불가피하며, 각자 생업에 종사하는 특성 상 분야별 전문성 확보
- 단기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도움을 받도록 지원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유도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전략)** 지역수산공동체가 지역 내 다양한 집단과 협력하여 지역어촌이 지역경제 발전의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유도함.

- 지역수산자원은 수산업과 연관성이 높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소득창출방안을 모색해야 함.
- 지역 수산업·어촌 특화 자원과 타 공동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가 수산업·어촌의 가치를 공감하도록 유도함.
 - **(스페인 안론스, 바지락 바구니 사례)** 안론스 갯벌 바지락 생산자 단체와 지역 전통바구니 사업자 간 협력을 통한 바지락 바구니 판매로 바지락 생산자 증가, 상점 증가, 레스토랑 증가 등 전반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유도
 - **(에스토니아 페이프, 호수낚시축제 사례)** 자연호수를 보유한 페이프에서 전통적인 지역축제에 수산물, 수상레저 등을 결합한 낚시축제를 운영, 낚시체험, 릴레이 낚시대회, 수산물 요리경연대회, 수산식품박람회를 통해 지역 씨푸드 가공품 판매 등을 유도함.

○ **(지역수산공동체 네트워크→ 수산업·어촌 가치제고)** 지역수산공동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산업·어촌 가치제고 활동을 유럽권역이 동참하게 함.

- 지역수산공동체 네트워크는 공동체 간 연결을 통한 수산업·어촌 활성화를 유도하여 기술적 진보, 공동체 간 연대 강화에 효과가 있음.
- 유럽지역 지역수산공동체 네트워크는 지역어촌개발사업 추진으로 유럽인이 수산업·어촌의 가치를 공감하도록 하는 초국가적 정책효과를 유도함.

제2절 유사분야 사례

1. 전라북도수출통합지원센터

1) 사례개요

- 지역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13개 기관의 약 300개의 수출지원 정책사업이 수요자 맞춤·연계효과 제고를 위하여 전라북도수출통합지원센터가 출범함.
- 전라북도수출통합지원센터는 지역 수출지원 정책사업의 안내·신청·추진·사후관리 등을 원스톱 지원하여 수요자 만족도 제고, 관련 기관 협력 강화에 기여하며, 중장기적으로 “전북형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할 계획임.

2) 운영특성

- **(출연기관 운영: 안정성과 전문성 제고)**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전라북도수출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담인력 4명을 채용·배치하여 전문성 강화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전라북도 출연기관으로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지원으로 중장기적 관점의 수출 지원과 단기적 현안문제 해결을 병행할 수 있음.
 - 기존 통상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수출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4명을 채용·배치하여 전문성 극대화 도모
- **(전라북도 수출지원기관 네트워크)** 전라북도 수출지원업무에 관련된 지자체 담당자, 관계 기관 실무자,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한 업무공유, 협력체계 구축
 - 전라북도수출통합지원센터에 참여하는 13개 기관의 유기적·지속적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 기관장 간담회 개최
 - 지자체, 실무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수출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하여 순환근무에 따른 업무 단절의 최소화와 협력사업 발굴·추진 등 새로운 기회를 마련함.
 - 수출통합지원협의체 운영과 별개로 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응전략 구상을 위하여 분과별 수요자·전문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분과별 정기회의를 개최함.

○ **(기존업무+통합·연계)** 전라북도 수출지원 기존업무를 유지하며,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가 통합·연계 주도자 역할을 담당함.

- 전라북도 수출 활성화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13개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 고유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해당 업무 중 지역 수출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업무와 기관 간 협업이 가능한 업무를 중심으로 연계효과를 극대화하고, 신규 사업 모델을 발굴함.

3) 벤치마킹 시사점

○ **(전라북도 출연기관 운영)**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는 도내 통상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출연기관 운영으로 안정성·지속성과 전문성 제고 효과를 달성함.

- 전라북도 출연기관이며, 관련 사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역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임.
-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지역 통상마케팅 전문기관으로 수출 지원업무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통합지원센터 업무추진 가능성 제고

○ **(참여기관 고유성 유지)**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에 참여하는 13개 기관은 기관 설립목적에 적합한 고유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함.

- 지역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설립 목표와 사업 추진전략에 따른 고유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함.
-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고유 업무의 성과를 높이고, 협력을 통한 중복지원 제거, 지원사업 고도화 전략 등 모색 가능

○ **(관계자 네트워크 역량)** 지역 수출에 관련된 기업, 실무자, 전문가, 공무원 등 관계자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하여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전라북도 수출 활성화 지원을 담당하는 지역본부 관계자와 공무원 순환근무에 따른 정보단절과 협업 관계 극복을 위한 정기적인 협의회 운영 대응
- 수출 관련 현안 해결과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수렴하며, 기업과 관련 기관의 수출 담당자와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전복형 수출지원사업 구상 가능

2.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1) 사례개요

-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공약 결과 2019년 4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출범함.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68호)」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음.
 -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농어업·농어촌 발전”과 “농어업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제1조).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사무국,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되며,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활동가 중심으로 구성됨.

2) 운영특성

- **(법·제도 기반 구축)**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정 위원회이며, 대통령 공약이행을 위하여 공공 주도의 업무 추진
 -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농어촌 지역발전, 먹거리 등에 대한 협의, 심의, 의결을 통한 자문이 주된 활동이 관련법(제2조)에 의해 명시됨.
 - 관련 법 규정(제3조)에 의거하여 위원장, 관계부처 당연직위원, 민간위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관련 법 규정에 사무국 운영근거(제9조), 공무원 등 파견요청(제10조), 관계 기관 협조요청(제11조) 등에 대한 권한과 범위를 설정하여 업무 추진 동력을 높임.
- **(민·관 참여형 네트워크 구축)**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의 참여로 합리적 의사결정과 현장여건 해결 가능성 제고
 - 농산어촌 현장 활동가, 생산자, 전문가 등 분야별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농어업·농어촌 전반에 걸친 현안해결과 미래정책방향을 수립함.
 - 농어업·농어촌 분야와 관련이 높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 장·처장의 참여로 현장 의견의 정책 반영 가능성 제고

○ **(농어촌 현안과 특정 현안 균형대응)** 농어업·농어촌 현장의 현안문제와 탄소중립, 수산혁신, 여성정책 등 특정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 농어업·농어촌 현안은 농어업, 농어촌, 농수산물 등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업·농어촌 소관업무 중 탄소중립, 수산혁신, 여성정책 등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한 특정 현안에 대해서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응함.

3) 벤치마킹 시사점

○ **(법·제도적 완비→ 정책사업 추진동력 확보)** 대선공약사업이자, 관련 법 제정을 통하여 선결과제를 해결한 후 추진하여 관련 정책사업 추진력 강화

- 법·제도가 갖추어지면 관계 부처, 지자체, 기관 등 원활한 협조체계가 구축되며, 정책사업 추진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 추진 동력이 확보됨.
- 분야별 전문가가 농어업·농어촌 현안대응과 미래 트렌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창의적 제안이 관련 법·제도에 의거하여 실행 가능성이 높음.

○ **(농어업·농어촌 전문가 민·관 협력제)** 관련법 규정에 의거 농어업·농어촌 분야별 생산자,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함.

- 농산어촌 거주자, 생산자, 활동가, 관련 기관, 전문가, 정부부처 관계자가 참여하여 자유로운 토론과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책 구상
- 행정과 현장의 괴리를 줄이고, 양 당사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어업·농어촌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현장의견 수렴방식)** 농특위는 지역별 타운홀미팅, 심포지엄, 현장간담회, 현장토론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여 더 많은 지역 농산어촌 주민 의견을 수렴함.

- 농어업·농어촌 현장 활동가, 생산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심사숙고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다수 지역 농산어촌 거주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채택함.
- 지역별 타운홀미팅, 심포지엄,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현장토론, 원탁회의 등 안건에 대한 다양한 형식을 도입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 구상·추진

3.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1) 사례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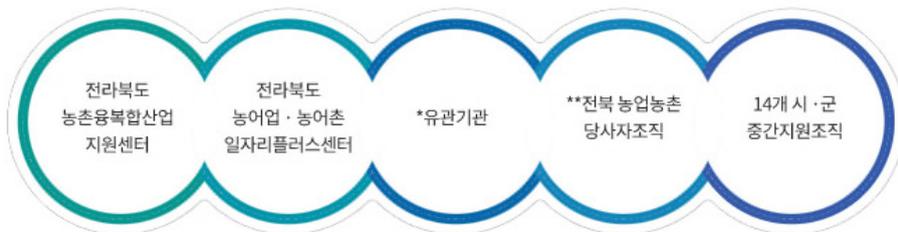
-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확대 및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 강화에 기여하고자 설립함.
- 실질적으로 농업농촌종합지원센터가 확장된 개념으로 귀농·귀촌 상담, 농촌관광 활성화, 도시-농촌 교류확대 등이 주된 사업임.
- 전라북도 14개 시·군별 농업농촌지원조직으로 마을만들기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농어촌일자리센터가 운영 중이며, 통합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2) 운영특성

- **(전북형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생생마을”은 마을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찾아오는 활력 넘치는 마을을 의미하는 ‘전북형 농촌마을 만들기 브랜드 사업’임.
 -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 고유 체험, 관광, 전통, 문화, 경제자원 등 고유한 이야기거리를 활용하여 찾아오는 활력 넘치는 마을을 생생마을로 지정됨.
 - 바다어촌, 내륙어촌 등이 있는 시·군의 마을도 생생마을에 포함되어 있어 어촌 활력제고 사업목적 달성을 도모할 수 있음.
- **(전라북도 농어촌마을 정보포털)**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14개 시·군 총 1,021개(2021년)의 생생마을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음.
 - 생생마을 정보와 14개 시·군별 ‘마을만들기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농어촌일자리센터’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정보를 제공함.
 -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시·군별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운영과 농어촌 마을 현황(생생마을) 등 지역 농어촌 정보제공 포털 역할을 수행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지역의 활력을 위한 통합 지원기관입니다.



자료: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접속일: 2021. 12. 9.)

주1 *유관기관: 전라북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2 **전북 농업농촌당사자조직: 전북마을통합협동조합, (사)농어촌체험휴양마을전북협의회, 전북귀농귀촌협의회, 시군센터장협의회, 농촌관광거점마을협의회, 전북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협의회

[그림 3-1]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역할과 협력체계

- **(전라북도 농어촌 네트워크 거점)**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지역 농어촌 관계자 네트워크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함.
 - 14개 시·군 농어촌 활성화 중간지원조직, 생산자 조직, 농어업·농어촌 일자리 플러스센터, 농촌융복합 산업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연결 거점
 - 농촌현장 정책의제 발굴, 생생마을, 농촌관광, 농촌유학(귀농·귀촌) 등의 수요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함.

3) 벤치마킹 시사점

-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확장 가능성 검토)**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명칭에 부합하게 실질적으로 수산업·어촌 활성화 가능성 검토 필요
 - 대부분 어촌마을이 반농반어형태를 보이므로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의 네트워크를 수산업·어촌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농생명 중심지로서 전라북도의 브랜드사업 통합역량 강화 차원에서도 14개 시·군의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의 역할 확장 가능성 검토
- **(다양한 주체의 네트워크 구축)**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등 농어촌 활성화를 추진하는 다양한 주체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음.
 - 산업 관점에서 농어업과 공간 관점의 농어촌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므로 각기 이해관계에 따른 특성이 존중되어야 함.
 -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체의 업무는 서로 상충될 우려가 있지만,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고유사업+연계·협력)** 다양한 주체는 각기 고유업무를 추진하고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원스톱 상담창구, 연계·협력 주도에 초점을 맞춤.
 -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농어업·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 농업농촌 당사자 조직, 중간지원조직, 유관기관 등 다양한 주체별 설립 목적에 맞는 고유업무 추진
 - 농어촌 활성화 관련 연계·협력 가능 주체 간 협업을 유도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원스톱 안내 창구의 역할을 담당함.

4. 니시아와쿠라 로컬벤처

1) 사례개요

- 일본 니시아와쿠라는 2004년 일본 정부의 과소화, 고령화 대응을 위한 시정촌 합병에 반대하며 자립하기로 선택했고, 로컬벤처가 지역자립의 수단이 되었음.
- 로컬벤처는 “스스로의 관점으로 숨겨진 지역 자원을 발견하여 창업하는 기업형태”를 의미하며, 지역자원, 사람, 공간 등을 활용함(마키 다이스케, 2021).
- 니시아와쿠라 로컬벤처는 지역창업 희망자가 주도하지만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민간 주도의 행정 협력체계가 특징임.

2) 운영특성

- **(한정된 사업기간·예산, 민·관 협력 대응)** 니시아와쿠라 지역자립을 위한 3년 정책사업의 기간, 예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관 협력 대응 추진
 - 숲을 테마로 자립사업을 구상하던 니시아와쿠라는 일본 정부의 3년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지만,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은 이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하여 자체 ‘공유 숲 펀드’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민·관 업무 분장 추진
 - 니시아와쿠라 면사무소는 숲 조성·관리를 담당하고 민간에서는 ‘숲 학교’를 설립하여 목재의 가공·유통, 사업 발굴을 담당함.
 - 면사무소 주도로 산림재생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서, 고용이 창출되고, 인구 유치 등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고, 원목 판매, 목재 상품 개발, 마루 깔기 DIY 등 다양한 상품과 판로를 개척하여 자립 경영의 토대를 마련함.
- **(핵심아이템 집중과 연계확장)** 니시아와쿠라 로컬벤처는 임업을 중심으로 창업하였지만, 마을 공간을 중심으로 가능한 수산업, 농업 등으로 확장됨.
 - 산이 있는 곳은 논과 강이 있어 전통적인 농업·임업·수산업의 수직적인 구조를 극복하고 농산어촌 공간과 순환 생태계 관점에서 수평적 수익 다변화 추진

- 임업을 기반으로 로컬벤처의 초기 수익구조를 형성한 후 마을 폐교를 개조하여 숲 장어 양식 추진, 겨울철 수익 평준화를 위한 산짐승 가공 등을 추진함.
- 숲 장어 양식은 임업에서 발생한 목재 부산물을 연료로 사용하여 양식장 운영 전력으로 사용하고, 장어 수요가 여름에 집중되어 가공시설을 겨울에도 활용하도록 산짐승 가공 비즈니스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로컬벤처 수익구조를 다각화함.

○ **(맞춤형 지역인재양성과 순환)** 임업으로 시작한 로컬벤처의 사업 다각화에 따라 분야별 전문인재양성을 위한 전략체계 구축

- 장어양식에 필요한 전문지식, 기술과 장어가공 및 판매에 필요한 역량은 전문기관에 희망자를 파견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함.
- 해당 교육·훈련 과정을 완료한 희망자는 로컬벤처에 복귀하여 관련 분야의 책임자로 업무를 담당하여 맞춤형 인력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함.
- 지역 농산어촌 자원을 활용한 로컬벤처의 사업 다각화에 단기적으로 필요한 전문인력은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고,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전문 교육·훈련 기관의 양성과정 희망자에게 기회를 부여함.

○ **(충분한 준비과정과 지원)** 로컬벤처 희망자는 로컬라이프랩(1년), 지역부흥협력대(3년), 로컬벤처스쿨(5개월) 등을 거쳐 로컬벤처 창업을 추진함.

-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로컬벤처 창업은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실패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과정을 지역공동체가 지원함.
- 로컬벤처 아이디어가 구체화 되어 수익이 창출되는 시간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고, 지역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도시민의 창업아이템이 지역 여건에 맞도록 지역 공동체가 지원하는 형태임.

○ **(지역 맞춤형 탄력 고용제도)** 산촌마을 특성을 고려하여 정규·계약직, 시간제 등 탄력적인 고용제도로 지역 주민이 로컬벤처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함.

- 지역 자립을 위해 설립된 로컬벤처에 취직할 인력은 도시 귀촌인 보다는 지역 주민의 가능성이 높고,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여건상 정규·계약직 형태보다는 시간제 고용이 유리한 상황을 반영함.
- 지역주민이 함께 일하고, 응원하며, 부족한 역량은 전문가를 통해 극복하는 방식으로 마을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음.

3) 벤치마킹 시사점

- **(지역자원 활용: 임업+농업+수산업)** 로컬벤처 모델의 성공여부는 지역화 여부에 달려 있으며 농산어촌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 다각화 가능
 - 타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로컬벤처 아이템은 지속 가능성이 낮으며, 초기 지원금 수령 후 이탈 가능성이 높음.
 - 지역공간, 사람, 인프라 등을 활용하는 로컬벤처 지역화가 중요하며, 초기사업아이템의 농림어업 관련 분야 확산을 통한 수익 평준화·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맞춤식 정책지원)** 로컬벤처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가형 인재 육성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선별함.
 - 로컬벤처 창업자는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하므로 자격 요건에 부합한 여러 정책사업에 지원하여 정책사업 목표에 맞추어 창업아이템이 변경되거나 창업아이템 본연의 가치에 몰입하지 못하는 한계에 노출됨.
 - 기존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보다 로컬벤처 창업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선정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벤처)** 지역주민 고용을 통한 로컬벤처 운영 활성화와 지역자립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 농산어촌 창업에 예상되는 고용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시 귀촌인과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정책 도입
 - 로컬벤처에서 일하면서 다른 수익활동을 하는 것도 허용하며, 틀에 박힌 고용제도보다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형태로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응원을 유도함.

- **(로컬벤처 자립을 위한 공급망 설계)** 로컬벤처 중심의 공급망을 형성하여 외부요인에 의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 글로벌 이슈, 대기업 의사결정 등 외부요인에 대한 파급효과를 줄이고, 로컬벤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벤처 주도의 공급망 설계

-
- 지역 농산어촌 자원을 활용한 로컬벤처의 수익구조 다각화 및 수익 평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자립, 농산어촌 과소화 예방 등 목표 달성

○ **(충분한 준비 지원)** 로컬벤처 희망자에게 정주의무, 지역협력의무 등을 부여하지 않고 창업아이템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역에서 로컬벤처스쿨을 개최하면 전제조건으로 일정기간 이상 거주, 창업 등의 조건을 내걸기 마련이지만, 니시아와쿠라 로컬벤처스쿨은 '정착하지 않아도 좋다'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로컬벤처 희망자를 모집함.
- 로컬벤처 창업을 하면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한다는 일반적인 의무를 배제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주위의 가능성을 함께 발굴 하도록 지원함.

5.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례

1) 사례개요

-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중 창의적인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원하여 지역자원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순창군 방랑싸롱, 남원시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 군산시 로컬라이즈 군산, 목포시 관찰아마을, 청주시 촌스런 등 로컬크리에이터가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비즈니스모델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례 증가

-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적 아이디어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있음.
 - 로컬크리에이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 뿐 아니라 도시재생, 농산어촌개발사업, 사회적경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사업과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창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

2) 운영특성

- **(맞춤형 창업과 지역사회 연계)** 로컬크리에이터가 희망하는 형태의 창업과 지역사회 서비스 수요 대응을 통한 대응전략임.
 - 식당, 민박, 카페, 서점, 수제맥주, 여행사 등 로컬크리에이터가 희망하는 형태의 창업을 시작하여 지역 수요에 대응함.
 - 농산어촌, 지방 소도시는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있지만 공급이 없는 한계를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으로 대응하고 있음.
 - 창업유형과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이용, 관광객의 방문 등을 유도하여 지역사회에 적응함.

- **(지역자원의 창의적 활용)** 지역자원의 활용한 창업으로 로컬크리에이터 개인의 수익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함.

- 로컬크리에이터는 농산어촌, 지방소도시의 과소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싶은 공간을 개척하는데 목적이 있음.
- 빈집, 폐교 등 유휴자원과 역사, 문화 등 지역 자원과 로컬크리에이터 역량을 결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정책사업 연계활용을 통한 조기 안정화)** 농산어촌, 지방소도시 과소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창업 아이템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지역 여건에 적합한 창의적인 아이템일지라도 기반조성, 운영 및 활성화 단계까지 진입하는데 물리적 시간과 투자 예산이 부담이 될 수 있음.
-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 뿐 아니라 도시재생, 농산어촌개발 등 다양한 지역 공간, 자원 활용 정책 사업 지원을 연계하여 구상을 실행으로 옮김.
- 다양한 정책사업은 창업준비단계, 초기창업단계, 운영활성화 단계 등 로컬벤처 사이클에 맞추어 지원받을 수 있음.

3) 벤치마킹 시사점

○ **(로컬크리에이터 공간과 예산 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아이টে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과 예산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달성

- 모든 로컬크리에이터가 로컬벤처에 성공할 수는 없지만 지역 유휴자원과 특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는 지역 활력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므로 다양한 시도의 전제 조건인 공간과 예산 지원 필요

○ **(지역자원×정책사업×아이템)** 지역 현안해결이 아닌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도모함.

- 농산어촌, 지방소도시 과소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컬크리에이터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자원의 사업화가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함.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가로 인식해야 지역자원, 정책사업, 아이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로컬벤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역자원과 정책지원, 창의적인 아이템이 상호작용하며, 로컬벤처 성공과정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문화·관광 사업 활성화,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지역 사회에 순환됨.

○ **(로컬벤처와 지역사회 연계 특성화 거리조성)**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템이 기존 지역사회 핵심시설이나 로컬벤처 간 연계되면 지역 특성화 가능

- 각기 다른 다양한 아이템을 지역사회에서 사업화하려는 로컬크리에이터 간 협력과 연대는 로컬벤처의 특성화에 기여함.
- 식당, 수제맥주, 카페, 서점, 베이커리 등 메인 비즈니스 모델을 토대로 지역 커뮤니티를 운영하려는 로컬크리에이터 간 협력과 연대를 통해 특화 거리 조성 가능
- 기존 사회의 핵심시설과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템을 결합하여, 지역 특성화 거리 문화 조성이 가능하며, 최근 로컬관광추세에 부응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

○ **(로컬벤처의 지역화)** 로컬크리에이터의 창의적인 감각으로 시작된 로컬벤처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단계로 진화해야 함.

- 참신한 콘텐츠와 눈에 띄는 디자인이 주목을 끌 수는 있지만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교류가 필수적임.
- 로컬벤처는 궁극적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의 수요에 대응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제3절 사례연구 시사점

1. 안정성·지속성과 창의적 시도

1) 공공영역 참여에 따른 안정성

- (공공참여에 따른 지속성)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본 수산업·어촌 및 타 분야의 활력 제고를 위한 구심점은 공공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 참여가 뒷받침됨.
 - 공공영역의 참여는 일정 수준의 예산 지원을 수반하며, 지속성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추진 사업에 대한 신뢰가 높음.
 - 공공예산이 투입될 경우 창의적인 아이템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며, 준비단계, 초기창업단계, 기반조성 단계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성공 가능성을 높임.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전라남도 섬 발전지원센터, 전라북도수출통합지원센터,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사례에서 공공영역의 참여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지속 가능성 제고 효과를 거두고 있음.

- (법·제도적 완비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동력 확보) 지역 산업 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완비되면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성공가능성을 높임.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대표적인 사례로 관련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농어업·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의결이 가능함.
 -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도 포함된 영역으로 관련법과 제도가 완비되면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현안 대응과 지속 발전 가능성 모색이 용이함.

2) 민간 참여에 따른 창의적 시도와 전문성 제고

- (민간의 전문성과 사업화 역량)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영역의 지원 토대에 민간의 전문성과 사업화 역량이 결합되어 시너지 발생 기대
 - 로컬벤처, 로컬크리에이터 등 농산어촌과 지방소도시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려는 시도는 지역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필요함.

○ **(지속가능성 담보는 다양한 창의적 시도 유발)** 공공영역 지원 기반에 민간의 창의적 시도가 지속되어 궁극적인 지역 활력 목표 달성 가능

- 여촌자원과 공간을 활용한 벤처창업은 실패 위험이 크므로, 한시적·일회성 사업에 전문성과 특화역량을 갖춘 로컬크리에이터가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
-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실패하더라도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정책지원에 따른 투자 위험 감소는 다양한 영역에서 창의적인 시도를 유인할 수 있음.

3) 민·관 협력체

○ **(민·관 협력체제로 창의성과 지속성 결합)** 전문성과 창의성을 보유한 민간과 공공영역의 결합은 상호보완 효과를 유도함.

- 이 연구에서 살펴본 수산업·어촌 활성화 사례, 유사 분야 사례에서는 대부분 운영 주체가 민·관 참여체계임.
-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정책성과지표와 수익성 등 상충하는 지표의 절충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함께 할 수 있음.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전라남도 섬 발전지원센터, 로컬벤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례 등 목적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차이는 있지만, 민간의 창의적 도전과 공공의 지원이 공존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2.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자립화

- **(지역사회 자원 활용)** 공간적 개념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화 모델과 확산 과정에 지역사회 농림어업, 문화, 예술, 역사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함.
 - 니시아와쿠라 로컬벤처 사례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로컬벤처 출범 후 지역 농촌과 수산자원을 활용한 숲 장어 양식 등 사업 영역 확장과정에서 지역 자원 활용
 - 지역사회 활력을 위한 다양한 시도는 대도시를 흉내내기 보다는 지역 고유의 자원, 환경 등을 활용하여 지역민과 소통하고, 관광객에게 새로운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차별화 필요

- **(지역인재양성과 전문가 활용)** 로컬벤처 운영을 위한 전문가 확보, 일자리 창출, 지역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단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단기현안 전문가 활용)** 단기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현안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관련 노하우를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음.
 - **(중장기 지역인재양성)** 중장기적으로 로컬벤처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교육·훈련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융화될 수 있음.
 - 전라남도 섬 발전지원센터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프로젝트 추진 시 지역주민대학을 통해 지역주민이 섬 관광, 활력 제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 니시아와쿠라 숲 장어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가공 전문가는 희망자를 전문기관에 파견하여 기초 역량을 다진 후 로컬벤처에 복귀하여 관련 업무 수행
 - **(탄력적 고용제도)** 지역주민은 대부분 농림어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시간제, 겸직허용 등 탄력적인 고용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음.

- **(지역 특성화 산업·문화 조성)** 외부에서 유입되는 로컬벤처, 문화가 지역사회와 융화되어 특성화 산업 체계,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음.
 -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 문화, 역사, 농림수산자원 등을 활용하여 사업화 아이টে를 구상하며, 이는 기존 지역산업, 지역문화와 융합되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음.
 - 강릉카페거리, 여수밤바다포차 등 문화관광 특화거리를 조성할 수 있으며, 기존 산업과 로컬벤처의 융·복합을 통한 지역산업 특성화 도모

3. 지역자원을 활용한 로컬벤처 지원

- **(로컬크리에이터 작업공간과 예산 지원)** 로컬크리에이터가 필요로 하는 작업공간, 예산 등 지원제도를 통해서 로컬벤처 사업화 유인
 - 로컬벤처 창업을 위해 다양한 로컬크리에이터에게 개방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템이 지역 자원과 결합되도록 지원함.
 - 농산어촌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빈집, 유휴공간이 많으므로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템을 사업화할 기회가 많음.

- **(다양한 정책사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다양한 정부부처, 지자체 지원사업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로컬벤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함.
 - 지역 과소화 예방, 활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정부부처, 지자체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정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준비단계, 창업단계, 운영단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개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로컬벤처 공급망 설계)** 로컬벤처의 특성화와 자립을 위해 지역자원 활용, 지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로 공급망 설계 필요
 - 니시아와쿠라 로컬벤처 사례처럼 로컬벤처의 지속 가능성과 특성화를 위해서는 외부 효과에 의한 변수를 줄일 필요가 있음.
 - 로컬벤처 자립을 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로컬벤처에서 많은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도록 공급망을 재편하여, 지역산업 특성화 도모

- **(지역자원을 활용한 준비 지원)** 지역 이해, 지역 주민과 융화, 사업화 성공모델 등 로컬벤처 사업화를 위한 지역공동체의 지원이 성공적 안착을 유도함.
 - 지역자원을 활용한 로컬벤처 사업화, 로컬크리에이터의 지역창업 등은 충분한 준비 시간과 비용이 필요함.
 - 니시아와쿠라 로컬벤처 사례에서 창업 희망자는 지역 공동체의 도움으로 로컬라이프랩 1년, 지역부흥협력대 3년, 창업멘토링 5개월 등을 거쳐서 성공 가능성을 높임.

4.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상향식 제안

- **(지역 수산업·어촌 현안 대응 참여)** 지역 수산업자, 어촌 주민이 지역 현안대응에 참여하도록 지원함.
 - 지역 수산업·어촌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수산업자와 어촌 주민은 각기 생업에 종사해야 하므로,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조율에 한계가 있음.
 - 지역 주민이 참여하면 지역 수산업·어촌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창의적 발상과 현안 대응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벤처 창업, 수익모델 창출, 지역공동체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지역주민의 현안대응 참여유도 방안을 모색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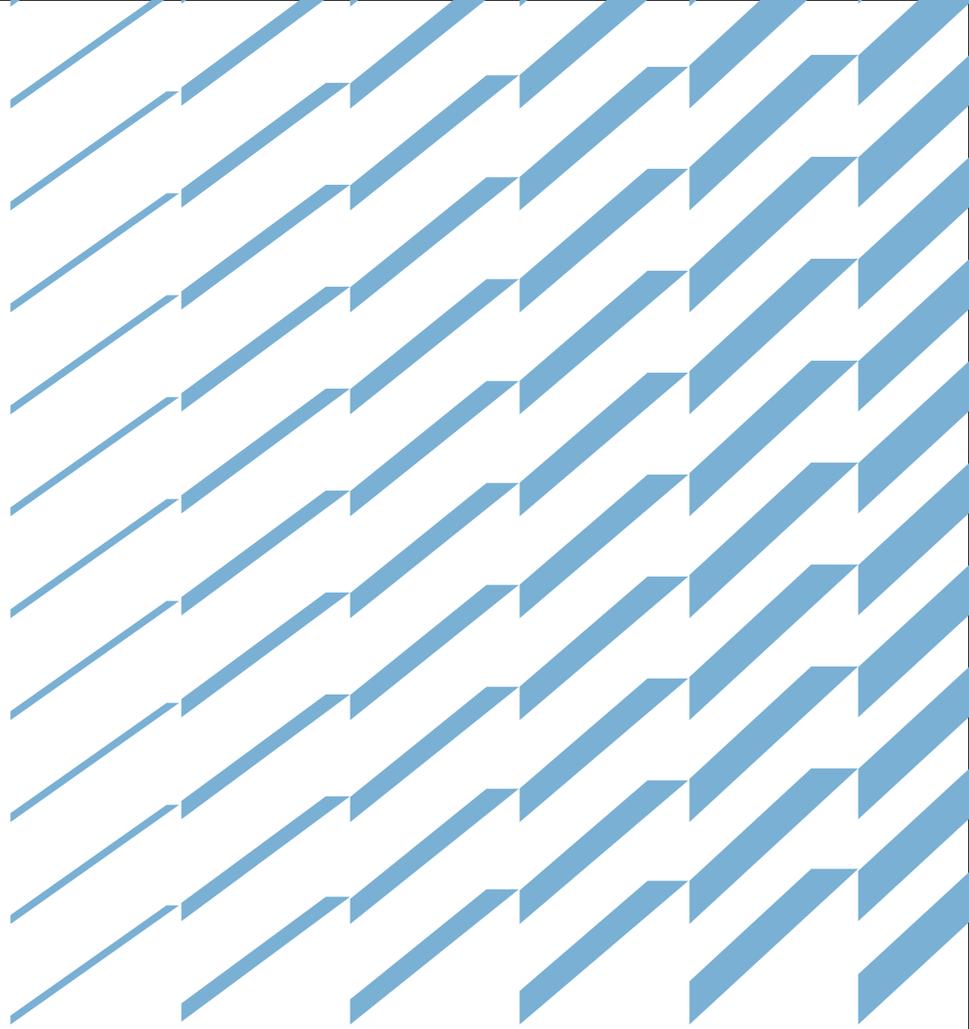
- **(상향식 정책제안과 직접 추진)** 지역자원과 여건을 고려한 상향식 제안과 직접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
 - 지역자원과 여건을 고려하여 현안에 대응하거나 수산업·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상향식 제안이 가능한 체계 구축
 - 지역 수산인, 어촌 주민의 현장 의견과 전문가, 활동가 집단, 공무원 등의 역량이 결합되면 실현 가능한 지역 특성화 상향식 정책제안 가능
 - 채택된 상향식 제안에 대하여 지역 공동체가 직접 참여하여 실행력을 높이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임.

5. 네트워크 역량 강화

- **(다양한 주체 연계 네트워크)** 농산어촌, 지방소도시의 공간적 개방과 다양한 전문 분야 집단의 네트워크가 창의적인 시너지를 유발할 수 있음.
 - 지역주민 네트워크와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 등 유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행정, 민간, 기관 등)의 협력은 다양한 아이템 발굴에 기여함.
 - 다양한 전문 분야의 네트워크는 기존 정책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창의적인 신규 정책사업 발굴 등에 강점이 있음.

- **(고유사업과 연계·협력)**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성원 간 고유사업에 집중하되, 사업 간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 유도
 - 공동 네트워크 참여기관의 고유 목적에 맞는 업무 구상과 추진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기존 정책사업 성과를 달성하는 여건에서 새로운 연계·협력 추진
 -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 사례처럼 네트워크 주관기관이 연계·협력을 담당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가, 실무자 간 협의를 통한 전복형 수출지원모델 발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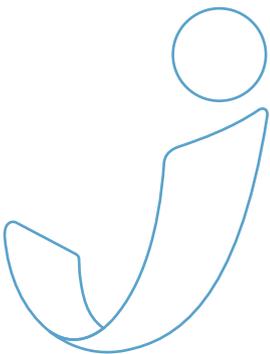
-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공동가치 제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결성된 공동체 내부 결속력 제고와 함께 유사한 목적의 타 지역 공동체 간 협력 유도
 - 유럽 지역수산공동체 네트워크 전략을 통해 기초 역량이 약한 지역수산공동체의 역량강화와 연대의식 함양
 - 지역수산공동체 간 협력 네트워크는 공동 활동을 통한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창출과 세계적 확산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각 지역별 창의적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속적인 수익모델, 지역 활성화 모델 발굴과 타 지역 크리에이터와 협업 등을 통해 새로운 로컬문화 창출에 기여함.



제4장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조직 활용방안

1.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전담지원조직 필요성 검토
2.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전담지원조직 활용방향
3.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조직 추진과제



제4장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조직 활용방안

제1절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전담지원조직 필요성 검토

1.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전담지원조직 필요성

- (수산업·어촌발전 관련 조직 업무한계)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을 위한 기존 지원 조직은 관련 법 규정에 의거 명확한 업무범위가 설정되어 있음.
 - 전라북도 어촌특화지원센터, 전라북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전라북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등 관련 법정 업무가 확정되어 있음.
 - 수산업·어촌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업무 중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을 특별법 형태로 제정하여 우선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음.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관련 기존 지원조직의 업무 이행성과는 수산업·어촌 전반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현행 법 규정에 의거한 지원조직 운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같은 관점에서 특정 지원조직에게 별도의 업무를 부여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음.
 - 수산업·어촌발전을 위한 지원조직 운영 근거법에 따르면 대부분 공간적으로 수산업 거점인 어촌공간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공간 관점의 통합·연계·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전라북도 수산업자·어촌주민 지원)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수산업자와 어촌주민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수산업과 어촌공간 전문성 활용방안 검토
 - 지역 수산업자와 어촌주민은 수산업과 어촌공간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 현안인식능력이 뛰어나함.
 - 지역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를 위한 현안 대응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생업에 종사해야 하므로 물리적인 한계가 있음.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현장 여건에 적합하고, 수요자 만족도가 높은 정책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지역 수산업자와 어촌주민의 역량 활용이 필요함.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행정조직 지원)** 광범위한 영역의 확정된 수산업·어촌발전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영역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함.

- 관련법과 법정계획에 근거한 수산업·어촌발전 정책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현재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활성화 정책사업은 새만금해양수산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영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정책사업이 5건이상으로 효과적인 업무추진과 현안대응,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 지원이 필요함.

○ **(전북형 수산업·어촌발전 모델 구상)**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브랜드 사업을 통해 지역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 수산업·어촌 자원의 동질성에 기인하여 지자체의 수산업·어촌 활성화 전략이 유사한 상황에 대응하는 “전북형 수산업·어촌 발전 모델” 구상 필요
- 수산업·어촌 활성화 정책이 대부분 정부계획에 의거 정부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배경에는 시·도 수산업·어촌 자원의 유사성이 있음.

○ 전라북도는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생생마을,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 등 다양한 지역브랜드 사업과 광역·기초 지원조직 체계 노하우 활용 가능

- 농림어업·농산어촌 기반의 공간관점에서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 및 관계자 네트워크는 수산업·어촌발전사업으로 확장 가능성이 높음.
- 기존 지역 농산어촌 활력제고를 위한 농업·농촌, 임업·산촌 등 전라북도 브랜드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고, 지역 수산업·어촌 자원 특성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전북형 수산업·어촌 발전 모델”을 구상할 수 있음.

○ 선행연구 결과 정부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높으며, 유사한 지역별 수산업·어촌 활성화에 대응하는 차별화 전략 구상 필요

- 기존 수산업·어촌발전 정책사업은 현행 방식(정부와 지자체 협력)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현안해결과 지역 수산업·어촌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차별화 전략 검토 필요
- 수산업·어촌 정책영역과 지역 수산업자·어촌주민 등 민간영역을 지원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 검토

-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거버넌스 체계 구축)** 수산업·어촌발전 정책사업 만족도를 향상하고 수산업자와 어촌주민 역량 결집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전북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등 수산업·어촌발전을 위한 조직과 다양한 수산업 단체, 어촌계 등 수산업자·어촌주민단체의 역량 결집 필요
 - 전라북도와 관계 시·군 수산업·어촌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점진적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

 - **(수산업·어촌발전 정책사업 이행체계 고도화)** 관련법에서 규정한 수산업·어촌발전 신규사업과 행정조직의 비탄력적 특성을 보완하여 이행체계 고도화
 - 정부와 지자체 협력으로 추진되는 정책사업은 행정조직 특성상 업무에 따른 담당인력 배정의 탄력성이 떨어지므로 보완 방안 검토
 - 현재 추진 중인 정책사업 외에 관련법에서 규정한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구상·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조직 지원이 필요함.

 - **(전북형 수산업·어촌발전 신규사업)**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현안 대응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차별화된 전북형 신규사업 발굴 필요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자원 특성을 살리고, 농산어촌 공간에 추진된 지역 브랜드 정책사업을 결합하여 관련법 규정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 필요
 - 신규사업 발굴과 추진 과정에서 현재 확정된 수산업·어촌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조직을 지원하는 조직 구성 필요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지원조직**

- (정책사업 성과제고)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정책사업 만족도 유지, 단계적 향상
- (이행체계 고도화) 추진인력 한계를 보완하여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체계 구축
- (전북형 신규사업) 현안해결과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북형 수산업·어촌 활성화 사업 구상 및 제안 방안 모색

수산업자·어촌주민 지원

- 지역 수산업과 어촌공간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높임.
- 생업 종사에 따라 지역 수산업, 어촌 현안 해결 한계
- 수산업과 어촌공간 이외 영역의 전문성 한계

수산업·어촌 행정조직 지원

- 광범위한 영역의 수산업·어촌 발전사업 추진 담당(법정의무)
- 현재 1인당 담당사업이 5건 이상으로 효과적인 지원 필요
- 지역균형발전관점 전북형 수산업·어촌 발전사업 구상 한계

**전북형 수산업·어촌
발전 모델 구상**

- 수산업·어촌 자원 유사성에 따른 정책사업 동질성 극복
- 지역 수산업·어촌 환경에 부합한 브랜드 사업→ 차별화 → 지속가능성 제고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현안 대응과 지속가능성 제고

[그림 4-1]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전담지원조직 필요성

2.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전담지원조직 유형 검토

1) 공공주도형

(1) 운영주체와 유사사례

- **(운영주체: 정부·지자체)**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지원조직의 공공주도형태는 정부·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를 의미함.
 - 정부·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는 행정조직에 반영되고, 해당 조직 인력은 전원 공무원 신분으로 구성됨.
 - 정책사업 목적과 추진 입지에 따라 행정조직 본청 또는 추진 대상지 파견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음.

- **(유사사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지자체가 실제로 행정조직에 편입한 사례는 정부,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살펴볼 수 있음.
 -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사업과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지속 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을 차관 직속으로 설치하였고, 기존 해당업무를 담당했던 어촌어항재생과 인력을 투입함.
 - 해양수산부는 스마트해상물류 분야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부정책 대응을 위하여 차관 직속으로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을 조직함.
 - 강원도는 스마트양식클러스터의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수산정책과에 '연어양식산업TF'를 설치하고 3명의 담당인력을 배치함.

(2) 특성

- **(행정조직 편입, 공무원 조직)** 공공주도형태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를 편성하고 정규 행정조직에 포함하며,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공주도형태는 소속 직원 신분이 전원 공무원(일반직 또는 기술직)이며, 정규 행정조직에 포함되어 있음.
 - 정책사업 업무 특성과 규모에 따라 초기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관련 부서에 일부 업무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 **(전략정책추진 성과→ 정규조직화)** 특정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배당된 업무 성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격상될 수 있음.
- **(행정조직 일부업무→ 전담조직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의 일부 업무였던 어촌뉴딜300사업의 수요자 만족도, 정책성과 제고, 지속·관리 필요성 등에 따라 해당업무를 전담하는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이 신설됨.
- **(프로젝트업무→ 정규업무)** 강원도 연어양식산업TF는 산·학·관 협력으로 추진되는 연어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 운영을 위해 조직되었으며, 해당 사업성과에 따라 추후 연어양식산업팀 또는 스마트양식산업팀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음.

(3) 장·단점

- **(장점: 안정성, 지속성 제고)** 공공주도형태는 정규 행정조직과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조직이 해당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계획과 정책수요, 공익적 가치가 충족되어야 함.
 - 위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 공공주도로 추진될 경우 공공성이 담보되어 지속 가능성이 높아져 정책사업 추진의 안정성이 높아짐.
- **(단점: 전문성, 탄력성 부족)** 공공주도형태는 기존 공무원 혹은 신규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되므로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며, 정책수요에 탄력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정규 행정조직과 공무원 조직의 장점은 업무 영역에 따라 특정 분야별 세분화된 전문성 부족의 한계점으로 작용함.
 - 행정조직 특성에 따라 정책수요가 있다고 해서 인력을 필요한 시기에 충원하기 어려운 비탄력성의 한계가 있음.
- **(대응전략: 임기제 공무원 제도)** 공공주도형태의 전문성, 탄력성 한계는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통해 대응할 수 있음.

- 초단기, 일회성의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 전문가 자문, 프로젝트 기반 업무 위탁을 통해 민간 인력을 활용하거나, 기존 공무원 역량 강화가 가능한 경우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통해 대응할 수 있음.
- 반복되는 업무, 중장기적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기존 공무원 역량 강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기제 공무원을 전문가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행정조직 구성에 변화가 생기므로 의사결정과 채용절차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

2) 민간위탁형

(1) 운영주체와 유사사례

- **(운영주체: 민간기관, 기업, 대학 등)** 민간위탁형은 정책사업과 유사한 영역을 담당하는 민간기관·협회, 기업, 대학 등이 운영주체로 참여할 수 있음.
 - 단기간에 전문 분야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며 많은 영역에서 민간위탁형태의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정책사업의 소관부서 담당업무를 지원하는 형태이며, 위탁기관과 행정조직 담당자 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특징임.
- **(유사사례: 기관형태유지 사업위탁)** 민간위탁형은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차원에서 많이 추진되고 있음.
 - 지역 어촌특화지원을 위한 어촌특화지원센터는 행정조직이 직접 담당하지 않고, 지역에 어촌특화발전역량을 갖춘 전문기관, 기업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과 국토교통부 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은 물류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강점을 지닌 전문가 집단, 대학 등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

(2) 특성

- **(유사업무 수행기관, 기업, 대학 수행)** 민간위탁형태는 정책사업 목표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기업, 대학 등 산·학·관 협력차원에서 시행됨.

- 위탁기관은 고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전문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단기간에 전문성을 충족할 수 있음.
- 지역 여건에 부합한 아이템 발굴과 지역 현안 이해가 높은 지역 산·학·관 협력방식의 일환으로 정책사업 위탁운영이 검토되고 있음.

○ **(정책사업 성과에 따른 지속여부 결정)** 정책사업의 민간위탁 운영 성과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위탁기관이 정책사업 목적 달성에 기여했는지 여부, 해당 정책사업의 수요자 만족도, 공익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함.
- 정규 행정조직이 아니므로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지속 여부 의사결정에 대한 부담이 낮으며, 시범적인 도입 사업 추진에 적합함.
-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은 대학, 전문협회 등에 4년 위탁 운영을 한 결과 산업, 정책 분야 만족도와 지속 요구가 강하여 2021년 현재 4차례에 걸쳐 정책사업을 지속하고 있음.

(3) 장·단점

○ **(장점: 전문성, 탄력성 제고)** 민간위탁형은 단기간에 집중적인 전문집단을 활용할 수 있으며, 행정조직 비탄력성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정책사업 유형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 관련 전문가 그룹과 업무체계를 구축한 집단을 활용하여 정책성과 달성이 용이함.
- 수요자 요구, 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탄력적 인력배치, 조직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행정조직의 비탄력성 대응 수단으로 활용 가능

○ **(단점: 안정성, 지속성 부족)** 민간위탁형은 특정사업을 일정기간동안 위탁하는 형태로 추진되므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한계점이 있음.

- 정책수요와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경우 지속 가능성이 있지만, 한시적 추진사업 특성에 따라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음.
- 지속성 부족의 한계는 단기 현안문제 해결에는 지장이 없지만,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 계획 수립에는 한계가 있음.

- **(대응전략: 관련법·조례 제정)** 민간위탁형태의 안정성, 지속성 한계는 관련법·조례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대응할 수 있음.
 - 민간위탁형태로 추진되는 정책사업 관련법·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일정기간 민간위탁형태의 정책사업 추진 성과를 고려하여 지속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에 관련법·조례 제정이 가능함.

3) 민·관협력형

(1) 운영주체와 유사사례

- **(운영주체: 공공기관)**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지원조직의 민·관협력형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형태를 의미함.
 - 공공기관은 기관별 설립근거가 있으므로 지속성,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공무원 행정조직의 비탄력성도 적정 범위에서 해소할 수 있음.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지원조직 형태로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형태가 적합하며, 민간과 공공의 중복 영역에서 업무 추진이 가능함.
- **(유사사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민·관협력형태의 조직형태로 추진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음.
 - **(전담조직 신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어촌·어항의 개발, 어장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관련 연구개발, 관광 활성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임.
 - **(전담조직 지정)**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는 전라북도 수출지원을 담당하는 13개 기관의 300여개 사업의 통합관리, 연계·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2020년 11월 출범하였으며,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전담조직으로 지정됨.

(2) 특성

- **(설립·지정목적의 명료성)** 공공기관은 설립목적이 분명하므로 정책사업 목표에 부합한 업무추진이 가능함.
 - 공공기관 구성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 신분이지만, 공공기관 설립 목적에 합당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처리규정 수준의 업무추진 체계를 설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은 설립·지정 목적에 합당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며, 신규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과정도 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해야 함.

- **(목적부합 영역 확장 가능성)** 공공기관 설립은 관련법·조례 등에 근거하므로 한번 설립·지정된 공공기관은 합목적성 범위에서 확장 가능성이 있음.
 - 관련법·조례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설립·지정되면 목적사업 추진과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신규정책사업 제안 등 선순환적 흐름이 형성됨.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활성화 공공기관이 설립·지정되면 목적사업을 우선 처리하고,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과 설립·지정조례에 일치하는 정책사업(국책사업, 국가예산, 신규시책 등) 발굴 가능

(3) 장·단점

- **(장점1: 안정성, 지속성 제고)** 민·관복합형태로 공공기관 설립은 공공주도형의 장점인 안정성과 지속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법·제도적 근거에 의해 설립되므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해당 업무추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공무원 행정조직의 업무추진방식 수준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은 공공주도형태의 장점을 누릴 수 있음.

- **(장점2: 전문성, 탄력성 제고)** 민·관복합형태는 민간위탁형태의 장점인 전문성 제고와 행정조직 비탄력성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공무원 행정조직은 업무배정에 따라 업무추진과 필요한 교육·훈련을 병행하여 단기간에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으나, 공공기관은 설립목적에 부합한 전문가를 선발하므로 비교적 단기간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음.
- 공공기관 인사제도를 활용한 탄력적인 인력확보로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신규사업의 검토, 추진이 가능함.

○ **(단점: 신규설립 한계)** 민·관복합형태로 공공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공감대 형성, 법·제도적 근거 마련 등 제반사항을 이행해야 함.

- 공공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영역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수산업·어촌 활성화 뿐 아니라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수요 집단 설득과 예산확보 등 공공기관 신규 설립 한계를 극복해야 함.

○ **(대응전략1: 신규설립 근거마련)** 신규 공공기관 설립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첫째, 신규 공공기관 설립 근거 조례를 수립할 수 있음.

- 민·관협력형태 단점의 직접적인 대응전략으로 지역사회 구성원 설득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가칭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 설립 조례」를 제정함.

○ **(대응전략2: 기존기관 지정전략)** 신규 공공기관 설립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 유사한 목적의 공공기관에 수산업·어촌 활성화 업무를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 민·관협력형태 단점의 간접적 대응전략으로 기존 공공기관 중 수산업·어촌 활성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을 의미함.
- 신규 공공기관 설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배정하고, 해당 기관에서는 전담인력 충원을 하는 방법으로 신규설립보다 현실적인 대응전략임.



[그림 4-2]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전담지원조직 유형 검토

4)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전담지원조직 운영 관련 전문가 자문의견

- 전라북도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북도와 관계 시·군의 공무원 조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데 다수 전문가가 공감함.
 - 지역별 해양수산업발전계획을 살펴보면 대부분 수산식품,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등 유사한 영역으로 계획을 수립함.
 - 차별성과 특성화는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사람에게 있으므로, 차별화된 인력을 고용하고, 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는 람사르고창갯벌센터, 수출통합지원센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등 유사한 영역의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므로, 가능성이 타 지자체 보다 높다고 판단됨.
- (민·관협력형태 선호)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전략 관련하여 다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민·관 협력형태를 선호함.
 - 연구진의 제안형태별 검토내용대로 극복방안이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공공주도형과 민간위탁형 추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함.
 - 행정조직의 참여가 불가피하지만 조직신설과 공무원 인력충원의 비탄력성 극복에 어려움이 있음.

-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물 조직개편(2020년 7월)에 따라 수산업·어촌 분야 업무 세분화, 인력충원 등이 정책수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어 현 상황에서 수산업·어촌 활성화를 위한 행정조직 신설 및 인력배치 등은 어려움이 있음.
- 민간위탁형은 위탁기관 본연의 사업에 맞추어 소극적인 업무추진의 우려가 있으며, 수산업·어촌 전문 인력 확보 여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이론적으로 민간위탁형의 안정성, 지속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법·제도 근거마련, 업무성과에 따른 예산수립(도·기초의회) 등을 고려할 때 한계점이 있음.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를 중간지원조직형태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 판단됨.
 - 민간위탁형으로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수산업·어촌과 관련된 협회, 기관이 아니더라도 창의적인 업무 기획과 동력을 갖춘 청년기업, 로컬벤처, 사회적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수산인, 어촌주민은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형태로 나오는 수산업·어촌 지원사업 제안 작업과 생업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함.
-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현장 여건 맞춤형 사업발굴과 정부, 지자체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 등의 역량이 있는 전문그룹을 모을 필요가 있음.
 - 대부분 수산인, 어촌주민은 초기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현장조사에 시간을 내어 참여하지만, 중요한 제안서 작업 등에는 생업과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함.
- 일부 개인의견을 전제로 해양수산직 퇴직공무원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의 수산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와 공모 제안서 등 행정문서 작성능력을 수산업·어촌 활성화 정책지원사업에 활용될 수 있음.
 - 단기간에 지역 수산업·어촌 발전사업의 이해와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인적자원이라고 판단됨.
 - 기술역량이 뛰어난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식컨설팅을 통한 어가소득향상과 수산업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기존 지원조직 활성화 우선)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을 위해 운영 중인 현재 지원 조직 활성화, 공간 관점의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관련 법 규정에 의거하여 신설·지정된 어촌특화지원센터,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 센터, 씨그랜드센터 등이 운영된 시점이 오래되지 않음.
 - 수산업·어촌발전을 위한 지원조직 운영에 따른 성과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정책적 합목적성이 높다고 판단함.

- 대부분 정책사업이 어촌공간에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공간관점의 협력전략을 통한 정책성과 고도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전라북도와 관계 시·군 수산정책 담당부서와 지원조직 간 원활한 소통과 세밀한 업무계획 수립을 통해 법 규정에 따른 목표달성과 공간 활성화 유도
 - 정부·지자체 행정조직과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관련 지원조직, 지원조직 간 원활한 연계협력을 통하여 공간관점의 연계협력을 시도 후 필요하다면 전담지원조직 설립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함.

- 예를 들어 어촌공간에 새롭게 유입되는 귀어·귀촌인과 기존 어촌주민 간 소통과 협력으로 다양한 공간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음.
 - 전라북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어촌으로 귀어·귀촌한 새로운 어촌 구성원은 어업 외 전문 분야 역량을 갖추고 있음.
 - 전라북도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업 연계 다양한 사업 발굴에 귀어·귀촌인의 역량이 반영될 수 있으며, 이는 어촌특화발전과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업무로 연결·진화될 수 있음.
 - 귀어·귀촌인과 기존 어촌주민 간 원활한 소통은 여성어업인, 청년어업인 등 세부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한 신규정책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음.

제2절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전담지원조직 활용방향

1.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조직 운영전략 구상

1)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조직 중장기 추진목표 구상

- 전라북도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를 주도하는 전담기관으로 가칭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를 설립·지정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전담지원조직은 민·관협력형태로 공공성과 전문성을 모두 확보한 구성을 제안함.
 - 가칭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공공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고, 민간운영의 전문성과 탄력성을 모두 갖추도록 함.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명시된 전라북도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 정책사업의 추진 주체임.
 - 제2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2021~2025)의 비전은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수산업·어촌”으로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해양수산부, 2021).
 - 현재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지만,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과 제2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수산업·어촌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략 체계 마련 필요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목표로 “전라북도 여건에 적합한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 “수산업·어촌의 지속성 제고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안함.

- 제2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의 10대 전략 중 전라북도 단위의 대응전략 모색이 필요한 영역은 생산기반, 수산식품, 어촌·어항 분야로 판단됨.
 - 전통적인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 가치를 창출하는 수산식품산업, 수산업·어촌 공간의 일터와 삶터로서 활력 제고 등은 현재의 수산업·어촌 자원을 기반으로 정부정책사업과 상향식 지역특화 사업 발굴 가능성이 있음.
 - “수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나 “미래 성장산업으로 전환”은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는 정부 차원의 전략체계 수립이 필요함.

- 수산업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전환은 아시아 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 전라북도 신산업지도, 전북형 뉴딜 사업 등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존 산업의 디지털화, 신산업 발굴 등 관점에서 접근해볼 수 있음.

2)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조직 운영전략

(1)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조직 운영주체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거버넌스)** 전라북도와 관계 시·군,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종합지원센터”와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성
 - 관련 기관은 기존의 고유목적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종합지원센터는 각 기관의 고유업무 통합지원과 연계·협력 주체 역할을 수행함.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계획의 구상과 집행을 담당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북형 수산업·어촌발전 특성화 사업 발굴

(2)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조직 운영전략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기반 조성전략)**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법·조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주관기관 설립·지정, 전북형 수산업·어촌발전사업 구상·추진 등이 필요함.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설립·운영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7조 제⑦항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지속가능한 특화 발전을 도모하는 전북형 수산업·어촌 발전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전라북도 수산업 발전 지원전략)** 전라북도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수산업 기술, 수산식품산업 육성, 수산업·어촌분야 로컬벤처 창업지원, 지역 수산식품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전라북도 지역 수산물을 활용한 식품개발, 조리법 개발 등을 지원하여 수산업 전방산업 활성화를 지원함.

- 최근 수산업 트렌드는 친환경·스마트양식으로 지역 수산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과 친환경 양식인증 제도 취득을 지원할 수 있음.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경영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여 지역별 수산업·어촌 관련 산업 활성화 유도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로컬벤처 창업을 유도하여 다양한 아이템과 창의적 인재의 유인을 제도적으로 지원함.

○ (전라북도 어촌활성화 지원전략) 어촌 공간의 가치를 정의하고, 다양한 시도를 유인하여 전라북도 어촌공간 활력을 제고함.

- 전라북도 어촌주민을 대상으로 생활학교를 운영하여 어촌마을 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여 기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귀촌인 융화를 연계함.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라북도 해양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하여 도민의 해양문화 향유의 공간으로 어촌 가치 창출
- 어촌공간, 역사, 문화 자원 등을 활용한 어촌관광·체험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다양한 도시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어촌공간 비즈니스 모델 구상
- 지역 특산물을 테마로 지역별 씨푸드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전라북도 어촌맛지도를 제작하여 어촌관광 활성화 유도

목표	전라북도 여건에 적합한 수산업 발전, 어촌 활성화, 지속성 제고와 도민 삶의 질 향상	
추진 과제	①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발전기반 조성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②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수립 ③ 전북형 수산업·어촌발전 사업 추진
	② 전라북도 수산업 발전 지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라북도 수산식품 제품·조리법 개발 ② 친환경·스마트 양식기술 교육·훈련 지원 ③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경영컨설팅 지원단 운영
	③ 전라북도 어촌 활성화 지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라북도 어촌생활학교 운영 ② 전라북도 해양교육문화종합센터 운영 ③ 씨푸드 테마거리 조성·어촌맛지도 제작

[그림 4-3]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전담지원조직 활용방향 구상

제3절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조직 추진과제

1.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발전기반 조성전략

1)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1) 개념

- 지역 수산업·어촌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설립·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예산 설정과 정책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함.

(2) 현황분석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정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전북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전북씨그랜트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음.
- 위의 운영주체는 수산업·어촌의 6차 산업화, 귀어귀촌 활성화, 지역 수산업·어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등 설립·지정근거에 따라 정책사업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 우리나라 어촌·어항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법정 공공기관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권역별 본부를 운영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어촌어항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전라남도 섬 발전지원센터와 같이 지역 수산업·어촌 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발전전략 모색과 적극적 이행을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운영되고 있음.

(3) 제안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 설립방법 검토)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검토함.

- **(1안: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연계전략)** 전북 14개 시·군 농업농촌 활성화 중간지원조직과 광역 네트워크에 수산업·어촌발전 정책사업을 단계적으로 편입하는 방법 검토
- **(2안: 수산업·어촌발전 유관기관 지정)**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기존 기관 또는 공공기관 중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이 가능한 주체 검토
- **(3안: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 신설 또는 지정)** 전라북도 공공기관 중 수산업·어촌 특성화 발전을 주도할 수 있고,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전담조직을 지정하거나 신설하는 방안 검토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 신설·지정 근거 마련)**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 신설이 필요할 경우 관련 조례 제정과 운영전략 수립이 필요함.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제정)**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수산업·어촌발전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함.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규정된 수산업발전과 어촌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정책사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사업화 추진을 통한 지역 수산업·어촌 특화 발전전략 수립
- 운영조례를 근거로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를 신설·지정하여, 안정적인 업무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체계를 조성함.

○ **(수산업·어촌발전조직 간 연대·협력 네트워크)**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관, 전국단위 조직과 협력체계를 구축함.

- 기존 수산업·어촌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간 연계 협력을 유도하여 지역 수산업·어촌 자원 활용 가능성을 높임.
- 지역 간, 전국단위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조직과 연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 간 교류,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 노력을 함께 추진할 수 있음.

2)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수립

(1) 개념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한 법정계획으로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함.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은 제2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에 맞추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산업·어촌의 지속 가능성 제고 목적으로 수립함.

(2) 현황분석

- 제2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해양수산부, 2021) 수립에 따라 정부의 수산업·어촌발전 정책방향을 확인할 수 있음.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라 지역단위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거나, 수립 중인 지자체가 있으며, 전라북도는 현재 미수립 상태
- 제2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은 수산업·어촌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글로벌 트렌드 변화, 어촌 과소화·고령화 대응과 소득증대 등 정책사업을 구상함.
- 전라북도 자원을 활용하여 정부정책에 부합하며 지역 수산업·어촌의 특화발전을 위해서 일관성을 갖춘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함.

(3) 제안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수립)**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수산업·어촌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방향 설정
 - 제2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추진방향에 부합하고,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특성화,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에 기여하는 각 기관, 단체, 어촌계, 수산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이 원하는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 발전 방안을 도출함.

3) 전복형 수산업·어촌발전 사업 추진

(1) 개념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발전전략을 발굴하고, 현장 중심의 현안 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모색함.
- 유사한 수산업·어촌 환경에 기인한 보편적인 정책사업으로 토대를 조성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지역 특화전략으로 전복형 수산업·어촌발전 사업 구상

(2) 현황분석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구상은 전라북도 국책사업, 국가예산사업, 신규시책사업 발굴 등의 절차로 수렴됨.
 - 전라북도과와 관계 시·군 공무원, 전북내 공공기관 관계자, 대학 교수, 수산인, 어촌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정책사업 제안을 수렴함.
 - 수산업·어촌발전 정책사업 제안이 채택될 경우 구체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 지자체 설득 과정이 이행됨.
-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는 마련되어 있지만, 담당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전복형 수산업·어촌 특화사업 발굴 동기부여가 충분하지 않음.
 - 행정조직 중심으로 전복형 수산업·어촌 특화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현행 방식에 인센티브 부여 방식을 보완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전복형 수산업·어촌 특화사업 발굴과 추진으로 지역 수산업·어촌발전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현행 방식의 단기적인 개선이 쉽지 않음.
- 현장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불편사항, 어촌공간 개선 의견이 전복형 수산업·어촌 특화사업 발굴에 필수적이지만, 생업과 병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지역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불편사항과 현안개선에 대한 의견은 현장 중심성을 갖추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현장 의견 개진의 후속단계인 제안서 작성,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각종 분석 절차를 수산인과 어촌주민이 직접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3) 제안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 네트워크)**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가 주도하여 지역 수산업·어촌 관계자 연대·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가 지역 수산업·어촌 관계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 현안대응과 지속 가능한 정책사업 발굴
 - 전라북도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를 위하여 직·간접적인 사업 추진 주체 간 효율적 업무추진을 도모하고, 상호 연계성을 보완함.
- **(전북형 수산업·어촌발전 사업 구상)** 지역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현안문제 해결, 지속발전 사업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지원체계 구축
 - 전북형 수산업·어촌발전 사업모델을 구상하기 위한 아이템 발굴과 방향성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사업 형태의 제안서 작성, 공익적 가치 발굴 등 사업내용 고도화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 필요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여 어촌특화지원센터,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전북씨그랜트센터와 도내 공공기관 등이 정기적으로 지역 특화사업 발굴에 참여하도록 함.
- **(전라북도 수산인, 어촌주민 역량강화 병행)** 중장기적으로 전북형 수산업·어촌 특화사업 구상과 추진을 지속하기 위해서 지역 수산인과 어촌주민 역량강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수산업·어촌발전 정책사업 아이디어는 지역 수산인과 어촌주민으로부터 탄생하지만, 사업화 모델 구상, 고도화, 정책적 목적달성방안, 공익적 가치 창출 등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가 요구됨.
 -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제안 사업을 일회성으로 종료하기보다, 목표달성 후 진화할 수 있도록 지역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역량강화를 병행해야 함.

-
- (삼락농정 수산분과포럼 연계) 전라북도 삼락농정 수산분과위원회의 분과포럼과 정책 세미나 등을 전북형 수산업·어촌 발전사업 발굴에 연계함.
- 현재 삼락농정 수산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수산업·어촌발전 정책사업의 선정 및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분과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수산업과 어촌 분야의 시의적절한 의제를 선점하여 현안이슈에 대응하고,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설정하여 지역 수산업·어촌 특성화 발전에 기여함.
 - 연간 4회의 수산분과위원회와 정책세미나를 전북형 수산업·어촌 발전모델 구상과 연계하여 현장 중심의 전문성 있는 사업화 전략 구상에 활용함.

2. 전라북도 수산업 발전 지원전략

1) 전라북도 수산식품 제품·조리법 개발

(1) 개념

- 지역 수산물 활용한 조리법과 수산식품을 개발하여 수산업의 전방산업 육성과 지역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함.
- 전라북도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밀키트 등 식제품 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완제품에 대한 판매·홍보활동 지원

(2) 현황분석

- 수산물 조리법, 수산식품개발은 민간기업, 수산인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며, 별도로 연구개발조직을 운영하는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환경임.
- 전북도내 전라북도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집에서 조리하는 식문화가 형성되고, 이에 따른 밀키트, 간편식 등 제품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
- 유명셰프의 조리법, 소셜네트워크 파급력 등 스마트기기의 보급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활동이 가능함.

(3) 제안

- **(전라북도 특화식품 개발전담기관)** 수산물 소비를 증대하기 위해서 지역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다양한 먹거리 개발을 전담하는 주도적 주체가 필요함.
 - 현재 중소·영세기업은 체계적인 제품개발에 한계가 있으며, 수산물을 활용한 제품개발 전담기관이 없음.
 -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한 먹거리 개발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수산인의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 신규 기관을 설립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에 전라북도 수산식품개발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전라북도 수산식품 개발)** 지역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간편식, 밀키트 등 식제품 개발 추진

- 전라북도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식품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전라북도 해수면·내수면 수산물을 원료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군산항, 새만금신항 등을 통한 수출 활성화 기대
- 지역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밀키트를 개발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한 홍보를 병행하면 비대면 사회 환경에 적합한 수산물 판로개척, 소비증대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전라북도 제철 수산물 조리법 공모대회)** 제철 수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지역 식품산업 브랜드 강화를 위한 제철 수산물 조리법 공모대회 개최

- 지역 요리사, 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의 수산물 소비 활성화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템을 수집할 수 있음.
- 공모대회 수상작을 중심으로 지역 수산물 가공업체와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밀키트, 간편식 등 다양한 식제품을 개발·지원할 수 있음.

○ **(전라북도 특화수산식품 홍보전략)** 최근 소비트렌드는 SNS를 활용한 마케팅이 효과적이며, 품질인증, 소비자안전을 담보하면서 맞춤형 홍보 전략 검토

- 특화수산식품 개발과정에 다양한 소비자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며, 개발된 제품은 도지사 인증, 지역 브랜드 부착 등 공동마케팅 여건에 부합하도록 준비
- 전북도민 먹방 크리에이터를 홍보모델로 하여 제품 홍보, 조리법 안내 등을 소비자 맞춤형으로 추진함.

(4) 향후추진계획

○ **(전담기관 선정협의)** 전라북도 농축수산물을 활용하여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전담기관 선정 및 지원계획 협의

2) 친환경·스마트 양식기술 교육·훈련 지원

(1) 개념

-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스마트 양식” 트렌드에 맞추어 지역 수산인, 수산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와 도내 대학, 전문가 중심으로 친환경·스마트 양식기술 개발이 병행되어야 함.

(2) 현황분석

- 제2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의 정책기조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하여 친환경·스마트 양식산업 육성에 있음.
 - 스마트양식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 강원, 경남, 경북 등에서 추진 중임.
 -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전국 최초 내수면 힌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연구 시설을 조성하고 있음.
- 스마트양식기술을 통한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친환경 양식인증제도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유기식품인증, 무항생제 인증,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 등 국내 양식 인증제도와 해외시장에서 통용되는 BAP(best aquaculture practices), Global G.A.P,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등 국제 인증제도가 운영 중임.
 - 스마트 양식장에서 대량 생산된 수산물의 소비자 안심과 판로 개척을 위해서 친환경 인증기준에 부합한 생산·유통 관리가 중요함.
 - 전라북도는 현장 전문가, 수산인, 어촌주민, 행정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전라북도 친환경·스마트 양식산업 육성방안” 모색을 위한 2021 삼락농정 수산분과포럼 정책세미나를 개최함.

(3) 제안

- **(전라북도 친환경·스마트 양식 실증연구단지 조성)**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 연구센터에서 내수면 스마트양식 실증연구시설 조성·운영
 - 힌다리새우의 친환경·스마트 양식시설과 설비,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성과를 지역 수산인과 귀어창업자에게 공유함.
 - 힌다리새우 친환경·스마트 양식 성과를 토대로 다양한 생물의 양식시설, 기술을 개발하여 전라북도와 국가에 보급하는 친환경·스마트 양식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음.

- **(친환경·스마트 양식센터 조성)** 내수면 스마트양식 실증연구시설 성과를 지역 수산인과 귀어창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공동 양식센터 조성
 - 친환경·스마트 양식기술의 교육·훈련이 가능하고, 일정 기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양식창업보육기능을 수행하는 공간 조성
 -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가급적 친환경·스마트 양식 실증연구시설에 조성하여 친환경·스마트양식 전문가로부터 교육·훈련이 용이하도록 함.

- **(친환경 양식인증 지원)** 양식수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해 국내외 시장에서 통용되는 친환경 양식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스마트양식의 성과로 대량 수산물이 보급되면 판로 개척과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지자체, 유통기업, 어민 등 다양한 주체가 친환경 양식인증제도를 주도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친환경 양식인증제도의 안착과 지역 수산물의 판로 개척을 위해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가 인증업체와 생산자 간 원활한 매칭, 협력을 지원함.
 - 지역 수산물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 국제 수산물 인증을 취득한 후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음.

3)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경영컨설팅 지원단 운영

(1) 개념

- 전라북도에서 수산업 분야와 어촌공간에서 창업하는 로컬벤처를 지원하기 위한 “수산업·어촌 경영컨설팅 지원단”을 조직·운영함.
- 로컬벤처의 창업형태는 대개 아이디어, 특정 영역 전문기술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창업 준비단계, 시작단계, 운영단계 등 생애주기에 맞춤형 지원 추진

(2) 현황분석

- 전통적인 수산업은 생산·가공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이 형성되어 있어 소비자 맞춤형, 부가서비스 개발 등 역량에 한계가 있음.
- 수산인 가족기업, 영세기업은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위하여 경영전반에 걸친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지방소멸, 농산어촌 과소화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다수 도시민, 청년, 은퇴자 등이 개인자격으로 사업아이템을 구상하고, 지원사업 조회 및 제안서 작성, 선정 후 관리 등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 키친리퍼블릭(네덜란드) 등 창업 희망자의 초기 창업공간, 자원 투자 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년창업공간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3) 제안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경영컨설팅 지원단 운영)** 수산업·어촌분야, 경영, 홍보·마케팅, 재무, 건축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운영함.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에서 지역 수산업·어촌 경영체의 다각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풀을 형성함.

- 핵심 아이템이 수산업·어촌이지만 사업화를 위해서는 경영, 경제, 회계, 마케팅 등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는 전문가 그룹 컨설팅이 필요함.
- 정해진 일정에 분야별 컨설턴트로 구성된 지원단이 해당 지역에 방문하여 희망자에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하는 정기 컨설팅과 필요한 시점에 지원센터에 요청하여 적절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수시 방식을 결합함.

○ **(전라북도 로컬벤처 코디네이터)**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가 로컬벤처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여 경영컨설팅 지원단과 희망자 간 연결·관리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경영컨설팅 지원단과 창업희망자 간 적절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함.
- 창업희망자의 다양한 수요와 적절한 전문가의 매칭과 컨설팅 성과 관리 등을 일원화하여 종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로컬벤처 멘토링 프로그램)** 중장기적으로 지원사업 혜택을 받아 지역에서 자리잡은 로컬벤처가 신규 창업자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함.

- 초기 국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 컨설팅 지원단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로컬벤처 성공사례가 생기면 성공창업자가 신규 창업자를 멘토링하는 체계가 이상적임.
- 로컬벤처 창업자 간 멘토링은 창업자 간 연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창업자 간 연대문화는 지역 커뮤니티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수산업·어촌 로컬벤처지원센터 조성)** 로컬벤처 창업희망자가 초기에 필요로 하는 업무공간과 거주공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로컬벤처지원센터 운영

- 독립된 건물형태로 수산업·어촌 로컬벤처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운영전략에 맞추어 로컬벤처 희망자를 지원하는 방안과 지역 내 수산업·어촌 창업이 가능한 공간(빈집, 빈사무소 등)을 창업희망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신규 건물을 조성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어촌 빈집, 빈사무소, 공동 공간 등을 일정기간 무료 또는 저렴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로컬벤처 창업자를 지원하고, 어촌지역사회 융화와 활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음.

3. 전라북도 어촌 활성화 지원전략

1) 전라북도 어촌생활학교 운영

(1) 개념

- 전라북도 어촌생활학교는 어촌공간에서 발생하는 일상의 문제해결과 사회관계 개선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생활역량 습득을 지원함.
- 일반적인 구조물로서의 학교가 아닌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역 어촌주민이 필요로 하는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2) 현황분석

- 수산업·어촌 활성화에 직접적 관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전담지원조직과 어촌계, 행정기관 등에서 지원하고 있음.
 - 귀어귀촌, 로컬벤처 창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어촌에 오는 도시민에게 필요한 수산업 역량강화는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음.
 - 어촌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를 통해 지속적인 소득향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품개발 등 지원은 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음.
- 어촌은 도시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하고, 생활서비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인식이 있음.
 -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어촌뉴딜 300사업이 추진되어 장기적 관점의 기반시설 보강을 예상할 수 있음.
 - 어촌 지역의 생활서비스는 수요가 많지 않다는 한계로 원활한 공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어촌생활 불편으로 직결될 수 있음.
- 어촌주민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대안가치추종, 은퇴자, 전원생활희망자 등 다양한 목적지향을 가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어촌지역 생활불편 해결과정에 어촌주민이 직·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수요에 따라 로컬벤처 창업을 기대할 수 있음.
- 다양한 구성원의 개인역량과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생활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성

○ **(유사사례: 순창 할미넴 프로젝트)** 농산어촌 생활학교 운영사례로 순창 할미넴 프로젝트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음.

- 순창 지역에 자리잡은 로컬 크리에이터는 방랑싸롱을 거점으로 재즈페스티벌, 할미넴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여 지역 사회와 교류하고 있음.
- 순창 할미넴 프로젝트는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의 농촌 활력 리빙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었으며, 로컬크리에이터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특히 할미넴 프로젝트는 지역 어르신(교육생)과 랩퍼(강사진), 코디네이터(지역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등이 연계한 콘텐츠로 지역 사회 문화 행사로 자리 잡음.
- 지역 어르신은 맞춤형 강사진의 음악교육을 이수하여 쇼 미더 순창이라는 무대에서 교육 성과를 발산하였고, 무엇보다 배우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꼈다는 성과가 큼.

(3) 제안

○ **(전라북도 어촌생활교육프로그램 추진체계 구성)** 어촌공간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역의 생활역량으로 프로그램 제안·선정·추진체계 구성 필요

- 어촌생활역량의 범위는 무궁무진하므로 특정 영역에 입각하여 프로그램을 사전에 기획하기보다는 다양한 제안을 선정·추진하는 시스템 구축이 적합함.
- 어촌생활역량교육과 지속,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면 어촌주민 주도의 공간 활력 창출, 로컬벤처 창업 등의 토대가 될 수 있음.

○ **(어촌생활역량 강화 전문강사진 구성)** 어촌생활학교 코디네이터는 지역주민 수요에 맞추어 도내외 전문강사진을 섭외·구성함.

- 어촌생활학교는 지역의 농림어업 작업과 연동하는 시즌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시즌별 교육프로그램 구성을 위해서 상시 교육수요 조사 주체가 있어야 함.

- 교육수요에 따라 가급적 도내 대학, 기업 등에서 적합한 전문가를 매칭하여 지역 교육수요를 지역에서 충족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함.
- 생활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은 최정상급 전문가보다는 지역 청년, 기업가, 활동가 중심의 감성적 교감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훈련이 적합함.

○ **(생활역량교육프로그램과 코디네이터 연계)**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가 전문강사진 섭외·구성과 어촌주민 생활역량 수요 조사를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함.

- 어촌공간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역량은 몇 가지로 한정할 수 없으며 환경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있음.
- 수산업과 관련성이 없는 목공, 조경, 베이킹 등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교육·훈련 수요에 맞추어 도내외 전문가 집단과 수요자를 매칭, 교육·훈련, 사후 관리 등을 진행함.

○ **(어촌공간 활성화 유도)** 어촌 생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은 어촌마을의 유희공간, 공동공간, 카페 등을 활용하여 지역 공간 활성화 유도

- 소규모 교육·훈련 희망자 집단과 전문 강사진이 대면 교육, 실습을 해야 할 경우 도내 공공기관 시설 또는 어촌공간의 유희공간, 공동공간, 카페 등을 활용함.
- 시·군청사 회의실, 시·군립 도서관 회의실, 어촌계 사무실, 지역카페 등을 활용하면 인프라 조성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어촌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 예컨대, 생활역량 교육프로그램에 참가자 지원의 일환으로 지역카페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상품권을 지원하여 지역카페가 지역 주민의 사랑방이 되고, 수익 평준화에 기여할 수 있음.

2) 전라북도 해양교육문화종합센터 운영

(1) 개념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센터 운영
- 해양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과 관련 인력양성, 해양문화 창달에 기여하여 전라북도 해양역량과 사회발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2) 현황분석

- 국립해양박물관(부산), 국립해양과학관(울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서천) 등 해양문화, 과학체험 등을 위한 국가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해양환경에 적합한 해양교육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대응이 필요함.
- 전라북도 바다환경과 갯벌습지를 활용한 어촌체험마을이 운영 중이며, 갯벌습지 교육·체험, 운영관리를 위한 줄포만갯벌생태공원,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음.

(3) 제안

- **(전라북도 해양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개발)** 전라북도 해양자원과 환경을 활용하여 체험할 수 있는 해양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함.
 - 전라북도 바다, 강, 섬, 갯벌습지 등 해양환경에 적합한 체험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함.
 - 전라북도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여가를 즐기고 해양 친화력을 높여 도민의 해양 인식수준을 높임.
- **(전라북도 해양교육협의회 구성)** 전라북도 행정기관, 교육청, 학교,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라북도 해양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함.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을 참고하여 지역별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함.
- 해양자원과 어촌공간을 활용한 학교해양교육과 지역사회 해양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하여 도민의 해양인식수준과 어촌공간의 지속 가능성을 높임.

○ **(전라북도 해양교육인력양성)** 전라북도 해양교육·문화체험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양성을 지원함.

- 관련법상 해양교육전문강사는 전문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지역 해양교육 기획, 진행, 분석, 평가, 교육 등 업무를 담당함.
- 어촌주민 역량강화 교육과 연계하여 지역 해양교육전문강사로 육성, 지역어촌 맞춤형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함.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생태안내인 육성사례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관심과 역량강화가 지속 가능한 어촌공간 활력 제고에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전라북도 해양교육문화종합센터 지정)** 관련법 규정에 따른 전라북도 해양교육문화종합센터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운영 도모

- 전라북도 해양교육문화종합센터는 관련법 규정에 따른 필수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지역 해양교육·문화 체험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거점 역할을 담당함.
- 정부공모를 통해 신규시설을 설립하는 방안과 기존시설과 자원을 활용하여 해양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전라북도 어촌공간의 유희시설과 기 조성된 시설의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공간 가치를 다각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 판단됨.
- 해양교육전문인력양성 교육·훈련의 중심지로 도약하면 해양교육·문화체험 콘텐츠 중심지로서 전라북도 해양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씨푸드 테마거리 조성·어촌맛지도 제작

(1) 개념

- 전라북도 지방소도시, 어촌지역의 특산물, 먹거리를 중심으로 씨푸드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어촌맛지도를 제작하여 방문객 증대를 통한 어촌 활력제고와 수산물 소비 활성화 효과를 기대함.
- 지역 어촌지역에 형성된 기존의 식당, 카페, 판매소 등 시설을 활용, 특화 씨푸드 거리를 조성하여 수산물 소비와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함.
- 지역 어촌체험관광, 맛집, 숙박정보 등을 제공하는 어촌맛지도를 제작하여 전라북도 어촌관광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이바지함.

(2) 현황분석

- 어촌·어항 인근지역은 해산물과 지역 특산물을 먹을 수 있는 전문 식당가가 형성되어 운영 중이며, 전국 유명 관광지에는 대부분 먹거리 테마가 결합됨.
 - 강릉커피거리는 지역 해변에 카페가 들어서면서 조성되었고, 지자체에서 이에 맞추어 커피거리라는 브랜드를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음.
 - 여수밤바다 낭만포차는 여수밤바다 문화컨텐츠와 바다먹거리 포장마차를 연계하여 낭만포차, 해산물식당, 카페, 퓨전음식점 등이 형성됨.
 - 인천광역시 차이나타운은 중국식 문화와 상점, 먹거리가 집중되어 있어 국내에서 중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조그만 도시국가이지만 아랍문화의 부기스, 인도문화의 리틀인디아, 중국문화의 차이나타운 등 다양한 테마거리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
- 관광객은 숙소, 관광지 등에서 지역관광정보를 수집하고, 관광객 취향에 맞추어 관광 일정을 설계함.
 - 어촌 주요정보를 제공하여 어촌체험·관광을 유도하는 어촌여지도를 해양수산부에서 발간·배포하고 있음.
 -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14개 시·군별 특색있는 명소와 체험, 먹거리 정보를 카드형식으로 제작하여 배포함.

○ 여행·휴식 문화가 보편화되어 휴가철에 국내외 관광지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현재 코로나19로 자유로운 해외여행에 제약이 있음.

- 코로나19에 따른 자유로운 이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초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 사회문화가 형성되어 플랫폼 사회 전환이 가속화됨.
- 코로나19 지속으로 많은 국민이 한적한 산과 바다를 찾아 자연에서 머무는 여행·휴식 문화가 생기고, 비대면 사회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표준이 등장하고 있음.

(3) 제안

○ **(지역테마거리 조성)** 기존 어촌과 지방소도시 상권과 관광지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테마거리를 조성함.

- 지역테마거리에는 기존 지역의 역사, 문화, 먹거리, 상점 등에 새로운 수요에 맞춤형 문화거리를 조성함.
- 지역 외국인 거주자, 다문화 가족 등 여건에 맞추어 중국, 베트남, 태국 등 기존 자원을 연계한 테마 거리에 특색있는 공간으로 구성함.
- 코로나19로 자유로운 해외여행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칠리크랩, 랍사, 짜조, 쌀국수, 새우요리 등을 전라북도 어촌 테마거리에서 즐길 수 있게 함.

○ **(전라북도 씨푸드 특성화)** 지역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퓨전 음식, 지역 전통음식 등을 특성화함.

- 전주 비빔밥, 남원 추어탕, 고창 풍천장어 등 유명한 지역 먹거리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퓨전 음식 개발
- 전라북도 제철 농축수산물을 활용하여 제철 먹거리, 계절별 테마 삼합 등을 개발하여 방문자 수요에 대응하고, 수산물 판로개척에 기여함.
 - 장흥군의 한 식당에서 지역 한우, 키조개, 표고버섯을 결합한 장흥삼합을 개발하여 지역 먹거리로 자리잡고,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장흥삼합 세트를 판매하여 지속적인 지역 농림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 지역 어촌에서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건강식, 진상음식 등을 지역 문화자원, 이야기거리와 연계하여 지역 테마거리에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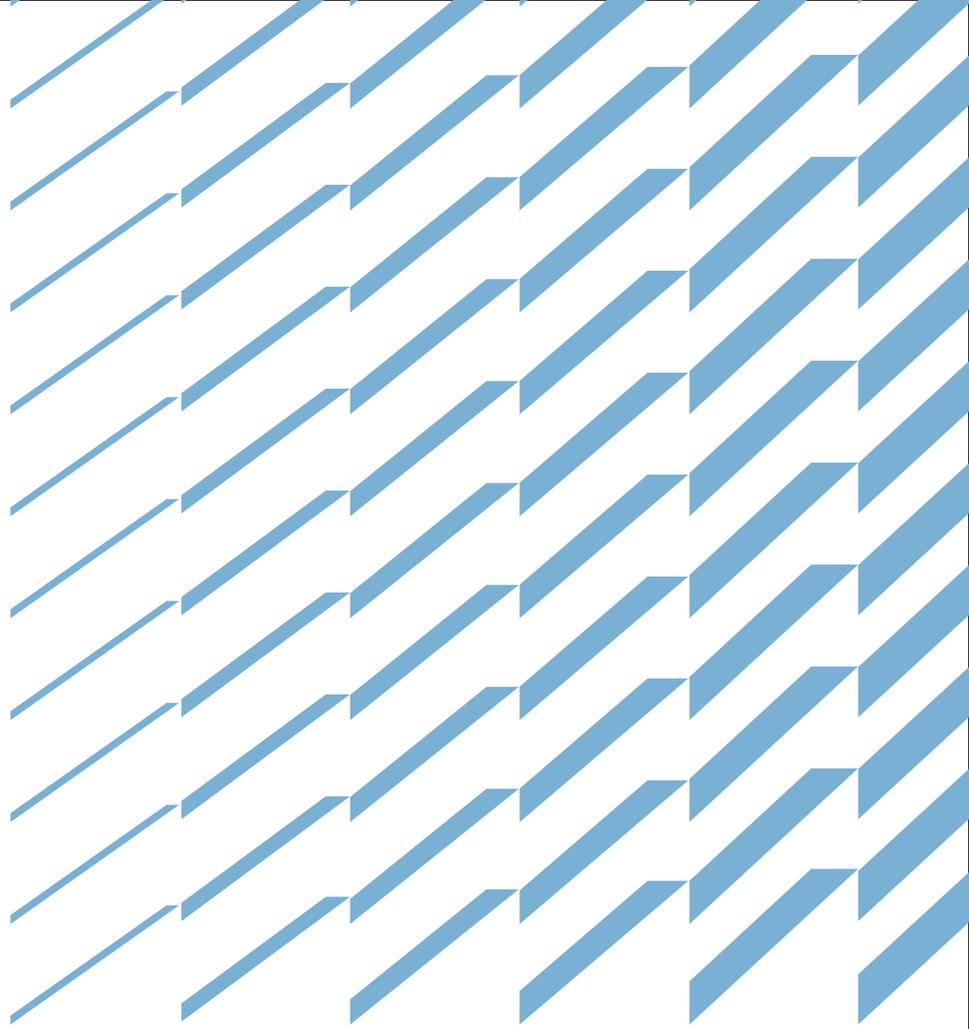
○ (전라북도 어촌맛지도 제작·배포) 전라북도 테마거리와 지역 관광, 숙박, 상점, 맛집 정보를 결합한 어촌맛지도를 제작·배포함.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와 행정조직,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등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어촌맛지도를 제작함.
- 제작된 전라북도 어촌맛지도는 관공서, 주요관광지, 역·터미널, 휴게소 등에서 배포하여 전북도민과 도 시민의 지역 어촌방문을 유도함.

[표 4-1]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조직 추진과제 종합

추진과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략 1: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발전기반 조성전략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	■	■	■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수립	■	■	■	■	■
전북형 수산업·어촌발전 사업 추진		■	■	■	■
전략 2: 전라북도 수산업 발전 지원전략					
전라북도 수산식품 제품·조리법 개발	■	■	■	■	■
친환경·스마트 양식기술 교육·훈련 지원			■	■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경영컨설팅 지원단 운영		■	■	■	■
전략 3: 전라북도 어촌 활성화 지원전략					
전라북도 어촌생활학교 운영	■	■	■	■	■
전라북도 해양교육문화종합센터 운영		■	■	■	■
씨푸드 테마거리 조성·어촌맛지도 제작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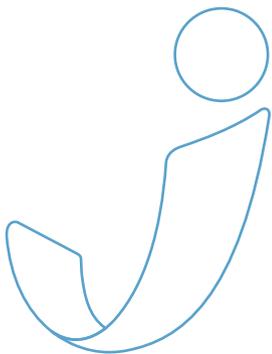
주: 추진과제별 시작시기는 사업별 현황분석과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이 제안함.



제 5 장

정책제언

1. 연구요약
2. 정책제언



제 5 장 정책제언

제1절 연구요약

-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직 활용방안을 제안하여 어촌 활성화와 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데 있음.
- 행정조직 연계 가능성과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유관기관 연대·협력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발전을 도모함.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연계, 협력 효과를 바탕으로 지역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력 제고 기대

1. 수산업·어촌발전 선행연구

- (수산업·어촌 발전정책 지속성 유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규정에 따라 국가기간 산업인 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어촌사회 지속성 강화 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 (전북형 수산업·어촌 발전모델 구상 필요)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에 따라 지역 특화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한 수산업 발전 기반 조성 필요
- (농촌사회 현안문제 해결방안 활용) 인구감소, 어업인력 고령화, 열악한 인프라, 생활 서비스 제공 한계 등 어촌사회 현안문제 해결방안 모색에 농촌사회 선행연구 시사점 활용
-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주체의 연계성 강화, 정책성과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음.

2.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정책사업 성과와 과제

1)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정책사업 성과

- (수산업·어촌발전정책사업 만족도 양호)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정책사업 수혜자 만족도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음.
- (수산업·어촌발전정책사업 이행체계 고도화) 전라북도 소관부서 조직개편으로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수산업·어촌 발전 정책사업 추진 체계를 고도화함.
- (수산업·어촌발전 신규정책사업 발굴과 추진 한계)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 활용사업을 제안하거나 정부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자원 투입에 한계가 있음.

2)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정책사업 과제

- (전북형 수산업·어촌 발전사업 구상 필요) 전라북도 지역 특화자원 발굴과 국가사업화 전략 수립 필요
 - 전라북도의 수산업·어촌 발전 정책사업은 기존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신규사업 발굴·추진으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함.
 - 전라북도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사업의 하향식 구조와 조화로운 상향식 제안사업 구상 지원 방안 모색
- (광범위한 수산업·어촌 발전 사업에 따른 지자체 한계 극복) 현 체제에서 지역 해양수산 현안의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거나, 추진 가능한 실험적인 정책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음.
 - 지자체에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규정에 따른 정책사업 담당자를 지정하는데 조직 규모와 행정구조의 경직성에 따른 한계가 있음.
 -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전라북도에서 이행하지 못하지만 필요한 정책사업에 대한 추진전략 수립

○ **(행정조직과 지원조직 협력방안 모색)** 행정업무 수요에 대응하여 단계적으로 전문인력을 확충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병행해야 함.

- 단기적 수산업·어촌 발전 사업추진과 행정조직 비탄력성을 극복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활용, 관련 조직 간 협력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조직은 설립목적에 따른 분명한 사업범위와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한 정책사업 목적달성과 사업 간 연계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전라북도 어촌 활성화 추진동력 육성)** 어촌뉴딜 300사업 등으로 조성된 어촌 거점 인프라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 주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어촌 거주인구, 수산업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귀어·귀촌 희망자를 적극 유치하고, 귀어·귀촌자가 지역 사회에 빠르게 융화되도록 지원해야 함.
- 전라북도 어촌지역에 유입된 청년, 도시생활인, 은퇴자 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어촌 활력에 기여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3. 사례연구 시사점

1) 안정성·지속성과 창의적 시도

- (공공참여에 따른 지속성 강화)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본 수산업·어촌 및 타 분야의 활력 제고를 위한 구심점은 공공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 참여가 뒷받침됨.
- (법·제도적 완비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동력 확보) 지역 산업 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완비되면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민간의 전문성과 사업화 역량)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영역의 지원 토대에 민간의 전문성과 사업화 역량이 결합되어 시너지 발생 기대
- (지속가능성 담보→ 다양한 창의적 시도) 공공영역 지원 기반에 민간의 창의적 시도가 지속되어 궁극적인 지역 활력 목표 달성 가능
- (민·관 협력체제로 창의성과 지속성 결합) 전문성과 창의성을 보유한 민간과 공공영역의 결합은 상호보완 효과를 유도함.

2)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자립화

- (지역사회 자원 활용) 공간적 개념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화 모델과 확산 과정에 지역사회 농림어업, 문화, 예술, 역사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함.
- (지역인재양성과 전문가 활용) 로컬벤처 운영을 위한 전문가 확보,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단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 특성화 산업·문화 조성) 외부에서 유입되는 로컬벤처, 문화가 지역사회와 융화되어 특성화 산업 체계,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음.

3) 지역자원을 활용한 로컬벤처 지원

- (로컬크리에이터 작업공간과 예산 지원) 로컬크리에이터가 필요로 하는 작업공간, 예산 등 지원제도를 통해서 로컬벤처 사업화 유인
- (다양한 정책사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다양한 정부부처, 지자체 지원사업을 적절히 활용하여 로컬벤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함.
- (로컬벤처 공급망 설계) 로컬벤처의 특성화와 자립을 위해 지역자원 활용, 지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로 공급망 설계 필요
- (지역자원을 활용한 준비 지원) 지역 이해, 지역 주민과 융화, 사업화 성공모델 등 로컬벤처 사업화를 위한 지역공동체의 지원이 성공적 안착을 유도함.

4)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상향식 제안

- (지역 수산업·어촌 현안대응 참여) 지역 수산업자, 어촌 주민이 지역 현안대응에 참여하도록 지원함.
- (상향식 정책제안과 추진 참여) 지역자원과 여건을 고려한 상향식 제안과 직접 추진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

5) 네트워크 역량 강화

- (다양한 주체 연계 네트워크) 농산어촌, 지방소도시 공간적 개방과 다양한 전문 분야 집단의 네트워크가 창의적인 시너지를 유발할 수 있음.
- (고유사업과 연계·협력)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성원 간 고유사업에 집중하되, 사업 간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 유도
-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공동가치 제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결성된 공동체 내부 결속력 제고와 함께 유사한 목적의 타 지역 공동체 간 협력 유도

4.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조직 추진과제 제안

1)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전담지원조직 필요성

- (수산업·어촌발전 관련 조직 업무한계)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을 위한 기존 지원 조직은 관련 법 규정에 의거 명확한 업무범위가 설정되어 있음.
- (전라북도 수산업자·어촌주민 지원)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수산업자와 어촌주민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수산업과 어촌공간 전문성 활용방안 검토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행정조직 지원) 광범위한 영역의 확정된 수산업·어촌발전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영역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함.
- (전북형 수산업·어촌발전 모델 구상)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브랜드 사업을 통해 지역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거버넌스 체계 구축) 수산업·어촌발전 정책사업 만족도를 향상하고 수산업자와 어촌주민 역량 결집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 (수산업·어촌발전 정책사업 이행체계 고도화) 관련법에서 규정한 수산업·어촌발전 신규사업과 행정조직의 비탄력적 특성을 보완하여 이행체계 고도화
- (전북형 수산업·어촌발전 신규사업)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현안 대응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차별화된 전북형 신규사업 발굴 필요

2)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전담지원조직 유형 검토

- 이 연구에서는 공공주도형, 민간위탁형, 민·관협력형 등 각 운영형태별 특성과 주요 사례, 장점과 단점, 단점 극복방안 등을 살펴보았음.
- 전문가 자문의견을 종합한 연구진의 제안은 민·관협력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됨.
- 일부 전문가는 현재 운영 중인 지원조직 운영 활성화와 공간 관점의 연계·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전담지원조직 설립 여부를 결정하자는 견해를 제시함.

3)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조직 추진과제 제언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조직 운영목표는 전라북도 여건에 적합한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 지속성 제고와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함.
- (추진전략 1)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발전기반 조성전략
 - ①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 ②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수립
 - ③ 전북형 수산업·어촌발전 사업 추진
- (추진전략 2) 전라북도 수산업 발전 지원전략
 - ① 전라북도 수산식품 제품·조리법 개발
 - ② 친환경·스마트 양식기술 교육·훈련 지원
 - ③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경영컨설팅 지원단 운영
- (추진전략 3) 전라북도 어촌 활성화 지원전략
 - ① 전라북도 어촌생활학교 운영
 - ② 전라북도 해양교육문화종합센터 운영
 - ③ 씨푸드 테마거리 조성·어촌맛지도 제작

제2절 정책제언

1.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조직 추진과제 기대효과

1)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연계효과 제고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정책사업간 연계·협력효과를 높이고 수산업·어촌분야 관계자 연대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음.
 - 수산업·어촌발전 정책사업은 2021년 기준 약 80건이 어촌공간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각 정책사업의 목적에 맞추어 단위 사업이 추진되며, 궁극적으로 수산업·어촌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므로 단위 사업간 연계효과를 높여야 함.

- 행정조직 중심으로 추진되는 수산업·어촌발전 정책사업에 현장 전문가, 활동가 등의 의견이 결합되어 정책사업 실효성 제고에 기여함.
 - 수산업·어촌발전 정책사업은 정책수혜자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추진되어 단위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만, 다양한 관점으로 성과를 확산시키려는 지속성·개방성 필요
 - 2021년 현재 1인당 약 5건의 정책사업을 담당하는 과중한 업무여건을 고려할 때 각 정책사업 목표 달성과 정책사업 간 연계효과를 도모하는 주체 간 협력 필요

2) 수산업·어촌발전 혁신거점 브랜드 가치창출

- 한국어촌어항공단(한국수산업어촌공단)과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가 협력하는 최초 광역지자체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 한국어촌어항공단이 2022년부터 한국수산업어촌공단으로 개편되어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한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수산업어촌공단의 지역본부가 지역 특성화 발전전략에 대한 고민을 하겠지만 지자체 단위에서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 지역과 중앙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형성할 수 있음.

○ 다양한 정부정책 협력사업 추진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전북형 정책사업모델 구상·추진 주체

- 현재 수산업·어촌발전 정책사업은 대부분 정부와 지자체 협력방식으로 추진되고 유사한 수산업·어촌 환경에 기인하여 차별화에 어려움.
-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 자체 사업을 연계하거나, 지역 특성화 자원을 발굴·결합하여 전라북도 수산업·어촌의 특성화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음.

3) 지역 현장중심의 단기 현안해결과 지속 가능성 제고

○ 단기대응이 필요한 긴급·현안문제가 발생하면 관계 당사자가 모여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함.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국내외 수산업·어촌 분야 전문가와 지역 수산업·어촌 관련 활동가, 수산업자, 어촌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긴급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함.
- 긴급현안 대응전략 모색을 위한 네트워크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면 지역 수산업·어촌 현안 이해와 체계적인 대응·해결에 유리함.

○ 중장기적 관점의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외 어촌공동체 간 연대·협력을 통한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긴급·현안문제에 대해서 현장중심의 단기대응과 전라북도 수산업·어촌의 특성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이행 가능
- 전라북도내 수산업·어촌발전을 위한 지원조직 간 연대를 넘어서 우리나라, 세계적인 연대·협력을 주도하여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함.
- 지역 수산업·어촌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동체 간 협력적 경쟁을 통한 수산업·어촌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

4) 지방소멸 대응 혁신주체 양성

- 다양한 농산어촌 활력주체에 대한 사례연구결과 지방소멸에 지역자원으로 대응하는 혁신공간으로서 어촌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음.
 - 농산어촌의 열악한 인프라와 생활 서비스 수준 열세에 따라 불편함이 높다고 도시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조성한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낮음.
 - 로컬크리에이터로 불리는 혁신창업가는 지역 농산어촌의 역사, 문화 자원 등 독특한 아이টে을 사업화하여 지역사회에 융화,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다양한 로컬크리에이터가 군산시, 남원시, 순창군 등 전라북도 농산어촌, 소도시를 배경으로 창업아이টে을 사업화하는 흐름과 연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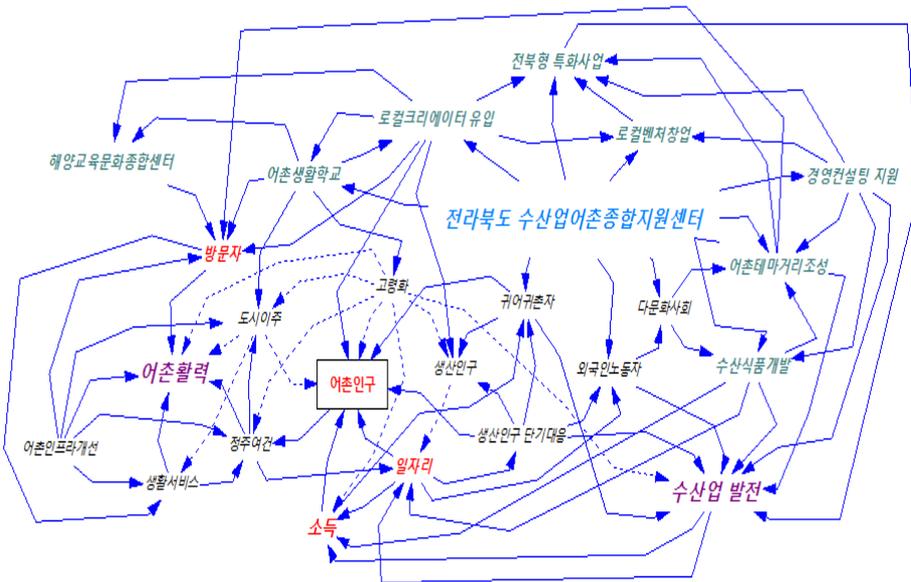
- 지역주민과 로컬크리에이터, 귀촌자 등 다양한 주체가 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성을 높임.
 - 로컬크리에이터의 로컬벤처 창업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이 아닌 창업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이를 뒷받침하는 적정 수준의 소득창출임.
 - 로컬크리에이터가 전라북도 어촌공간에서 다양한 창업아이টে을 사업화하도록 유도하면 어촌소득증대와 지역 활력제고의 혁신주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5)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 순창군 방랑싸롱의 할미넴 프로젝트를 통해 로컬크리에이터의 적정 소득 창출을 위한 활동이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로컬벤처 창업과 운영 활성화는 지역주민의 편의제공과 단기 일자리 제공 등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융화될 수 있음.
 - 로컬벤처의 사업활동은 지역주민의 부족한 생활·문화·여가 서비스를 충족하여 그 자체로 지역 활력 제고효과 창출

○ 로컬벤처에 참여한 인력이 기존 로컬벤처와 연계되는 새로운 사업추진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로컬벤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

- 로컬크리에이터의 로컬벤처가 지역사회에 융화되면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추가적인 자원, 아이템 발굴을 통한 로컬벤처의 연속성이 높아짐.
- 일본 니시아와쿠라 숲 학교, 에이제로 로컬벤처가 소득 평준화를 위한 사업다각화 과정에서 점차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로컬벤처산업 생태계를 형성함.
- 로컬크리에이터가 지역 농산어촌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함.



주: 실선은 양의 인과관계, 점선은 음의 인과관계를 의미함.

[그림 5-1]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전담지원조직 추진과제 기대효과

2. 정책제언

1)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검토

- **(행정자원 한계 극복, 창의적 지원기관)** 이 연구에서 제안한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행정자원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임.
 - 기존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조직 운영 활성화, 어촌공간 관점의 연계·협력 유도 후 필요성이 인식되면 설립·운영 검토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규정된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이행에 행정자원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협력 주체로서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 역할 가능
 - 공무원 1인당 5건 이상의 수산업·어촌발전 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정책사업간 연계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주체로서 종합지원센터 역할이 있음.
 - 민·관협력형태로 종합지원센터가 조직될 경우 공공운영과 민간위탁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으며, 어촌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어촌 활력제고 코디네이터 기관)**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는 어촌 활력제고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관계자의 코디네이터 기관 역할을 수행함.
 - 수산업·어촌발전 정책사업의 단위목적 달성과, 정책사업 간 연계효과를 통하여 궁극적인 어촌 활력제고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코디네이터 역할 필요
 - 지역 수산인과 어촌주민,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행정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원활한 협력을 주도하여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과 전복형 수산업·어촌 특성화 발전전략 구상 가능

-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출범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설립·운영 조례 제정 추진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단위사업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있음에도 종합적 연계·협력을 주도하는 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한 이유는 안정적 운영과 정책성과의 파급효과를 통한 지역 수산업·어촌의 지속 가능성 유지임.
 - 다양한 종합지원센터 유형과 운영방식을 검토한 결과 민·관협력형태의 운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함.

2)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네트워크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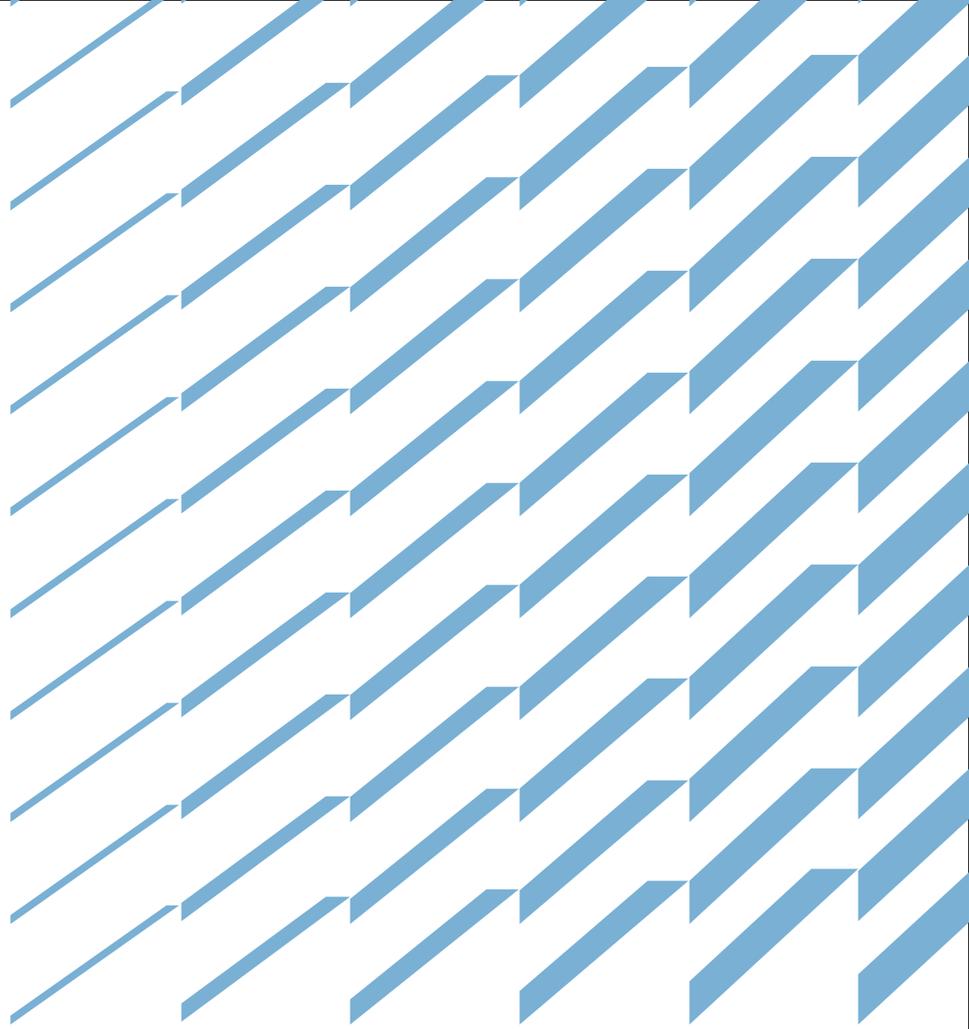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네트워크 구축)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수산업·어촌발전 관계자 네트워크를 구축함.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을 위한 전문가, 활동가, 수산인, 어촌주민, 행정조직 등 다양한 관계자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수산업·어촌 관계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긴급 현안 대응전략을 모색할 수 있고, 중장기적 관점의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특성화 발전 전략 구상을 추진할 수 있음.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네트워크 활성화)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네트워크의 정기적인 협력을 유도하여 전북형 특성화 전략 구상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포럼,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정례화하여 수산업·어촌발전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협의체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 분야 통합 네트워크의 정기적 협력과 분야별 전문집단의 협력을 유도하는 분과모임 등을 적정하게 설계함.
 -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는 13개 기관장 정책 간담회(수출통합지원협의체 전략회의)를 연 1회, 수출 산업분과별 관계자·전문가 간담회를 연 4회(3개 분과 각 4회), 13개 기관 실무자·전문가 간담회를 연 5회 추진하고, 매년 10월경 전체 행사(전라북도 수출페어)를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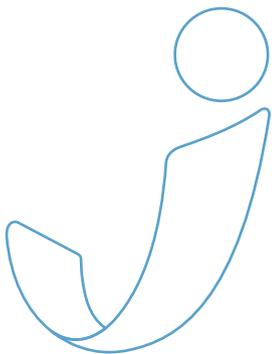
3) 지역주민 참여형 어촌활력 제고 추진

- 농산어촌 활력제고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로컬크리에이터와 지역주민의 융화, 지역주민의 참여, 다양한 사업모델 창출 등의 단계를 거침.
 - 지역주민 참여형 어촌활력은 수산업·어촌발전 정책사업과 관련성은 있지만, 엄격하게 구분하면 마을 활성화와 관련성이 있음.
 - 따라서 현재 새만금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는 수산업·어촌발전 정책사업이 아닌 새로운 관점의 지역주민 참여형 어촌활력 제고를 도모해야 함.

- 전라북도 행정조직상 농축산식품국, 농어촌 종합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모델의 어촌 확산형 모델 구상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먼저 로컬크리에이터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개방, 자원발굴 및 활용 협조 등이 선행되어야 함.
 - 로컬크리에이터의 사업화 모델 추진과정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사업화 모델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지역민의 시간단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
 -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부족한 생활, 문화, 여가 서비스를 로컬벤처가 공급하므로 1차적인 혜택이 있으며, 로컬벤처의 활성화는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 기여함.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REFERENCE

- 김대영, 안지은. (201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운영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김대영, 류정곤, 박상우, 김수현, 이현동, 하혜수, 하현정. (2017).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김대영, 박상우, 이현동, 백진화. (2016). 어촌환경 변화에 따른 어촌공동체 발전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나정호, 김형오, 오병록, 이대성, 고연경. (2017).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 나정호, 오병록, 고연경. (2018).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 나정호, 조승현, 정미선, 이병훈. (2019). 전라북도 수산식품산업 발전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 나정호, 하의현, 정호중. (2021). 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 류정곤, 엄선희, 박상우, 고동훈, 심성현, 오서연. (2019).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류정곤, 박상우, 고동훈, 윤영준. (2019). 수산업·어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마키 다이스케. (2021). 창업의 진화, 로컬벤처와 지역재생. 더가능연구소.
- 박상우, 류정곤, 황재희, 이상규. (2018).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박상우, 황재희, 윤영준, 이호림, 류정곤. (2019).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어촌 구축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21). 슬기로운 뉴로컬생활. STOREHOUSE.
- 이승우, 고민규, 윤영준. (2016).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2021). 전라북도 친환경·스마트 양식산업 육성방안. 2021 삼락농정 수산분과 정책세미나 자료집.
-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2018). 민물고기시험장 내수면 갑각류 특성화 기관 전략 연구. 전라북도.

-
-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2021). 전라북도 수산현황.
- 조원지, 나정호, 박로운. (2021). 전북 여성농업인정책 개선방안. 전북연구원.
- 조원지, 이병훈. (2021).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 운영방안. 전북연구원.
- 조원지, 서환석, 이병훈, 정호중. (2020). 전북 귀농귀촌 정보플랫폼 구축방안. 전북연구원.
- 조원지, 정호중, 이병훈. (2020). 전라북도 사회적농업 활성화 방안. 전북연구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전라북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 전라북도 내수면 어업육성 및 6차 산업화 계획 수립 용역. 전라북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0).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군산시.
- 해양수산부. (2021). 제2차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2021~2025).

정책연구 2022-01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지원조직 활용방안 연구

발행인 | 권혁남

발행일 | 2022년 1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370-4 935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취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